



국민선호미래 연구

박성원·김유빈·정영훈·민보경·송지은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민선호미래 연구

박성원·김유빈·정영훈·민보경·송지은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Ⅰ 연구진 Ⅰ

연구책임자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연구참여자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지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외부 연구참여자

강정인 서강대학교

김연숙 서울대학교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서신혜 한양대학교

서용석 카이스트

손현주 전북대학교

이국운 한동대학교

이병기 카이스트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진종현 공주대학교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마크로밀엠브레인

국민선호미래 연구

인 쇄 2018년 12월 27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 행 인 박 진 (朴 進)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유월애(02-859-2278)

©2018 국회미래연구원

정가 6,500원

ISBN 979-11-967072-6-2 93300

발 간 사

우리 사회에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합의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13개 분야별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가 어떤지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은 대한민국호가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힌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명중),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나침반), 지금 변화가 필요한 개혁과제를 알리는 일이다 (당직항해사). 본 보고서는 이 중 나침반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다른 연구과제인 예측연구는 우리의 미래를 1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10개씩 총 130개의 부문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 각 부문 시나리오마다 4개의 선택지가 있었으므로 이 중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130개의 4지 선다형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일이었으므로 올해에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13개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선택한 선호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구에서는 예측연구에서 도출된 17개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선호를 묻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직접 묻기 보다는 주요 갈림길 17개에 대한 선택을 묻은 것이다. 2019년에는 130개의 부문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하나의 시나리오, 즉 하나의 4지 선다형 질문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론조사 등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미래의 국가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미래를 선호한다는 뜻은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관이 구현된 미래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선호미래 연구의 핵심은 가치관 연구이다. 우리 국민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미래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이를 위해 한국인의 미래선호 가치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를 시행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가치관 연구에 특화해 나갈 생각이다.

본 연구는 박성원 박사의 총괄 아래 민보경 박사, 정영훈 박사, 김유빈 박사와 송지은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민보경 박사는 국민 선호가치연구의 기획과

요약 집필 및 시사점 도출을 맡아주었다. 정영훈 박사는 정책미래의 기획과 실행, 온라인조사 결과를 분석해주었다. 김유빈 박사는 13개 분야의 전문가 선호미래 부분을 발췌하고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송지은 연구원은 관련 문헌 탐색 및 정리, 전문가 회의 내용 기록, 보고서 편집 등을 담당했다.

저자들은 선행연구에 참여한 백승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서신혜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진종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와 이병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생, 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국민선호가치연구를 수행한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정치사상연구소 강정인 교수 연구팀(서울대학교 김연숙 교수, 전북대학교 손현주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우영 교수)과 정책미래의 온라인 조사를 수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익명의 심사자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본원과 국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8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 (朴 進)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질문 및 방법론 7

1. 연구 질문 7
2. 연구설계 및 주요 내용 8

제2장 선행연구 11

제1절 국내외 연구 동향 12

1. 국내외 선호미래 연구 동향 12

제2절 선호미래에 관한 다양한 관점 19

1. 역사적 관점 20
2. 정치문화적 관점 26
3. 지리적 관점 31
4. 사회규범적 관점 37
5. 과학기술적 관점 43
6. 미래학적 관점 45
7. 소결 48

제3장 국민 미래 선호가치 조사 51

제1절 연구 개요 5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3

제2절 미래 선호가치 조사 체계 구축 55

1. 기존 가치 조사 연구의 장단점 55
2.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 설계 56

제3절 예비조사 및 분석결과 64

1. 예비조사 개요 64
2. 영역별 예비조사 주요 결과 66
3. 예비조사 결과 함의 79

제4절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 실행 방안 83

1. 조사 설계 및 항목 구성 83
 2. 표본추출 88
 3. 조사주기와 방법 89
 4. 조사주체 및 조사과정 정리 90
 5. 자료처리 91
 6. 자료의 활용 92
-

제4장 2050년 분야별 전문가 선호미래 95

제1절 분야별 전문가 선호 미래 도출 과정 96

1. 전문가 선호미래 파악의 중요성 96
2. 전문가 선호미래 도출 과정 97
3. 분야별 전문가가 선호한 미래 100

제2절 13대 분야 전문가 선호 미래와 그 특징 103

1.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 특징 103
2. 종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 특징 130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35

제5장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선호 조사 137

제1절 연구의 개요 138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9

제2절 미래정책의 도출 과정 141

1. 미래 정책 도출 과정 141
 2.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미래정책 선정 142
 3. 정책미래 최종 선정 146
-

제3절 국민의 선택	150
1. 조사의 개요	150
2. 미래에 대한 인식	151
3. 17개 분야의 미래 정책 선호도 결과	155
제4절 정책적 의미	174
1. 미래인식 결과 분석	174
2.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도 결과 분석	178
 제6장 결론	 181
1. 앞서간 사람들의 선호미래 모색과 한계	182
2.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 연구의 도전과제	183
3. 전문가가 선호한 미래의 의미	185
4. 국민 선호 정책미래 연구의 과제	185
5. 결론	186
 참고문헌	 189
1. 문헌자료	190
2. 언론자료	199

[표 3-1] 미래 선호가치 조사 설계에 포함된 가치 개념	59
[표 3-2] 조사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와 내용	60
[표 3-3] 예비조사 개요	64
[표 3-4] 예비조사 문항 구성표	64
[표 3-5] 정치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69
[표 3-6]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1)	71
[표 3-7]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2)	72
[표 3-8]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3)	73
[표 3-9]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4)	74
[표 3-10] 사회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76
[표 3-11] 로봇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78
[표 3-12] 조사 문항 구성(안)	85
[표 3-13] 연차별 미래 가치 조사와 관리 체계 로드맵(안)	94
[표 4-1] 13개 분야별 2050년 미래예측 전문가 그룹	97
[표 4-2]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의 개념적 분류	99
[표 5-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143
[표 5-2] 전문가 대상 미래결정정책 도출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명단 ..	144
[표 5-3] 정책과제 판단 기준	145
[표 5-4] 기후변화의 정책과제와 대안 정책과제 및 부작용	145
[표 5-5] 정책미래선호조사의 조상대상후보군	146
[표 5-6] 11개 분야의 30년 후 미래 전망	175
[표 5-7] 미래에 대한 세대별 긍정전망의 비율(%)	177
[표 5-8] 20대와 30대의 30년 후 미래 전망	177

그림 목 차

[그림 1-1] 국민선호미래연구 과정도	9
[그림 2-1] 캔모어 지역의 시민참여 선호미래 도출 과정	14
[그림 3-1] 미래 선호 가치 조사를 위한 단계별 구성	58
[그림 3-2] 본 조사 설계	84
[그림 4-1] 2x2 동인결합시나리오 예시	98
[그림 4-2] 2x2 동인결합시나리오의 선호 경향이 명확한 경우 선호 미래 판정	100
[그림 4-3] 분야별 종합시나리오 예시	101
[그림 4-4]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프레임	135
[그림 5-1] 미래정책 도출 과정	142
[그림 5-2] 과거 및 미래 변화 인식 (n=3,000,%)	151
[그림 5-3]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 (n=3,000,%) ..	152
[그림 5-4] 현재 대비 삶의 모습 변화 예상 (n=3,000,%)	153
[그림 5-5] 30년 후 변화 예상 (n=3,000,%)	154
[그림 5-6] 노동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56
[그림 5-7]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57
[그림 5-8] 한중미일 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58
[그림 5-9] 부동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59
[그림 5-10] 복지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60
[그림 5-11] 지방분권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61
[그림 5-12] 가족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62
[그림 5-13]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미래정책에서 국민의 선호	163
[그림 5-14] 사회갈등 미래정책 관련 국민의 선호	164
[그림 5-15] 인공지능 노동대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166
[그림 5-16] 인공지능 관련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67

[그림 5-17] 미래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168
[그림 5-18] 에너지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169
[그림 5-19] 생명기술에 대한 미래정책의 국민 선호	170
[그림 5-20] 안락사에 대한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171
[그림 5-21] GMO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172
[그림 5-22] 우주개발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173
[그림 5-23] 연령별 분야별 긍정/부정의 정도(원 안의 50 이상은 긍정)	176

Ⅰ 요약 Ⅰ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선호미래상의 부재로 우리사회는 규범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음

- 한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부재하면 다양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거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짐
- 독일의 Industrie 4.0, 일본의 Society 5.0 등은 선호미래상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새롭게 진단하고 대안적 미래를 제시

○ 기존 국내 선호미래연구는 정치적, 산업적 기획으로 단일한 미래만을 제시하는데 그침

- 기존의 전문가 중심, 하향식 미래연구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만 대변하는 단일한(single) 선호미래상을 제시
- 국민을 미래연구의 주체로 참여시키지 않아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시민사회의 변화, 갈등, 파생되는 문제, 필요한 정책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
- 본 연구는 국민에게 복수(plural)의 다양한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미래사회별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미래사회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제시함

○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의 과정이나 조사 방식이 부재

- 한 사회에서는 여러 개혁과제가 도출·실행되나 대부분 국민의 선호 확인 과정을 밟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킴
- 본 연구는 개혁과제와 그 과제의 실행으로 파생될 역효과까지 고려한 미래 시나리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줌
- 정부에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국민은 어떤 개혁과제가 실행될 것인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음

□ 연구 목표

○ 선호미래가 도출되고 선택되는 이론적, 실증적 과정을 제시함

- [연구질문]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역사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 구성요소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선호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론의 과정이나 온라인 조사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가?
* 선호미래 정의: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선호할 것으로 믿는 미래
- 각 개인은 역사적 사례, 현재 사회의 미래비전, 공공가치, 사회변화 가능성, 필요한 정책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가능 미래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가능미래들 중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선호미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밝힘

○ 한국인의 선호미래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

- 선호미래 측정 연구에 앞서 국민이 어떤 공공가치를 선호하는지 조사하는 기반 연구를 수행
 - 국민의 선호가치는 선호미래의 지향점이 됨 (그림 요약-1 참조)
- 2050년 미래 종합시나리오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공론조사 방법을 기획하고 2019년 실행 계획을 마련
 - 미래 종합시나리오는 미래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예측한 사회 전체의 미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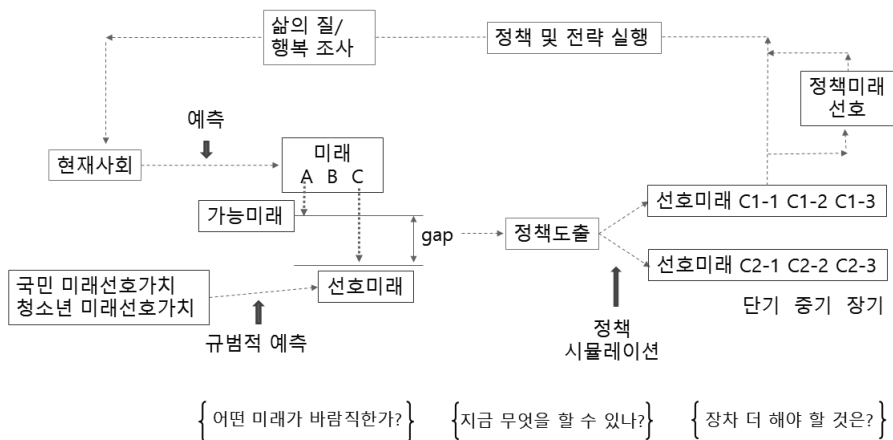
- 선호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어 형성될 미래도 조사해 선호 미래와 차이를 도출
- 분야내 동인결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선호미래를 물어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조사
- 13개 분야의 2050년을 예측한 다양한 전문가그룹에게 종합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세부 미래들에 대한 선호를 판단하도록 요청

○ 국민의 선호를 파악해야 하는 정책미래 조사 발표

- 환경변수 연구팀으로부터 비관 미래에 대응할 정책적 과제와 이들 정책의 역효과까지 고려한 제2의 정책적 대안을 도출
- 비관 미래에 대응하는 정책과 이 정책의 역효과를 고려해 도출한 제2의 정책을 놓고 국민의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 외생(환경)변수 예측과 내생(정책)변수 연구의 연계성 강화

- 외생변수 예측연구로부터 미래 종합시나리오를 받아 이를 대상으로 국민의 선호를 조사
 - 선호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의 요인을 파악
- 국민의 선호를 조사한 뒤, 내생변수 연구팀에 보내 선호미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줌(그림1 참조)



[그림 요약-1] 국민선호미래연구 과정도

□ 연구 추진 방법

○ [전문가, 내부연구진 협업] 역사, 문화,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상 관련 문헌 분석

- 비전, 공공가치, 사회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미래상 문헌 연구
 - 헌법학자, 인문지리학자, 정책학자, 역사학자, 미래학자 등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이들과 회의를 통해 한국인이 선호한 미래환경, 가치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힘

○ [내부연구진, 외부 조사팀 협업] 온라인 조사를 통해 미래정책의 국민 선호 조사

- 우리사회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조사
 - 특히 비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중 가치가 상충되는 정책에 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
 - 정책에 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때에 그 정책에 관련된 부수적 효과/역효과를 충분히 숙지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각 분야의 위탁연구로부터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중요정책과 그에 관련된 역효과 목록을 받아 설문 정책 리스트 확정
-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 선호를 조사
 - 분야별 정책미래에 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해 발표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외부연구팀, 내부연구진 협업]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인의 미래선호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적 설계
 - 정기적으로 국민의 선호가치 파악 및 선택의 변화와 흐름 이해
 - 국민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이론적 틀 구축
 - 가치에 대한 개념규정 및 이론 정리
 - 조사항목의 체계화 및 조사의 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방법론적 틀 구축
 - 세계적 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지표 검토 및 조사방법 비교 분석
 - 장단기적 관점의 분석,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조사방법 구축
 -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로드맵 제시

2. 선행연구

○ 국내외 선호미래 연구 동향

- 1980년대부터 미래학계에서는 가능미래(Possible futures), 실현가능미래(Probable futures),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 연구 시작
 - 미래연구자들은 바람직한 미래는 당대 시민들이 추구하려는 공공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 캔모어 지방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제시
-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미래준비 문헌은 보건, 인문지리, 경영, 의학, 교육, 심리학, 법학, 윤리학, 과학기술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 미래준비에도 예방, 선취, 대비 등 세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

○ 선호미래를 보는 역사적 관점

- 조선시대 유가의 다양한 선호미래상을 살펴본 결과, 민본의 미래를 꿈꾼 공통점은 발견했으나 발현의 과정은 다양했음
 - 정도전은 자립적 농민양산에 집중, 세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세 정화에 주력, 조광조는 향약을 기반으로 도덕적 향촌공동체의 성립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추진
 - 영조는 농민의 조세 부담 완화에, 정조는 형정(刑政)을 정의롭게 구현하는 것에, 실학자들은 토지의 균등분배나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실행에, 정약용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노력함

- 사회정의의 실현, 중산층 육성, 교육기회의 균등, 윤리 도덕 교육, 생태가치의 존중 등은 조선시대 선포미래에 담긴 5대 키워드임

○ 선포미래를 보는 문화적 관점

- 무릉도원형 이상세계가 문화적 측면에서 꿈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 인위적인 정치 행위를 혐오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무위자연을 지향
 - 무릉도원형 선포미래 시도 사례로는 19세기 중엽에 출간된 청구야담의 방도원권생심진 고사, 20세기 초엽 김광수의 몽유록 등에 등장, 둘 다 전란을 피해 들어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
- 무릉도원형 사례에서는 소규모 공동체 중심, 공통된 가치의 지향, 욕구 절제에 따른 질서유지라는 공통점이 발견됨

○ 선포미래를 보는 인문지리적 관점

- 공간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선포미래 논의는 집중과 분산, 장소와 네트워크,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범주로 나뉘 다를 수 있음
- 집중과 분산: 집중은 발전의 내재적 경향이라는 인식에 대항해 오웬의 고립적 이상도시, 하워드의 전원도시 등이 시도됨
- 장소와 네트워크: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도시화를 통해 사라져간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도린 매시는 '네트워크적 장소'라는 개념으로 대안을 제시
- 자연과 사람의 조화: 이중환의 택리지, 퇴계 이황의 산림계거, 자생풍수와 명당론 등은 한국적 생태도시의 전형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연주의적 비전이 될 수 있음

○ 선포미래를 보는 사회규범적 관점

- 체제개혁적 선포미래: 헌법 개정 문제와 연관한 선포미래 논의
 - 헌법의 개정은 모순되기까지 하는 복수적 형태의 다양한 선포미래를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헌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작업임

- 미국의 설립자들은 13개 주들에 대해 민주적 연방주의라는 포괄적 선호 미래를 제시했으며, 연방헌법을 통하여 그것을 구현하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고 제도화함
- 헌법적 제약들을 극복하는 포괄적 선호미래 필요
 - 냉전 체제, 빈틈이 많은 기본권, 정당정치와 왜곡과 대통령 권력의 파행, 사법권의 독주, 자치분권에 대한 방기 등을 극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까지 포괄하는 선호미래 필요
 - 1945년 패전 후 독일은 국민국가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독일 정치사에서 매우 낮은 민주적 연방주의와 법의 지배 원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화

○ 선호미래를 보는 인지적 관점

-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학습의 축적에 따른 미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인지신경과학적 측면의 선호미래임
 - 인간의 뇌에 축적된 정보는 기억 또는 멘탈모델로 설명,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인지하고 선호미래가 결정되는지 규명하는 것이 목적
- 인지적 측면에서 선호미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된 정보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남
- 사회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멘탈모델을 벗어나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자면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참가자들이 가상의 미래를 경험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선호미래를 보는 과학기술적 관점

- 과학은 경제발전의 도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과학기술계는 선호미래를 단일한 상(像)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함
- 한국은 국가-과학의 동맹을 형성하고 서구식 과학기술을 추격해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보를 도모함
- 1990년대말부터 우리사회는 선호미래를 이루기위해 과학기술을 실용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세계를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주의 사회의 문화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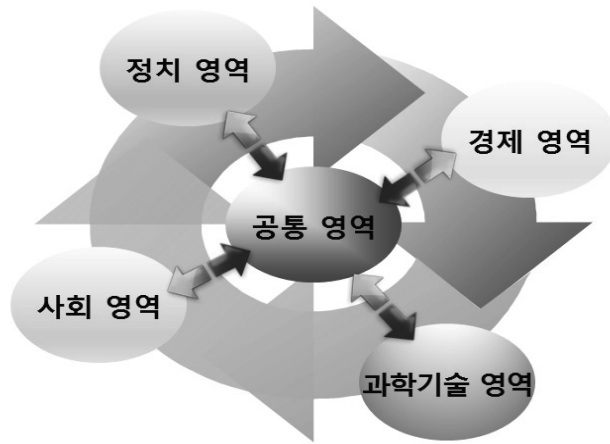
3.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연구

□ 미래선호가치

- 미래선호가치는 현재세대에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사회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답과 해결방안을 제공
- 미래선호가치와 새로운 비전을 향한 욕망은 삶의 본래적 조건
- 미래선호가치는 미래라는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
 - 미래 선호가치는 일반적인 가치와 달리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반영
 - 미래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의 필요, 욕구, 및 위험도 반영
 - 미래의 선호가치는 위계성이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 혹은 궁극적인 가치와 주변적인 가치 혹은 수단적인 가치로 나뉨

○ 미래선호가치의 기본 영역

- 미래선호가치의 기본 영역은 1) 공통 영역, 2) 정치 영역, 3) 경제 영역, 4) 사회 영역, 5) 과학기술 영역으로 분류됨(그림 요약-2 참조)
- 공통의 영역은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으로 구성
- 정치적 영역은 평등과 자유(위계와 연계)의 관계, 중앙집권과 지방분산(분산과 집중)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드러냄
- 경제적 영역은 물질과 탈물질, 성장과 분배의 가치관으로 구성
- 사회적 영역은 개인-집단, 경쟁-협력의 하위영역으로 나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이 갖는 인간관계 및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성향을 나타냄
- 과학기술영역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로봇이 갖는 의미를 분석함



[그림 요약-2] 미래선호가치의 기본영역들

○ 한국인의 미래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 기존 가치 개념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인, 사회(집단), 공공(국가) 영역에서 작동하는 가치를 고려,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의 핵심적인 주제 영역을 구성 (표 요약-1 참조)
- 한국인의 미래상, 미래에 대한 태도 등 공통 미래 가치 영역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 공통 영역'을 설정
 - 미래상, 미래에 대한 태도, 공정성과 공평에 대한 인식 등 현재(2019년)와 미래(2030년, 2050년)의 한국,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등
- 정치 영역: 민주주의 통치 만족(선호 통치 형태), 정치 신뢰, 정치참여, 정치 관심, 정치적 덕목(자신, 지도자), 통일 전망, 대북관계 등
- 경제 영역: 경제 성장, 풍요로운 삶, 인간적인 삶, 직업 선택의 기준, 일과 직장에서의 덕목 등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 대한 가치 등
- 사회 영역: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가 개인 중심 또는/그리고 집단 중심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경쟁과 협력의 가치가 개인(가정)과 집단(지역 사회, 직장) 등
- 과학기술 영역: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기술발전에 대한 저항과 적응의 가치 등

○ 기존 가치조사와 차별성 및 연결성

- 탈서구중심적 시각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를 추출
 -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사회(집단) 가치, 공공가치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고려
- 가치의 갈등, 상충적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대립하는 축을 상정
- 국회미래연구원 13개 분야의 미래 동인 연구와 정책 수요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표 요약-1 참조)
 - 미래정책 수요 전문가 조사 결과,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정책으로 조사된 주제를 중심으로 가치의 영역과 대립축의 개념 설정에 활용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이슈 중에서 빈번하게 일반에 노출되고 있는 주제를 설문 항목에 포함
 - 예: 로봇,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의견 등

[표 요약-1] 조사설계의 주요 구성요소와 내용

대영역	대립축	가치	정책 예시	13대 분야
정치	위계 (자유) 연계 (평등)	· 국가주도/시민주도, · 정부신뢰, 국가신뢰 · 국민직접참여, 대의 정치(투표참여) · 토론문화, 표현의 자유, 인권, · 엘리트(전문가)중시	권력구조 개헌 논의, 북한/통일정책/국제관계, 선거제 개편, 비제도적 참여활성화(시민단체 지원정책),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국민 청원제)	정치/행정 북한/통일 국제정치 사람 정주여건
	중앙 집권 지방 분권	· 권력 추구 · 권위에 대한 복종 · 사회 질서 유지	지방분산 정책 (수도이전), 자치단체의 시민참여(주민참여 예산), 지방자치제도 확대 방안 (예산, 조세, 경찰, 시민안전)	
경제	물질 탈물질	· 경제성장 · 윤택한 생활 · 친환경	부동산 정책(도시개발, 재생), R&D 정부투자, 재래시장 활성화, 원전 에너지 정책	경제 식량/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사람 정주 여건
	성장 분배	· 근면, 검소, 박애 · 창의성 중시 · 경제적 · 성공(성취) 중시, 일중심, · 윤리적 소비, 탈성장	기업/노동(일자리)정책, 복지 정책, 기술과 창업 장려 정책, 블라인드 채용 정책,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대영역	대립축	가치	정책 예시	13대 분야
사회	개인 집단	· 개인 자율과 창의, 개인 삶과 행복 중시, 가족 중심주의, 자기 표현 중시 · 집단가치 순응, 타집단 관용, 직장 내 개인의 자율, 종교적 가치	이민정책, 여성정책, 다문화 정책, 비대면 중심 정책, 여가와 관광 육성 정책, 종교과세 정책	인구사회 사람 정주여건 경제
	경쟁 협력	· 인간중심 사회, 집단신뢰 · 개인 참여 중시, 언론의 자유 보장 · 도전 정신, 경쟁과 성공	교육/입시 정책, 우리 마을 만들기 정책	
과학 기술	편의와 안전	· 전통 중시, 편안한 삶과 개인 안전, 범죄 없는 사회, 인간다운 삶의 가치, 환경, 생태계 유지	로봇 상용화, 자율주행차, 블록 체인, AI 의료 정책	기후변화, IT, BT, 식량/수자원 사람
	적용과 저항			
미래 공통	미래상, 미래인식과 태도	· 미래 지향성, 공정 (공평), 불확실성 회피, 국가 자긍심	국정 철학, 미래정책의 기초	공통

○ 미래선호가치 예비조사 영역별 주요 결과

- 공통영역
 -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68.9%, 반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한국 미래의 부정적 요인 중 경제 위기가 43.9%로 가장 많았고, 정치 불안정(19.4%), 저출산, 고령화(16.5%), 북한, 통일문제(10.8%) 등
 -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일자리 실업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사회갈등 해소와 협력, 과학기술 진보 등의 순으로 응답
- 정치영역
 -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중심 합의제의 중간형태를 선호
 - 통치방법에 대한 견해에서 ‘필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11점으로 가장 높았음
 - 통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음

- 경제영역
 - ‘경쟁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3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음
 - ‘소득은 능력에 따라 차이내기 마련이다’가 10점 만점에 6.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5.85점)가 그 다음이었음
 -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도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가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가장 높았음
- 사회영역
 -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 책임감(23.2%)과 독립심(22.0%)이 20%를 넘어 1위와 2위를 기록
 -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동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음
 - 개인과 집단에 관련된 견해에서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하다’를 가장 높게 응답
- 과학기술영역
 - 인류의 삶을 위협할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구 온난화(39.0%), 지진 등 자연재해(29.5%), 경제위기(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로봇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로봇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3.03점)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

○ 2019년 미래선행가치 조사 실행 방안 제안

-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A안)과 만15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B안)을 고려
- 추가적으로 정책 4개 분야별 100명 내외의 전문가 조사를 구성하여 일반인, 전문가, 청소년 조사 등 3가지 조사결과의 비교 분석도 제안
- 목표 표본 수는 3,000가구로 설정
- 조사 주관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하되, 조사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향후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
- 가치에 관한 연구는 2~5년 주기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
-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
 - 청소년 조사는 소속 학교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별, 학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

4. 2050년 분야별 전문가 선호미래

□ 13개 분야별 동인 결합시나리오 도출

○ 전문가 선호미래 도출 방법론

- 분야별* 5개씩 추출된 주요 동인을 2개씩 조합해 총 10개의 미래시나리오 셋을 도출
 - * 기후/환경,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정치행정, 경제, 국제정치, 북한, 정주여건, 과학기술혁신(IT, BT, ST), 사람 등 13개 분야
- 예컨대 기후/환경에서 한반도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동인이라면, 한반도기온의 상승과 하락을 한 축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와 감소를 또 다른 축으로 4분면을 구성하면 1개의 시나리오 셋 완성
- 10개의 시나리오 셋은 한 분야의 미래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출된 미래상이며 전문가들은 총 40개의 개별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어떤 상황이 2050년 선호되는 미래인지 판별함

○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선호미래

- 한반도 연평균 기온, 극한 기상현상, 미세먼지 농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녹지면적 등이 5대 주요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며, 자원순화사회의 실현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줄고, 극한기상현상이 잦아들며, 녹지면적이 증가하는 모습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완만한 아열대화, 재생에너지 강국, 자원순화사회, 푸른하늘 맑은 공기, 환경 지능정보사회, 생태계 회복 등이 핵심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 [선호 종합시나리오] 포용발전 녹색 순환: 개발면적이 줄어들고 녹지가 늘어나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이상기상이 빈발하는 환경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충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높아지는 미래

○ 에너지, 자원 분야의 선호미래

- 필수 광물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에너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에너지 소비량 변화, 에너지 전환정책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핵융합과 우주 태양광 등 신에너지원 기술의 확보, 에너지 유통 및 시장 구조의 혁신, 에너지 풍족 사회, 필수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1인 1전기차 시대,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강력한 시행,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고효율 소비재 현상의 확대 등이 핵심 선호미래상으로 제시됨
- [선호 종합시나리오] 친환경 에너지 사회: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 구현, 총에너지 소비량 감소가 달성된 사회

○ 과학기술분야: IT(정보통신기술)의 선호미래

- 3D 프린팅의 제조업 대체,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 VR(가상현실) 기술의 성숙도, 블록체인 탈중앙화 여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성숙도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3D 프린팅의 일상화, 각종 몰입형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등장,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조업 공급망사슬관리로 글로벌 협업 강화,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의 개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노동력 대체, 원격근무의 일상화로 주거공간의 다양한 활용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선호 종합시나리오] IT KOREA의 글로벌 비상: IT 범용기술의 확보 정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우려되나,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과 기술통제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지식사회로 순조로운 전환이 이루어진 미래

○ 과학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의 선호미래

- 노화 극복, 새로운 개체의 조작, 증강인간기술, 포스트휴먼의 등장, 의료기술에 따른 질병 완치 여부가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고성능 의료기기 및 치료체의 발달, 재생의료 및 원격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 연장, 복제기술과 인간 배아세포의 유전체 편집기술의 발달, 노인의 기준이 9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질병완치시대의 개막, 인간배아유전체 편집으로 선천적 질환예방, 국가 차원의 안정된 의료관리 시스템 정착, 새로운 의료기술에 관한 사회적 합의체 운영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선호 종합시나리오] 진시향의 꿈의 시대: 의료기술 및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하여 노화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질병 완치의 미래

○ 과학기술분야: ST(우주기술)의 선호미래

-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 우주자원 개발, 우주 전쟁 가능성, 우주 환경의 위협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급진적 발전,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우주전쟁의 위험성 저하, 우주환경위협의 완화, 적극적 우주개발 시대의 개막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인공위성 르네상스, 우주자원 공동탐사, 우주평화시대, 적극적 우주개발, 상호발전 등이 핵심 선호미래상으로 제시됨
- [선호 종합시나리오] 우주강국, 대한민국: 우주 국제협력이 증진되고, 한국이 우주개발을 적극적 실행하는 미래

○ 식량, 수자원 분야의 선호미래

- 식량안보, 국민 식습관 변화, 수질오염 추세, GMO(유전자변형) 기술 발전, 담수량 변화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식량안보 위협의 완화, 국민 식습관의 고급화, 자연 하천의 복원, 풍부한 수량, 대체 육류 소비, 높은 식량 안보, 친환경식품 소비 증가, 프리미엄 푸드의 수출 증가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수질은 잘 관리되어 물 걱정이 없고, 식량안보의 걱정 없이 프리미엄 푸드를 수출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식량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미래상 등이 제시되었음
- [선호 종합시나리오] 첨단농업기반 수출국가: 기후변화 영향이 크지 않아 수자원 확보가 수량·수질 측면에서 원활하고, 식량 분야 기술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첨단 농업 시대로 이행된 미래

○ 국제 전략 분야의 선호미래

- 미중 관계,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중국의 민주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제기구의 역할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국제 전략 분야는 외생성이 강해 선호미래를 특정하기보다는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를 찾아내는데 노력함
 - 미국과 일본의 현상 유지라는 상황에서 중국의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면서, 국제기구의 중재역할이 영향력을 가질 때 한국이 가장 유리한 국제관계 대응책을 실행할 것으로 제안되었음
- [선호 종합시나리오] 평화공존모델: 미국 우위의 국제체제가 지속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 또한 강화되어 국제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는 미래

○ 북한 분야의 선호미래

- 김정은 등 백두혈통 정치권력의 유지 여부, 비핵화 프로세스, 대외환경,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북한사회의 다원화 여부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북한 분야도 국제정치처럼 외생성이 강해 선호미래를 특정하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요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춤
 - 예를 들면 백두혈통 정치권력의 공고화, 북한 사회의 다원화, 비핵화, 경제 개방을 통한 북한의 우호적 대외환경 등이 한국사회의 시각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음
- [선호 종합시나리오] 북한체제의 전환: 개혁개방의 성공이 정치체제의 변화 열망으로 나타나 반체제 운동을 넘어 민주화에 성공한 미래

○ 경제 분야의 선호미래

- 1인당 GDP, 소득격차, 경제 세계화, AI(인공지능)의 인간노동 대체, 암호화폐의 유통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성장 지속, 소득격차 해소, 세계화 진전, 일자리 유지, AI의 제한적 노동 대체, 암호화폐의 전면적 유통, 개방형 경제의 지속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격차가 완화되어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 등이 선호하는 미래상으로 제시되었음
- [선호 종합시나리오] 혁신형: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을 적시에 관리해 나가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미래

○ 정주여건 분야의 선호미래

- 거주 유연성(직장과 주거의 분리), 이동거리(교통수요), 수도권 집중, 거주 밀집성, 거주 안정성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주 유연성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면면대면 접촉의 감소가 빚어내는 원격근무 증가, 스마트 첨단 보안, 방재 시스템으로 안전한 거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일자리 분산, 저밀도 단독주택 거주 확산, 가상공간의 확산 등이 결합한 미래상이 선호됨

-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원격 근무 또는 가상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거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첨단기술, 안전·재난 인프라 및 관련 제도적 지원 등을 선호미래로 제시함
- [선호 종합시나리오] 포용, 협력 기반의 기술혁신 수용도가 높은 사회: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하며 전문직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된 미래

○ 휴먼 분야의 선호미래

- 인간의 수명, 종교의 소멸 여부, 과학기술의 통제 가능성, 인간 개체성의 확장, 가족의 해체 여부가 5대 주요동인으로 제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인간 수명의 150세 시대, 기본적인 종교의 지속, 전통적 가족 구조의 유지, 편리한 삶, 과학기술의 제어력 확보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휴먼 분야의 주요한 선호 미래의 모습은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종교, 윤리체계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미래가 선호미래로 제시됨
- [선호 종합시나리오] Human에서 Humen으로: 인간의 수명이 현실적인 영생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명공학기술 및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호모 사피엔스와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미래, 새로운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미래상

○ 인구사회 분야의 선호미래

- 가족중시문화, 사회적 관계(수직적, 수평적), 현재와 미래의 상대적 가치, 사람 간 직접 대면의 필요성, 경쟁 대 협력 등이 5대 주요동인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가족 형성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가 운영되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하는 경향,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어 사회적 평등 가능성이 증가하는 모습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인구사회분야의 결합 시나리오에서 선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쟁과 협력, 가족형성과 나의 삶,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등은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선호 종합시나리오] 다중의 시대: 각 개인이 서로의 자유를 마음껏 얻으면서도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정치적 제도적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연대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미래

○ 정치행정 분야의 선호미래

-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도, 지방자치요구, 전자직접 민주주의의 등장 등이 5대 주요 동인으로 도출됨
- 이들 주요동인을 2개씩 묶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탐색한 결과, 중산층 증가로 이념적 대립의 약화, 다문화인구의 원활한 사회적 통합, 정부의 문제해결력 상승, 지방자치제 강화, 전자민주주의 발달, 문화적 다양성 존중, 사회적 관용도 상승 등이 결합된 미래가 선호됨
-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고, 중앙과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며, 전자민주주의의 확대로 국민의 정치 관심 및 참여도가 획기적으로 증가 되는 사회를 선호미래로 제시함
- [선호 종합시나리오] 공고화 시나리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공고화 되고 사회통합이 달성되는 미래

5. 정책미래와 국민 선호 연구

□ 정책미래 도출 과정

○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 13개 분야별 146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도출된 미래동인질문을 제시한 후, 전문가별로 정책과제 제시 요청
- 총 1,137개의 정책과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도록 요청

○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로 도출된 1,137개 정책과제를 놓고 14명의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실시해 정책의 영향력, 시급성, 불가역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요청
- 이런 과정을 통해 263개의 미래정책이 도출되었고, 이중 145개가 국민의 선호를 물어야 할 과제로 논의되었음
- 연구진은 145개를 중복된 것 제거, 현안성 제거, 정책의 수준이 낮아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 등을 제거한 후 최종 17개 미래정책을 도출

○ 국민 대상 정책미래 온라인 조사

- 2019년1월18일부터 1월22일까지 만15세~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 조사 실시
- 응답자가 17개의 분야의 정책미래에 관해 205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읽고 그러한 미래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 중의 하나를 고르도록 함
(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동이민 확대 vs. 노동이민 억제

○ [결과1] 미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응답자들은 과거에 경험한 변화 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크기/정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
- 기후/환경,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사람(인간관계), 정치/행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음
- 북한, 과학기술,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
- 전반적으로 20대의 미래인식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50~60대는 대부분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2] 정책미래 국민선호조사

- 17개 미래정책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 정책 선호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된 정책은 우주개발, 식량자원정책, 안락사,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노동정책 방향 등 총 9개였음
- 정치갈등, 빅데이터의 활용, 가족제도, 지방분권 정책은 선호에 차이는 보였으나 어느 한 정책이 60% 이상의 지지는 얻지 못하였음
-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환경정책은 정책 간 선호도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 이민정책은 유일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선호가 엇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음

[표 요약-2] 13개 분야, 17개 정책미래별 국민의 선택

구분	정책 ①	정책 ②	GAP (절대값)
이민정책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	이민 정책 확대	-
	49.0	51.0	2.0
환경정책	플라스틱 제품 소비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 투자 확대	-
	53.6	46.4	7.2
외교안보정책	한-중 우호, 한-미동맹 강화	미-중 사이에 중재자/균형자	-
	46.3	53.7	7.4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 제한적 적용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	-
	45.5	54.5	9.0
복지정책방향	선별복지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	국민 전체 대상 보편복지 실현	-
	54.7	45.3	9.4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불필요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
	56.3	43.7	12.6
가족 제도	현재의 가족형태만 인정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	-
	40.1	59.9	19.8
빅데이터의 활용	빅데이터 악용 가능성 차단	빅데이터 적극 활용	-
	61.7	38.3	23.4

정치갈등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	다원성,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
	37.4	62.6	25.2
인공지능 노동정책방향	인공지능 개발 통제 정책 불필요	인공지능 조절·통제하는 정책	-
	35.8	64.2	28.4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제한적 활용	인공지능 적극 확산	-
	66.5	33.5	33.0
인프라 정책	생활기반시설 유지·확충	인구 적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축소	-
	66.6	33.4	33.2
기후와 에너지 정책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
	66.9	33.1	33.8
인간 존엄과 생명기술	생명 기술 엄격한 규제	생명 기술 적극적 정책 지원	-
	67.9	32.1	35.8
안락사	안락사 허용 반대	안락사 허용 찬성	-
	27.5	72.5	45.0
식량자원 정책	GMO작물 재배·수입 제한	GMO작물 재배·수입허용	-
	75.1	24.9	50.2
우주 개발	우주개발 소극적 투자	우주개발 적극적 투자	-
	21.1	78.9	57.8

○ 정책적 시사점

- 국민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사회변화를 바라고 있음
 - 혈연 중심 가족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자거나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에 대한 선호가 재산권 보장에 대한 선호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 이를 대변함
-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변화는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 과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으니 점진적 에너지 전환이 낫다는 선택 등
-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
 -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 생명기술을 규제하자거나, 유전자변형생물(GMO)의 재배와 수입도 제한하자는 의견 등

-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징 중에서 20대의 선호는 그 경향과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에너지정책에서 20대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한 보수적 의견을 보였으나, 빅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견을 나타냄

6. 결론

□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선호미래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도됨

○ 선호미래 구현에 노력한 과거세대의 재발견

- 조선시대로 한정해도 정도전, 세종, 조광조, 영조, 정조, 실학파 학자들은 민본의 미래를 꿈꾸고 각자 처한 조건에서 선호미래 실현에 노력
- 사회정의 실현, 중산층 육성, 교육기회의 균등, 윤리 도덕 교육, 생태가치 등은 조선시대 선호미래 주도층이 추구한 주요 과제였음
- 정치가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대동사회형 공동체, 무릉도원형 이상세계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음

○ 장소, 사회규범, 인지적 관점에서도 선호미래 재조명

- 집중과 분산은 예나 지금이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한국적 생태도시의 시도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음
- 헌법 개정은 복수적 형태의 다양한 선호미래를 타협시키고 공존하도록 규범과 권력체계를 바꾸는 작업이기에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 인지적 관점에서 선호미래는 한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노력이며,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선호미래는 합리적 사고를 확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해되어야 함

□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 연구

○ 미래선호가치는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세대의 선호를 반영

- 미래선호가치 조사는 현세대에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함

○ 국회미래연구원의 13개 분야 예측과 정책과제를 반영한 가치조사

- 13개 분야의 미래동인과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가치조사를 설계해 미래 예측과 전망이 반영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청소년 대상 미래선호가치 조사 계획

- 국내 최초로 10대 청소년 대상 미래선호가치 조사를 기획해 미래세대가 적극적으로 미래형성에 기여하고 참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13개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선호미래

○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선호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고

- 멘탈모델을 확장하는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13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호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을 진행
- 기존의 시각으로는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선호미래를 도출하고 실현의 방법을 논의한 데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음
- 막연한 선호미래를 논의하기보다 선호미래가 형성될 조건과 환경을 연구하면서 선호미래 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도 의미있는 작업임

○ 분야별 선호미래의 공통 가치

- 포용, 순환, 회복, 친환경, 고효율, 균형, 협력, 안전, 상호의존, 개혁과 개방, 사회안전망, 기술혁신, 연대, 통합 등의 가치들은 분야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선호미래는 분야의 동인으로 형성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동인과 결합되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미래와 국민의 선택

○ 국내 최초로 13개 분야별 정책미래 도출

- 우리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13개 분야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를 국민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
- 특히 비관적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과제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도출한 정책과제가 야기할 역효과까지 고려한 대안적 정책과제 도출
- 정책과제와 대안적 정책과제는 둘 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정책들이면서 가치와 목적이 상충해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런 미래정책을 사회적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으로 판단해 어떤 정책이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지 확인

○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

- 통상 정책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나 본 연구는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음
- 국민은 미래정책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미래의 기회나 위협에 대해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음
- 13개 분야별 미래전망에서 국민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대처가 필요
- 정책미래 조사를 통해 국민은 포용성과 형평성이 실현되는 미래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윤리적 위협을 고려해주길 바라고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질문 및 방법론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국민선호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국민의 희구(希求)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 국민이 바라는 미래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연구로 밝혀낼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미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할지 모른다.

선호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 선호를 실현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것일까. 이른바 미래에 대한 능구(能求), 즉 선호미래를 가능케 하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모색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서 살게 될까. 이런 질문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우선, ‘누가 선호하는 미래인가’가 문제다. 10대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인가, 70대 노인이 원하는 미래인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사나 변호사가 원하는 미래인가,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농부가 원하는 미래인가. 이처럼 거주지역, 직업, 성별, 연령에 따라 실현되기를 원하는 미래상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물질적 풍요라는 기준도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다. 누구는 매월 100만원만 있어도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반면, 누구는 매월 1억원을 벌어도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다.

선호미래상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편리한 삶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 향유한 편리성이 다른 어떤 곳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하면 편리한 삶은 반쪽짜리 선호미래가 될 것이다. 현세

대가 누리는 편리성,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운용하면서 얻은 값싼 전기는 현재 세대에게 이롭고 유용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환경적 부담이 된다.

선호미래는 보편성보다는 정치성을 띤다. 누군가의 선호는 누군가의 비선호가 되고, 누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선호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이나 대결의 결과로 얻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호미래를 밝힌다는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선호미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업인 또 다른 이유는 개인적 차원의 선호미래와 조직적 차원의 선호미래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내가 원하는 삶과 우리사회의 시민들이 원하는 삶은 다를 수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 시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가구별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찬성하지 않는다(제5장 정책미래 참고). 사회적 바람과 개인적 바람은 이렇듯 어긋날 때가 종종 있다.

이렇듯 개인이 추구하는 선호미래와 집단이 추구하는 선호미래의 상이함은 국민의 선호를 언제 물어보느냐에도 그 결과가 달라짐을 암시한다. 어느 미래의 시점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때에 국민이 느끼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이때 앞서 질문한 개별 전기료를 인상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자는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국민이 이 의견에 찬성할지 모른다. 국민의 선호를 묻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다.

선호미래연구에 대한 다양한 쟁점은 본 연구가 풀어야 할 과제이므로 차근차근 논의하기로 하고, 서론에서는 선호미래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선호미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바람직하다고 믿어지는 미래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은 미래연구의 주요 목적을 드러내는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선호하는 미래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주체로서 ‘국민’을 부각하려고 한다. 국민선호미래라는 이 연구의 제목이 시사하듯 국민이 미래를 형성하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국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특히 미래연구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의사결정자들의 하향식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국민의 참여는 공청회나 설문지 응답 등 의견표출이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왔고, 그나마도 참고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집단은 전문적인 지식에 기대어 좀 더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견에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 당장의 세금 인상이 두려워 선별복지를 원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인구감소율,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보편복지를 주장할 수 있다. 어느 의견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더 적절한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힘들다. 결국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책의 변경은 결국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호미래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또한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선호미래는 시계(視界)가 장기적이고, 단수형(single)이 아닌 복수형(plural)이어서 이런 미래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공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우리사회는 선호미래상이 부재(不在)해 규범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 우리사회는 ‘선진국 되기’라는 명확한 선호미래상이 존재했다. 일제수탈과 한국전쟁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을 선호미래로 정하고 매진한 결과, 한국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와 거대한 규모의 경제적 성공을 일궈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을 모방하려고 했던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도 경제성장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일궈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사회는 선진국 되기라는 선호미래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성장은 거의 모든 사회적 규범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누구도 경제적 성장의 가치를 부인하지 못한다. 문제는 사회 여러 곳에서 물질적 풍요, 경제적 성장이라는 미래비전이 균열되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격차가 벌려놓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성장이라는 사회적 목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사회의 유일한 선호미래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적 성장을 넘어설 더욱 매력적이고 국민의 공감을 일으킬 선호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지향하는 선호미래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대안을 위한 논의가 부재하면,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기회로 활용하거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선호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변화의 바람이 순풍인지, 역풍인지 판단할 수 있다. 순풍과 역풍을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의 발전은 지체 또는 정체되고,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협성은 커진다.

정부나 정부출연 연구원 등이 발표한 선호미래연구에 한정한다면, 이런 연구들은 정치적, 산업적 기획성이 짙었다.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하향식으로 도출된 미래비전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단일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박병원 등(2012)은 지난 20년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미래 비전 보고서가 동일한 현황 진단에 원론적 수준의 정책 과제 도출을 반복했으며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 양상이 정권 말기마다 비슷한 내용과 구성을 지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을 미래연구의 주체로 참여시키지 않아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시민사회의 변화나 갈등, 파생되는 문제, 필요한 정책의 도출 등에서 충분한 논의

가 없었던 것도 기존 선호미래 연구의 문제점이었다.

본 연구는 2018년과 2019년 등 2년 동안 진행된다. 전체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복수(plural)의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하고 미래사회별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미래사회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2019년 말에 이르러야 달성될 것이다. 그에 앞서, 2018년 연구는 선호미래의 정의, 선호미래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 선호미래의 구성요소, 각 분야별(기후변화부터 인구사회까지 총 13개 분야) 전문가 그룹이 선호하는 미래상,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미래정책 연구, 국민이 선호하는 가치 연구 등을 진행한다. 각 연구별로 분절되어 보이지만, 이 다양한 연구들은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호미래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목적’으로 수렴된다.

제2절 | 연구 질문 및 방법론

1. 연구 질문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선호미래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인지적 요소는 무엇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선호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론의 과정이나 온라인 조사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가? 부연하면, 각 개인은 역사적 사례, 사회의 미래비전, 공공가치, 필요한 정책, 사회변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미래상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가능미래들 중에 자신이 살고 싶은 선호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년간의 연구계획을 세워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미래예측을 종합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도출할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기후변화/환경, 에너지/자원, 과학기술(IT BT, ST), 식량/수자원, 정주여건, 정치/행정, 북한, 국제정치, 경제, 인구/사회, 휴먼(인간의 수명과 정체성의 변화) 등 13개 분야에서 2050년의 미래를 탐색했다. 해를 넘겨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은 13개 분야를 종합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해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상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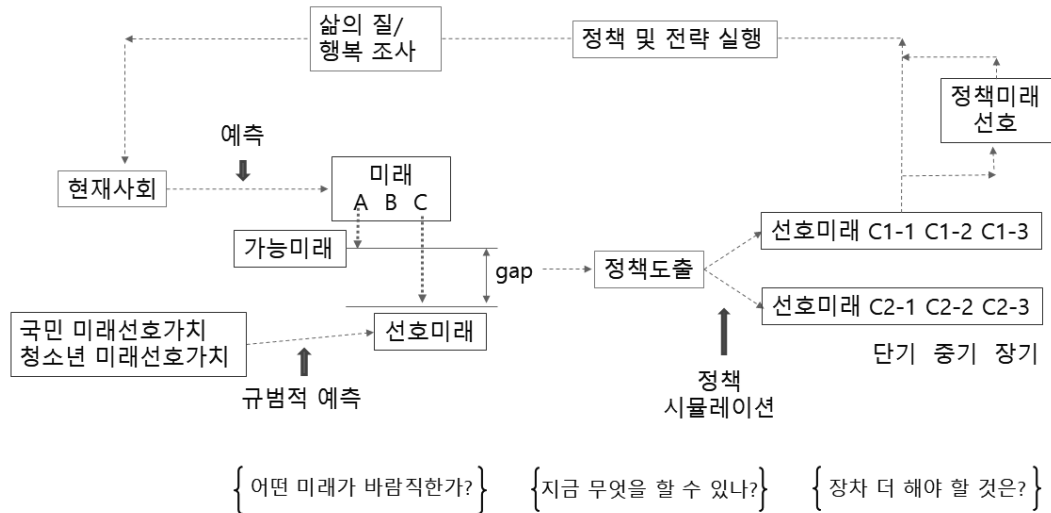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호미래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탐색할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조사 방식이나 소수의 인터뷰만으로는 국민이 선호미래를 찾을 수 없다. 정책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누구의 선호미래인지, 왜 그 미래의 실현을 바라는지, 또 다른 대안적 미래는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의논해서 선호미래를 선택했는지, 그 선호미래가 실현되면서 발생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균형잡힌 선호미래가 도출된다. 이는 단기간에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국민선호미래 연구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다음의 연구설계 및 주요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보자.

2. 연구설계 및 주요 내용

국민선호미래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림1-1은 국민선호미래연구의 부문별 연구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낸다.

먼저, 2018년 기반연구로 진행한 국민 미래선호가치는 국민이 어떤 가치를 미래에 선호할 것인지 예측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가치는 선호미래상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이 시민참여, 권위에 대한 복종, 사회질서유지 등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맞이할 미래사회는 중앙집권형 또는 지방분권형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또, 전문성과 효율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미래는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미래와 다를 수 있다. 거주집중을 목표로 형성될 선호미래는 거주의 분산을 목표로 형성될 선호미래와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이 근면, 검소, 경제적 성공, 윤리적 소비, 탈성장 등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는 성장중심으로 갈지, 분배중심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이 선호하는 가치를 통해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는 선호미래상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는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그림1-1에서 보이는 ‘청소년 미래선호가치’는 2019년에 연구할 프로젝트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선호가치 조사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판단했다.



[그림 1-1] 국민선택미래연구 과정도

두 번째, 국민선택미래연구는 말 그대로 다양한 미래사회의 모습 중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1-1에서 A, B, C라는 다양한 미래상을 두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A, B, C (혹은 D까지)라는 종합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선호를 물을 예정이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분야별 선택미래상을 도출하는데서 멈추기로 한다. 분야별 선택미래상은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선택미래다. 국민에게 선택미래를 묻기에 앞서 전문가 그룹은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왜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들은 2019년 국민에게 선택미래를 제시할 때,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본인이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한다. 전문가 그룹이 선호하는 미래는 제4장에서 소개한다.

선택미래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국민은 A, B, C (혹은 D까지)라는 미래에서 ‘현재대로 간다면 가장 가능할 법한 미래’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가 도출되고, 두 미래에는 간극이 발생한다. 이 간극을 매꿀 정책은, 다시 말하면 선택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된다.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도출한 정책들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제시될 것이지만, 그 정책들은 여러 조건에 따라 그림

1-1에서 제시하듯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전환사회라는 목표지점은 같지만, 에너지전환을 이뤄내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 ‘모로가도 서울’이라는 속담이 있듯 서울로 가는 방법은 다양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정책들은 의사결정자들이 결정하는 관례를 따라왔다. 국민선호미래연구는 국민에게 선호를 물어 어떤 정책이 우선해서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앞서 강조했듯,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은 국민의 생활세계이다.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에게 선호를 물어보자는 것이다.

13개 분야별 미래예측 연구는 선호하는 미래를 위한 지향정책, 피해야 할 미래를 위한 회피 정책, 외생성이 짙은 미래를 위한 적응정책을 내놓는다. 이 정책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정책이다. 미래정책이기 때문에 그 실현 과정에서 어떤 역효과가 있을지도 예상해야 한다. 특정 미래정책이 실행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미래정책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가치의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있으나 생태보존의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 어린 청소년부터 나이든 노인세대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미래정책의 경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국민의 선호를 물어볼 것이다. 단순 의견을 묻는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미래사회를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제공한 뒤, 국민이 가급적 균형잡힌 관점에서 미래정책을 선택하도록 설문 설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제5장에서 다룰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다룬 연구를 종합하며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할 것이다.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국내외 연구동향

제2절 선호미래에 관한 다양한 관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1절 |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외 선호미래 연구 동향

미래학계에서 선호미래를 연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60년대 미래학계가 탄생했을 때, 당시 미래를 연구한다는 학자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치 이 세계는 거대한 기계 같아서 자료를 입력하면 결과값이 도출되는 뉴토니안(Newtonian)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때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Bertrand De Jouvenel(1967)처럼 미래는 열린 시공간이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공간이어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1980년대 들어 미래학계는 미래가 단선적인(linear)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미래는 단수(single)가 아닌 복수(plural)로 다양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것, 의지의 발현으로도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Roy Amara(1981)는 미래연구의 접근 방법으로 3가지 ‘P’를 제기하면서,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s), 실현가능한 미래(Probable futures), 그리고 선호하는 미래(Preferable futures)를 제시했다. 여기서 선호하는 미래는 사회과학적 또는 수학적 방법론이 동원되는 가능/실현가능 미래와 달리 규범 중심이 접근이나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예측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Wood와 Christakis(1984)는 한발 더 나아가 선호미래는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s)라고 재정의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는 당대 시민들이 추구하려는 공공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미래는 규범적 미래예측(normative forecasting)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 다가올 문제는 해결하고 기회는 활용하는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호미래의 예측 뿐 아니라 선호미래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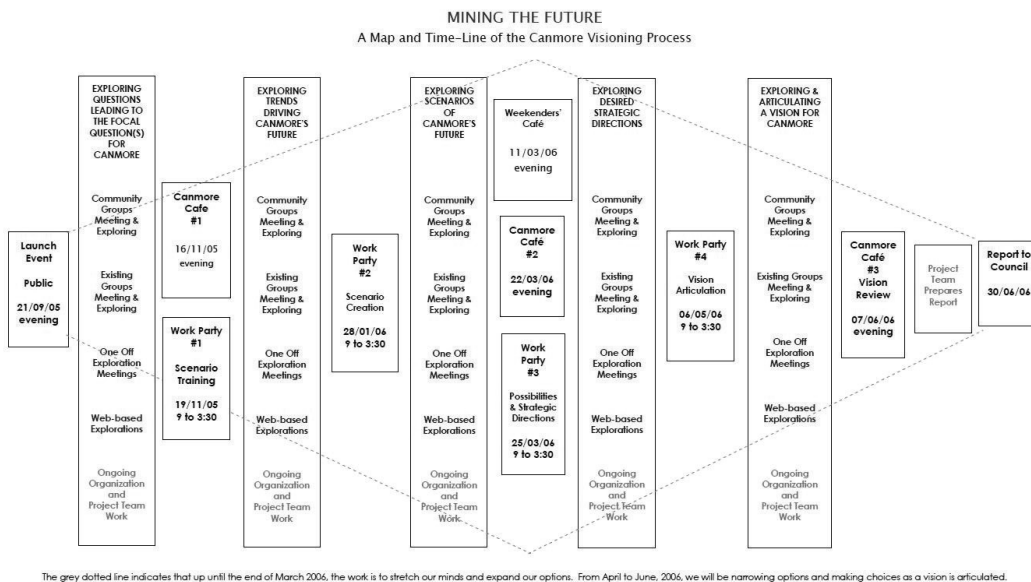
선호미래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선호하는 미래는 아니다. 많은 시민이 동의하면서도 현재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동의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미래다. 그렇다면 선호미래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일까. 많은 연구들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캐나다의 캔모어(Canmore)지역에서 실시한 선호미래 도출 프로젝트를 살펴보자(Town of Canmore, 2006; 박성원 외, 2015에서 재인용).

캔모어라는 지역은 과거 광산을 개발하던 곳이었으나, 1980년대 말 동계 올림픽이 이곳에서 개최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역이 발전하자 타지역 주민들은 물론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캔모어로 들어왔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했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적 변화와 갈등을 경험했다. 이를 계기로 캔모어 시장은 2005년 캐나다의 미래연구자들에게 현재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연구자들은 캔모어 지역의 선호미래를 도출하기 위해 10개월에 걸친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했다. 그림 2-1은 이들이 시민들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미래를 탐색하고, 그 미래들 중에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연구자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질문을 이끌어내고(exploring questions),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탐색했으며(exploring trends driving Canmore's future),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이 맞이할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exploring scenarios of the future), 전략을 이끌어내며(exploring strategic directions), 미래의 비전을 실천할 방법을 도출했다(articulating a vision for Canmore).

이 과정을 수행한 미래연구자를 인터뷰하고, 문헌을 분석했던 박성원 외(2015)는 “캔모어의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것을 정점으로 그림 2-1 다이아몬드가 넓어졌다가 좁혀지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고, “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미래의 캔모어 타운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눈여겨볼 점은 각 단계별 실행에 앞서 미래연구자들이 시민 지도자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 시민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교육받은대로 또 다른 이웃 시민들에게 정보와 방법론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캔모어 선호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선호미래상의 도출로 끝내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고, 정부 공무원이 되기도 하면서 당시 도출한 선호미래가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했다(박성원 외, 2015).



[그림 2-1] 캔모어 지역의 시민참여 선호미래 도출 과정

출처: Town of Canmore(2006), p. 8, 박성원 외(2015), p. 126에서 재인용

국민선호미래 연구에서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문헌들은 ‘미래 준비’를 논의한 것들이다. 선호미래가 내포하는 가정은 선호미래를 도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선호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래준비(future preparedness)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많은 문헌들이 있다(예를 들면, Penn, 2011; Anderson 2010; Rank et al., 2015; Hoffman & Muttarak, 2017 등).

미래준비를 다룬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 인문지리, 경영, 의학, 교육, 심리학, 법학, 윤리학, 과학기술 등 다양하다. 이들 분야에서 미래준비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로는 progress, development, control, response, emergency, spill, disaster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가 사용되는 문맥을 찾아보면, 갑작스럽지

만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의 필요성, 더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획 등이 나타난다.

미래준비를 다룬 문헌들은 미래의 바이러스 창궐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미래 재난 대비 등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예측을 담고 있다. Anderson(2010)은 미래준비를 미래계산, 미래상상, 미래실험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미래계산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추세를 기반으로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이다. 미래상상은 특정 그룹이나 조직원 등이 예측하고 바라는 미래상을 도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끝으로, 미래실험은 특정 사건을 가정하고 이 사건이 벌어질 상황을 예측해보는 활동이다. 미래실험에는 게임이론, 역할 놀이(role playing), 시뮬레이션 등이 활용된다.

Anderson(2010)은 미래준비에도 예방(precaution), 선취(preemption), 대비(preparedness) 등 세가지가 있다고 언급한다. 예방은 모든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에 따라 사회적, 윤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막으려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기술개발을 잠시 멈추는 기술 모라토리움 선언을 들 수 있다. 선취는 가능성은 낮아도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미래사건에 대비하는 활동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선제공격을 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공학적(geoengineering) 접근법이 그 예다. 마지막으로, 대비는 사건이 발생한 후, 취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따라야 하는 비상계획 매뉴얼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들은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앞서 캔모어의 사례가 선호미래상을 실현하는 적극적이고, 선호미래 지향의 정책 도출이었다면, 미래준비를 담고 있는 문헌들은 다양한 가능성, 기회, 위협에 대비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선호미래연구는 실현하는 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발생할 돌발변수에도 대응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미래는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 외에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과 태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한다.

국민선호미래연구를 다룬 문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미래 문해력(future literacy)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Miller, 2015; Poli, 2015; Park, 2018). 문해력이란 통상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래문해력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며, 그 미래가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역량을 말한다.

특히, Park(2018)은 미래문해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이 미래예측의 과정에 참여하면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자기효능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 Park(2018)은 이런 자기효능감을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확장해 개인이 미래예측 과정에 참여하면, 미래의 다양한 변화나 결과가 불확실한 변화에서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적응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미래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간주하며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거나 통제하면서 바람직한 대안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안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서도 자신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다.

국민선호미래연구는 국민을 미래예측의 과정에 참여시켜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가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이런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변화를 예상하고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지속가능해지며 진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미래문해력 향상, 미래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인식 등도 꼭 필요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선호미래 연구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비전을 국가 전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맞춰졌다. 과학기술처가 1971년에 펴낸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 21세기위원회가 1994년에 펴낸 ‘21세기의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등은 국가적 단위에서 미래연구를 수행한 사례연구들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펴낸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와 노무현 정부가 펴낸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등으로 국가적 수준의 미래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선진국의 미래비전을 한국에 이식하거나 끼워 맞추려 하였던 기존의 미래 연구들은, 한국 안 다양한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비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미래 연구가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별 비판없이 수용해왔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사회과학자이자 미래학자 Ashis Nandy(1996, 2006)는 미래연구의 본질은 다양한 비전을 찾아내고 비전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 비전을 도출하기보다는 현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선호미래 비전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Polak(1973)은 The Image of the Future에서 모든 인간은 현재의 세계(the present world)에 사는 시민이자 동시에 상상의 세계(an imagined world)에 존재하는 시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세상을 택해서 사는 존재라기보다 둘 사이에 존재한다. Polak(1973)의 주장 중 흥미로운 것은 상상의 세계와 현재 세계의 대립으로 새로운 미래가 태어난다는 관점이다. 인간의 의식이 존재하는 두 가지의 다른 세계는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다.

앞으로 맞이할 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두 세계는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는 미는 힘(push)으로, 상상의 세계는 당기는 힘(pull)으로 작용한다.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과 조건이 나와 사회를 특정한 미래로 밀어낸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가치는 미래에서 한 사회를 끌어당긴다.

50대 이상의 한국인은 미래 비전이 한국사회를 어느 특정한 미래로 끌어당겨본 경험에 있다. 1970년대 초 시작되어 범사회적 운동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새마을이란 근대의 다른 말인데, 처음에는 농촌의 현대화를 의미했으며, 서구 선진국형 도시처럼 한국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조건으로는 서구 선진국을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당시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이라는 강력한 목

표로 한국사회를 거침없이 이끌었던 사건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사회를 밀어댔던 현실의 힘은 산업화, 대량생산/소비사회 구축,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였다. 또 그 당시의 한국사회를 끌어당겼던 힘, 다시 말해 상상의 세계는 선진국 비전이나 자본주의 흡수 통일이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위(상상의 세계)와 아래(현실의 세계)에서 적절하게 작용해 한국사회는 큰 규범적 혼란 없이 사회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 후기 산업화의 적응 문제, 빈부의 격차 확대 문제, 에너지 부족의 위험, 환경문제의 심각성 등에 노출되어 많은 현실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새로운 욕구들이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눈에 띄게 보이는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 통일에 대한 열망, 선진국이 되자는 비전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 현실적인 문제 적응에 정신이 없을 뿐이다. 바쁘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는 모르는 셈이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라고 할까.

미래학에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를 인지적 불확실성과 규범적 불확실성으로 구분한다. 인지적 불확실성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 원인으로 사회의 역동성, 미래에 대한 개인들의 서로 다른 예측, 트렌드의 지속적인 단절을 꼽을 수 있다. 사회의 역동성으로 인해 2010년 아랍의 봄이나 2002년 한국의 대선은 예측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 사건이다. 구성원들이 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 규범, 가치, 방향 등에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규범적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호하는 미래상이 변화하고 있다거나, 이해관계자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이다.

국민선호미래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논의하지 못했던 국민 참여적 선호미래 도출, 선호미래를 추동하는 다양한 동인들이 탐색, 선호미래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가치 파악, 선호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들과 정책들 중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정책 도출 등을 다룰 것이다. 요약하자면, 추상적인 선호미래상 연구가 아닌,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요소부터 실현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거론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 선호미래에 관한 다양한 관점

제2절은 선호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려고 한다.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선호하는 미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일러준 적도, 알려준 적도 없지만 각자 선호하는 미래상이 있다. 우리가 꿈꾸는 선호미래상에도 족보가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옛 이야기에서 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 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어 선호미래를 구체화할 수도 있고, 종교에 따라 선호미래상이 특징지어질 수 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선호미래상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인문지리적 연원이 담겨있다.

선호미래를 떠올릴 때 우리가 무의적이든 의식적이든 고려하는 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것뿐만이 아니다. 미래는 어느 시간부터를 미래라고 하는 것인가, 미래사회는 사회구성원 중 누가, 어느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하는가, 미래의 변화는 누가 일으켜야 하는가, 미래는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는가 등의 인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더 못할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미래를 인식하는 태도는 이처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태도에 따라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은 달라진다.

우선, 우리는 역사, 정치문화, 지리, 규범과 법, 과학기술, 미래학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선호미래에 대한 정의와 실현의 주체 및 방법론, 그리고 국민선호미래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6개 분야 외에도 선호미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는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술분야나 건축, 도시설계, 경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연구의 시간과 예산 그리고 지면의 한계 등을 이유로 우선 6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선호미래를 상상하

고 도출하며 특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와 저항, 현재적 시사점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국민선호미래가 해를 거듭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선호미래의 예측과 실현, 도전과제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역사학자 백승중, 국문학자 서신혜, 인문지리학자 진종현, 법학자 이국운, 미래학자 서용석과 이병기, 그리고 과학기술사학자 최형섭 등이다. 이들은 각자 2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써주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요약해서 게재하기로 한다.

1. 역사적 관점

과거사회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preferable)’ 미래상은 존재하였다. 그때도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선호미래’가 있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우리가 21세기의 ‘선호미래’를 정의할 때, 기왕의 역사적 경험은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조선사회의 유가적 지식인들이 추구한 ‘선호미래’를 다뤄보자.

1) 조선초기의 선호미래

조선왕조가 건국된 이래로 다수의 학자 관리와 왕들이 자신들의 시대조건에 부합되는 미래상을 탐구하였다. 정도전과 세종을 비롯해 조선왕조 초기의 지도자들은 성리학의 토대 위에 조선왕조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념 및 제도적 장치를 고안했다.

그들은 100년도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토론을 거쳐, <경국대전>이라는 왕조의 기본법전을 확정했다. 이 법전에는 그들이 추구한 선호미래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과전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영농 육성정책이 눈에 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법전에는 교육제도와 인재선발정책도 뚜렷이 명기되었다. 지방의 향교와 서울의 4학 및 성균관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제도와 문무과를 비롯한 각종 과거제도도 정해졌다.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되어 조선초기에는 능력위주의 관료체제가 완비되었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기능도 우수했다고 평가된다. 한 마디로, 건국 초기의 선호미래상은 500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왕조는 성리학 국

가로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였다.

국초의 성리학적 이상주의자들은 성리학을 국시(國是)로 채택하였다. 그들은 이를 강화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오랜 토론 끝에 〈국조오례의〉를 제정하여 조선의 예제(禮制)를 세웠다. 또, 〈삼강행실도〉를 반포함으로써 지역과 신분 및 성별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따라야 할 유교적 윤리규범을 뚜렷이 세웠다. 이로써 성리학의 이념과 실천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파고들었다.

2) 조광조 등의 지치운동

당시 현실사회의 모순은 적지 않았다. 왕조의 통치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15세기 후반부터 지배층의 부패와 전횡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훈구파의 권력독점이 문제였다. 이에 조선사회는 왕조초기의 성리학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자 개혁정치가들이 조정에 등장해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광조 등이 벌인 지치운동(至治運動)¹⁾이 바로 그 현저한 실례였다.

조광조 등은 불과 3~4년만에 권좌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러한 혁신운동은 선후미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들은 〈향약(鄉約)〉과 〈소학(小學)〉을 널리 보급하기에 힘썼다. 이것이 후배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에 16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조광조 등이 강조했던 언관(言官)의 기능도 후대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군신공치(君臣共治)라는 성리학적 이상에 다가서기 위한 제도적 방편이었다. 요컨대 조광조를 비롯한 16세기 초반의 이상주의자들이 소망했던 대로 공론정치는 조선사회의 중요한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조광조 등의 개혁정치는 참혹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결국 조선사회는 그들이 바랐던 방향으로 변화한 셈이었다.

1)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늘의 뜻이 펼쳐진 이상 세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사상.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실학자들의 선호미래

조선사회의 역사적 흐름은 외부의 침략으로 요동치기도 하였다. 16세기말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조선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사회는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국가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17세기 후반이 되자 국가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재야에서는 다수의 실학자가 출현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깊이 논의하였다. 유형원을 필두로, 이익, 박제가, 정약용, 홍대용, 김정희에 이르기까지 등장해 각기 저마다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사회개혁의 방향을 거론하였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두 가지였다. 한편으로, 유형원을 비롯한 일부 실학자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편에 주력했다. 다른 한편으로, 박제가로 대표되는 북학파들은 조선을 더욱 개방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4) 조선 후기 기득권층의 선호미래

그 시기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지배층도 ‘선호미래’를 추구하였다. 그들도 조선사회가 나아갈 바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17세기에는 김장생과 김집 부자가 앞장서 예학(禮學)을 주창하였고, 이것이 노론의 실력자인 송시열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예법의 준행(遵行)을 통해 무너진 사회기강을 재확립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했다.

또, 조정대신들 가운데는 좀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다. 가령 이원익과 김육 등은 민생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김육은 동전을 주조하여 경제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5) 영조와 정조의 선호미래

성리학에 능통했던 왕들도 일종의 ‘선호미래’상을 꿈꾸었다. 영조와 정조가 대표적이었다. 그들이 각종 세제를 개편하고, 사법상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의 왕과 대표적인 학자

들이 추구한 선후미래는 양적으로 대단히 풍부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많은 지면이 요구된다.

6) 요약

조선시대 유가의 다양한 선후미래상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얼핏 비슷해 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상당히 다른 미래상을 추구했다. 각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이 달랐고, 정치, 철학적 입각점도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차이점들이다. 그들은 예외 없이 송나라의 대학자였던 주희가 집대성한 유교, 즉 성리학을 신봉했다. 그렇더라도, 사상적 강조점은 시대마다 달랐다.

한 가지 사례만 검토해 보자. 그들 모두가 민본의 정치를 꿈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시대마다 초점은 달랐다.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은 자립적 농민을 양산하는데 집중했다. 덕분에 조선 초기에는 자립농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자 세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세 정의에 주력했다(전분6등, 연분 9등의 공법). 조광조의 관심사항은 달랐다. 그는 〈향약〉을 기초로, 도덕적인 향촌공동체의 성립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보았다.

한편, 사회기강이 약화된 조선 후기의 통치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영조는 농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고심했다. 그리하여 균역법과 영정법을 제정했다. 정조는 다른 문제를 고민했다. 즉, 고문을 폐지하고, 형정(刑政)을 정의롭게 구현하는 것, 백성의 불평불만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실학자들의 지향점은 또 달랐다. 유형원은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고(균전법), 이익은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 상한제를 구상했다(한전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처럼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변화된 시대환경에 발맞춰 ‘민본’의 본질을 저마다 다른 곳에서 찾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적 여건은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적 이상을 구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기성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생긴 각종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였다. 게다가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누적되어 많은 모순이 쌓였다. 또한, 조정에 당쟁이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조정은 사분오열되었다. 정치적 리더십이 불안정해지자, 과감한 제도개혁은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 초기에는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 세종은 시각장애인 등을 구호하기에 힘썼다. 왕은 관청에 딸린 여성 노예(官婢)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정해, 그들이 낳은 신분 때문에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게 했다. 조선 후기에는 영조가 소농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군포(軍布)도 크게 줄였다. 또, 정조는 법의 적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정도전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제시한 개혁안은 사회적으로 억눌린 백성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의 노력은 백성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이 과전법을 시행한 근본 배경이다. 정도전은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관리들은 절대로 지주가 되지 못하게 만들 계획까지 수립했다. 여러 실학자가 토지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실상 정도전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유교적 이상은 그들 모두의 지적 공동자산이었다. 중산층이 든든해야만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지배적인 사상적 흐름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금이라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되풀이했다.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소수의 인재만이 요직에 등용된 것도 고려시대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왕조의 법에 따르면, 평이상의 재능 있는 남성들에게는 무상교육이 보장되었다. 향교와 성균관 등은 기숙사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 교육시설이었다. 서당과 서원 등의 사적 교육시설도 원칙적으로는 평민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시민은 조선시대의 교육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마치 양반 외에는 아무런 교육기회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평민 남성들도 교육의 기회를 실제로 향유하였다. 사실상 모든 마을에 서당이 운영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삼강오륜으로 요약되는 유교적 도덕을 반복해서 학습하였다. 이런 교육은 비단 공적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독서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실시되었다. 심지어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각종 소설(예: 심청전, 흥부전) 등에서도 유교적 덕목과 가치가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신분과 성별 및 지역을 초월하여 허다한 충신, 효자 및 열녀가 배출되었다. 조선시대는 역사상 보기 드문 ‘윤리의 전성기’였다. 동일한 시기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보아도 조선처럼 윤리도덕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주입된 사회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다. 그들은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꾀하였다. 그 때문에 산업발전과 도시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빚어질 정도였다. 천지자연과 인간 및 모든 사물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유가와 도가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 등장한 동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상적 흐름이었다.

이상에서 간단히 설명한 5가지 개념이 조선시대의 ‘선호미래’에 담긴 키워드였다. 그런 개념 덕분에 당시 사회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과장은 금물이다. 조선 시대에도 사회정의의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교육의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유지된 측면도 있으나, 후기에 올수록 권력은 외려 특정 가문에 집중되었다. 일반 평민들의 윤리적 의식수준은 높았으나, 지배층의 타락과 부정부패는 나날이 심해졌다. 또한, 생태적 가치에 충실을 기하였다고는 해도 농경지의 개척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은 결과, 18세기 이후에는 환경재앙도 적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가의 선호미래가 액면 그대로 당대의 현실로 구체화된 적은 없었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들은 조선사회에서 사회정의를 망가뜨리는 주역이었고, 중산층을 약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 역시 불평등한 방향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개인적/집단적 욕망을 추구하느라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조선시대에 비해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회정의는 아직까지도 미완의 장이다. 중산층도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교육기회 역시 형식적으로는 균등하지만, 지나친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실제로는 불균등에 가깝다. 우리사회의 건강을 담보하는 윤리와 도덕은 여간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업화와 도시화에 매달린 나머지 한반도의 생태계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미세먼지로 이제는 숨쉬기도 어렵게 되었다. 지나친 일반화가 되고 말 염려도 없지 않으나.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현실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선호미래를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간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의 꿈은 우리에게 계도 여전히 유효한 선호미래다.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우리의 미래상을 실천할 집단은 과연 누구일까? 현대 한국사회는 조선시대에 비해 훨씬 다원적이다.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여러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환경 또는 생태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도 있고,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사회적 윤리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많다. 사교육을 추방해 교육을 질적으로 개혁하려는 세력도 존재하고,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체적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언론이 도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언론매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득권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 역할을 매도할 일은 아니다.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감시역할이 강화된다면 언론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선호미래를 선택하는데 국회의 몫은 더욱 크다. 현재의 국회도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대의정치의 붕괴를 노골적으로 거론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거듭된 비판과 요구가 있다면, 여러 정당은 본래의 정상기능을 다소나마 회복할 것이다. 정상화된 한국의 정치세력이 언론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2. 정치문화적 관점

앞서 역사적 관점에서 언급한 유교적 선호사회 외에도 우리의 선조들은 무릉도원형 선호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이종은 등²⁾이 이런 구분을 차용하여 동양의 유토피아를

태초의 신화공간인 산해경형, 외부와 떨어진 소규모 이상공간인 무릉도원형, 신선만 사는 신국 삼신산형,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한 대동사회형으로 나눈 바도 있다. 실제 인간 세상에서 추구된 이상공간 모델은 대동사회형과 무릉도원형인데, 이 두 가지 시도가 조선시대 문헌에 남아 있다. 여기서는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무릉도원형에 집중해 탐색하기로 한다.

1) 무릉도원형 이상세계

정치관료층, 양반사대부층의 이상사회 구상이 대동사회론으로 귀결된다면 일반 백성의 이상사회 구상으로 무릉도원형 유토피아가 드러난다. 무릉도원형 유토피아는 노자에서 시작되어 도연명(365~427)의 「도화원기」에서 구체적으로 명명된 이상세계이다. 인위적인 정치 행위를 극단적으로 혐오하여 이로부터의 차단을 시도하며 자연과 함께 사는 무위자연을 지향한다.

(이상적인) 나라는 (국토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다(소국과민(小國寡民)). 온갖 기물이 있어도 쓰지는 않는다. 백성은 죽음을 중히 여기고 멀리 이사하지 않는다.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들은 결승문자를 다시 쓴다. 그 밥은 달고 그 옷은 아름답다. 그 거처는 편안하고, 그 풍속은 즐겁다.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이웃 나라가 뻗어 바라다 보어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³⁾

이상세계 구상에서는 어떤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무릉도원형 이상세계 구상은, 지배영역을 넓혀가고(曠土) 백성의 수를 많게(衆民) 하여 최종적으로 천하를 다 소유하기를 추구했던 춘추전국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노자의 이상사회는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소규모로 함께 하는 공간이 되었고, 인위적 정치권력에 대한 극단적 거부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형식이 되었다. 도연명도 마찬가지로 동진시기의 혼란기에 살면서 도가사상에 경도되었고, 이에 따라 「도화원기」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무릉지방의 한 어부가 가보았다는 이상공간은 세상과 인연을 끊어 바깥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외진 곳에서 모두 함께 일하며 사는

2)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논집』28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6.

3) 『道德經』80장: 小國寡民, 使有什佰之器而不用, 使民重死而不遠徙, 雖有舟輿, 無所乘之, 雖有甲兵, 無所陳之, 使人復結繩而用之, 甘其食, 美其服, 安其居, 樂其俗, 隣國相望, 雞犬之聲相聞, 民至老死不相往來.

소박한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노자나 도연명의 이상세계 구상은 책과 작품의 전달과 함께 우리나라에 지식으로 전래되었으나, 단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다. 정치권력의 횡포와 전쟁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세계[別世界]를 추구하게 되었다.

2) 조선시대 무릉도원형 이상공간의 특성

앞서 노자와 도연명의 경우처럼 국가 권력의 학정이 심하고 전쟁의 위협이 강해질 수록 무릉도원형 이상세계를 꿈꾼다.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이후 고려말기까지, 조선시대 임병양란 이후에 특히 이런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세상을 피하여 구축한 이상세계를 뜻하는 무릉도원형 유토피아는, 이름만 달랐을 뿐 그 시도나 종류도 많았다. 청학동(靑鶴洞), 오복동(五福洞), 이화동(梨花洞), 이어도(離於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들의 이야기가 잡록, 설화집에 자주 보인다. 필자가 확인한 공간만도 20여 가지가 넘는다. 이름만 다를 뿐 이들은 현실을 피해서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구축한 무릉도원형 이상사회이다.

누가 이런 이상세계를 꿈꾸는가? 정치적 세력과는 거리가 멀고 그 정치나 전쟁 등으로부터 수탈이나 피해의 대상이 되는 약자가 꿈꾸는 이상세계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직계·방계 가족 단위로 삶의 거처 자체를 옮겨버리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세상과의 차단성을 높이려고 숲길, 암석, 작은 동굴 등 다양한 차단 장치를 둔다. 지리산, 묘향산, 태백산 등 깊은 산 속에서 무릉도원형 사회를 보았다는 내용이 많은 것도 세상과의 차단성 때문이다.

인위적 정치력을 피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궁벽한 산속’에 구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자연으로부터 소출을 얻어 산다. 농사, 물고기 잡기, 나무 심기, 산짐승 잡기, 양봉 등의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적 생활을 한다. 극히 일부의 물건(대체로는 소금)만 외부로부터 들여올 뿐이다. 예컨대 『어우야담』⁴⁾에는 법환 스님이 묘향산에서 발견했다는 이상공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

4) 『於于集』, 「於于野談」5권, 萬物篇, 天地(경문사, 1979), 241쪽.

기에서는 “산비탈에 밭을 두고, 나무를 베지 않고 다만 나무껍질을 여러 척 되게 벗겨 나무를 말라죽게 해서 집을 짓고, 나무 사이에 흙을 돋우어 곡식을 파종하였다고 나온다. 대체로 절제하고 쌓아두지 않으므로 자연이 내는 생산은 풍부하며, 지속된다. 외부로 교류를 끊고 자연에만 의지하기에 과도한 생산과 소비, 훼손 혹은 개발은 지양한다.

『청구야담(靑邱野談)』권3에 「방도원권생심진(訪桃源權生尋眞)」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고양 땅에 살다가 8촌 가량의 친인척 30여 호가 살던 곳을 등지고 모두 깊은 산으로 들어와 살았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 들어온 후 세상과 왕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권진사에게 이 공간을 소개해 주는 이가 노인이고 그의 증조부대에 왔다고 하였으니 150~200년 정도 지속된 공간임을 생각할 만하다. 소금만 밖에서 사올 뿐 그곳에서 일하고 산짐승을 먹으며 양봉을 해서 산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한 데 모여서 책을 읽으며, 소 한 마리가 나르는 소금이 이 사람들의 일 년 쓸 양이며, 양봉 통도 주관하는 사람이 없이 나누어 쓴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개인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동 소유 혹은 공동 사용으로 이어지는 사회이다. 곡식머리가 무겁게 달려있고 잡은 고기도 크다는 것으로 보아 자연의 풍성함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다. 권생도 단 한번 구경 했을 뿐 나중에 다시 찾아가려 해도 길을 못 찾았다는 방식으로 그 비밀스러운 속세 차단이 유지되었다.

무릉도원형 이상공간에 대한 구상은 20세기까지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호남지방의 포의로 지내던 김광수(金光洙: 1883~1915)가 1907년에 쓴 「몽유록」⁵⁾이 이런 공간이 나온다. 이 작품은 소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원세계 등의 인물과 청이나 일본이나 구미의 여러 나라들 상황이 사실적으로 섞이면서 당대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 글이다. 번역본으로 약 200쪽 분량의 이 작품에서 앞부분 약 70쪽 정도가 무릉도원형 이상공간이 주진촌 이야기이다. 주씨와 진씨가 전란을 피해 들어와 수백년동안 이어져 당대 약 500여호 3000여명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⁶⁾

5) 박종훈·서신혜 역주, 『만하몽유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참조.

6) 이상 무릉도원형 이상공간의 연원과 공간원리 등에 대해서는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2010 참조.

3) 무릉도원형 이상사회의 시사점

무릉도원형 선호미래는 소규모 공동체 중심, 공통된 가치 지향, 욕구 절제에 따른 질서유지를 특징으로 한다. 공통된 가치 지향이 나머지 둘을 이끄는 힘이다. 공통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통된 가치 유지를 위해 개인의 욕망 추구만을 일삼지 않고 절제하며, 또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가 그 가치에 따라 서로를 권유하고 견제하고 교육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간다.

현재사회의 대도시를 소규모 단위로 흡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공동의 가치 지향을 마련하는 일은 할 수 있고, 할 만한 일이다. 국가 단위의 가치 지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작은 단위에서 가치 지향 마련도 권장할 만하다.

무릉도원형 선호미래에서는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 공동체 질서가 유지된다. 영국 경제전문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The Global Liveability Report>에서 매해 살기 좋은 도시(<The Global Liveability Report>)의 순위를 발표한다. 이 기관에서 세계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25%, 건강·보건 20%, 문화·환경 25%, 교육 10%, 인프라 20%. 또 클레이턴 앨더퍼(Clayton P. Alderfer)의 ERG이론에서는, 인간의 동기 요인을 말하면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생존욕구(음식, 공기, 임금, 작업조건), 관계 욕구(의미 있는 사회적, 개인적 인간관계 형성에 따라 충족), 성장욕구(개인의 성장, 생산적, 창의적 공헌에 의해 충족).

살기 좋은 도시 리포트와 ERG이론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안전성, 건강·보건 부분은 생존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문화, 교육은 성장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는 교집합인 듯하다. 핵심은 둘을 비교했을 때, 관계 욕구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현대 사회의 가치 부여가 덜 되어 있음에 대한 반증이며, 이것이 물질문명 사회의 문제와 연결된다.

현대인의 주요문제가 관계성(가족, 공동체)의 파괴에서 온다. 우울증, 폭력, 맹목적 물질추구 등이 모두 그렇다. 현대는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인 시대가 되었다. 사회 상황이 그렇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질적 가치를 무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여 자연스레 물질적 가치 지향의 정도를

덜 하게 되는 방식이 필요하다. 경제문제의 어려움을 ‘개발, 발전’의 방향으로 풀 것이 아니라, 관계 욕구 충족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관계성 부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외로움, 우울증의 문제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여러 부처를 두듯 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정도이다.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을 두고 아일랜드에서는 ‘외로움 TF’를 설치하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좋은 미래를 꿈꿀 때는 특히 관계 욕구 충족 방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리적 관점

지리학적 관점에서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 정의(spatial justice)다. 때로는 사회정의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때로는 독립변수로서 다루어진다. 1972년 데이비드 하비가 인문지리학에서 최초로 ‘정의’를 내걸고, 『사회정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라는 책을 통해서 진보적 지리학의 깃발을 들었다. 현재 공간 정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리적 집중과 불균등발전에 대한 비판과 균형발전의 추구, 도시권(Right to the City), 환경권과 환경 정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와 정주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공간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지리학적 의제에 가장 근접한 균형발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인구와 부, 경제사회적 힘이 집중되는 것보다, 공간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잘 사는) 것이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관념이 줄곧 지배적이었다. 국토의 (혹은 도시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적정한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영미지리학에서 비판지리학이 등장한 이래로 더욱 뚜렷한 학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근 수십 년간 비판지리학(진보적 지리학)의 성과에 따르면, 정치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적 성장은 지역 간 불균등한 발전을 내적인 기제로 하고 있기에, 공간 정의의 추구는 다소 이상적인 목표였다. 즉, 공간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쉽게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공간 정의

는 1969년 리처드 피트(Richard Peet)가 앤 아버에서 열린 미국지리학대회의 발표장 외부에서 대학원생들과 새로운 지리학을 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면서 비판지리학의 가치를 내건 이래로, 비판적, 진보적 지리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되어 왔다(권정화 2005, 225).

그러나 공간 정의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간정의의 추구는 미래의 삶에 대한 규범적 가치(norm)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 혹은 집단의 욕망/소망(desire)과는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호미래를 이야기할 때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규범적 가치가 객관적이라면 욕망은 주관적이다. 두 가치는 서로 같을지보다 상호보완적이다. ‘어떤 미래(사회/공간)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형식은 욕망과 소망에 대한 것이지만, 규범적 가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집중과 분산, 장소와 네트워크, 자연과 사람의 조화 세 쌍으로 범주화하여 지리적 관점에서 선호미래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1) 집중과 분산: 균형발전의 모순

분산의 규범적 가치는 2003년 제정된 국토기본법의 서두에 균형발전의 형태로 잘 담겨 있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균형발전의 과제가 혁신도시나 행정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균형발전’을 쉽게 실현가능한 과제로 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산업과 도시발전은 경향적으로 집중의 형태를 보여 왔으며, 균형보다는 불균형(혹은 불균등)이 더 알맞은 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지리적 차원에서 근대화의 요체는 산업화와 도시화인데, 양자 모두 집중 혹은

집적의 과정을 내재화한다. 즉, 집중은 발전의 내재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발전과정, 불균등성은 발전의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균등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과정에서 기업 간, 산업 간, 정책 산업부문 간,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의 불균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존스톤 외, 2000). 즉, 공간적/지리적 불균등 발전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의 복합체로서 정의된 불균등발전의 한 부분으로 고찰되어 왔다.

데이비드 하비(1982)는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공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했다. 마르크스가 자본의 축적과정을 상품의 생산과 소비간의 사회적 모순에 따라 공황이 도래하는 순환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비는 도시의 건조환경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본순환을 장기화하는 2차 순환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축적의 과정을 더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또 다른 비판지리학자 닐 스미스(Neil Smith, 2017)는 ‘자연의 생산’ ‘지리적 차별화와 균등화의 변증법’ ‘자본의 재구조화’와 같은 더욱 심화된 키워드 및 의제들을 제시하면서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했다. 그에 따르면 불균등 발전은 자본에 내재한 대립적 경향 즉, ‘생산수준 및 조건의 차별화 경향과 균등화 경향’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스미스 2017:28).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간 더 근본적인 모순의 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중과 분산의 키워드는 근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도시 및 지역에 대한 관점(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담론)의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산업화과정이 필연적으로 특정지역에 생산을 집중하거나, 대도시화를 통해 소비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이들 거점 지역 간의 강력한 연계 때문에 성장의 동력이 지속되어 온 반면에,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는 이론과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오웬과 생시몽, 푸리에의 사회주의 공동체, 크로포트킨의 자립적 공동체,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등의 이상적 도시상은 자본주의적 도시화/산업화 특히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집중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제시된 것이었으며, 부분적으로 현실의 20세기 도시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자립적이고 작은 규모의 소도시(공동체)에 대한 이상주의는

산업집중화, 대도시화에 대한(그것이 가져온 폐해에 대한) 일관된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계획이 상상이나, 이상적 실험의 실패로 끝난 반면, 여러 시도는 실제 도시경관의 역사 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전원도시의 이상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도심 중앙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드는 현재의 신도시계획의 뿌리에 전원도시의 이상이 아직 살아 있다. 일산, 분당과 같은 1세대 신도시에서부터 행정 복합도시(세종)에 이르기까지 전원도시의 요건으로 제안되었던 인구규모의 제한(계획 인구 설정), 도시의 물리적 확장억제, 녹지공간을 비롯한 도시 내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의 물리적, 경관적 요소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2) 장소와 네트워크: 문화적 삶

두 번째 키워드는 장소와 네트워크의 관계이다. 장소는 일상용어에서 1970년대 이후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이 이론적 맥락을 부여한 뒤로 인문지리학의 주요개념이 되었다. 주체의 주관적 장소 인식을 뜻하는 ‘장소 감(sense of place)’은 에드워드 켈프(E. Relph)가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 2005)』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대화, 도시화를 통해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낭만주의적 장소관에 기초해 있다. 즉, 켈프는 국제주의 건축경관, 포스트모던 경관 등에 부정적이다. 예컨대, 라스베이가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곳은 진정성이 없는 가짜 장소이며, 장소 감과 장소정체성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영국의 지리학자 도린 매시(Dorren Massey)는 ‘지구적 장소 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일종의 결절(nodes)로서의 새로운 진보적 장소의 개념을 제안했다. 매시의 장소 이론은 현대의 테크놀러지와 친숙한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선호미래를 위한 유력한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다. 이동성과 네트워크 사회의 현실화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는 물리적 이동 없이도 외부와 전면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예: 스마트 시티).

고유하고 개성적인 속성으로서의 장소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은 그러한 장소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한다. 현실에서는 비슷한 아파트 속 편리한 공간에 몸을 맡기면서도 진정한 장소에 대한 욕망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주거단위가 편의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살아가는 도시와 지역이 고유한 문화적 색채를 가질 필요성이

더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시의 개방적 장소가 과연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쉽게 동질화되지 않고)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데이비드 하비와 매시의 공간-장소 논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은 유용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비는 축적된 (계속적인 집적을 향한) 자본의 힘과 그에 저항하는 노동의 힘을 각각 ‘global vs. local’의 도식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매시의 입장은 훨씬 유연하다. 하비의 이해방식은 결국 지구를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자본(공간)과 땅에 뿌리박은 노동/시민의 힘(장소)을 대비시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장소를 계급투쟁의 지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매시의 접근법 속에서는 장소의 고유성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힘이 외부로부터 연계되는 수많은 결절점들(nods) 속에 편재한다고 가정한다.

3) 살기 좋은 땅과 자연

세 번째 키워드는 자연과의 조화이다. 이는 특히, 한국의 문화역사적인 전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풍수지리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리학의 가거지에 대한 관점-배산임수(背山臨水, 江居)와 계거(溪居) 또한 자연에 대한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문지리서인 이증환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다. 이 주제들은 모두 과거에 선조들이 어떤 땅을 주거지로 선호했는가에 대한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의 함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쉽게 논하기 어렵다.

이증환의 『택리지』는 한국적 취락입지 모델을 추구한 이론서로, 기존 이론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 조선 후기 사회역사적 조건과 현지의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마을입지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한 저술이다. 특히 18세기 이후 지식인들의 주거지, 공간 환경에 관련된 저서들은 대개 개인 주거지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택리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공간단위로 저술되었다.

한국 유학을 집대성한 학자인 퇴계 이황은 성리학의 자연관을 실제 거주를 통하여 실현하였는데, 그는 산림에 거주하면서 계류를 앞에 두고 사는 산거(계거)의 즐거움을 담은 산수시를 많이 남겼다. 그는 성리학적 유학의 자연관을 거주를 통해 실천한 인물이었다. 이런 시들은 퇴계가 요산요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으로, 자연을 통해서 자신

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실질을 터득한 바를 기록한 것이다(김덕현, 1999). 그에 따르면, 공자의 요산요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인(仁)과 지혜를 말하는데, 지적인 이해나 합리적 추론과 같은 학습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감성이 주체에 내면화되면서 체득하는 것이다(김덕현, 1999).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산수의 의미는 ‘천지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정한한 도장’이었으며,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말 없는 스승이었다. 즉, 퇴계에게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군자의 도를 추구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인자는 요산요수라는 잘 알려진 표현의 의미이기도 하다(김덕현, 1999).

이러한 탓에 유학자의 가거지(可居志)는 자연에서 멀어질 수가 없었다. 그가 산거를 중시했던 이유는 자연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 자연과 합일하는 어짐을 추구하는데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거를 현실도피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해일 것이다. 퇴계에게 산거는 치열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은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학(心學)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색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치열한 현장이었다. 퇴계 이황에 산거 즉, 자연과 합일하여 인(仁)을 내면화하는 거주야말로 필생의 목표였던 성인의 학문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김덕현, 1999).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등 유학자들의 산림계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자의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들의 제자 또한 스승들처럼 산속에 살면서 학문을 닦고 본성 함양에 힘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대부학자를 산림(山林)이라고 칭하게 되었으며, 이들 산림에 의해서 성리학의 자연관이 거주로 구현되었다. 즉, 16세기 이후에는 산림처사 전통이 형성되었다.

풍수지리 또한 다른 각도에서 자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풍수의 핵심은 자연과의 조화이다. 풍수를 구성하는 3대 구성요소로 산, 물, 방위가 있다. 이 중 산천의 형세를 살펴 길흉을 구별하는 방법론인 형세론 혹은 형국론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풍수에서 특히 지배적이다. 풍수지리에서는 산과 능선을 ‘용’이라고 말한다. 이는 산과 능선의 꿈틀대는 용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며, 무생물인 산에 살아있다는 의미를 지닌 맥을 붙이면서, 산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호는 풍수에 대해 산등성이는 땅의 근육이고 흐르는 강물은 땅의 혈맥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자연경관인

산의 형태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는 사실상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생태도시는 미래도시상의 가장 글로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전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함의를 도출해 본다면 거주를 위해 쾌적한 자연환경조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경관(환경)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자연에 대한 관점이나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유용하다.

4. 사회규범적 관점

1) 체제 개혁적 선호미래

법학에서 선호미래는 헌법의 개정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헌법의 개정은 단지 헌법 문서의 수정 보완에 국한되지 않으며, 헌법해석의 변화나 헌법적 법률들의 변화, 나아가 헌법 문화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헌법의 변천 일반을 포괄한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좁은 의미의 헌법 개정 문제와 연결시켜 선호미래를 생각해보자.

헌법의 개정은 선호미래와 관련되지만, 선호미래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므로 그 내용의 변경은 단순히 선호미래의 변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헌법적 당위, 즉 그것을 준수하고 실현할 헌법적 의무까지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의 개정과 관련된 선호미래는 단일한 형태일 수 없다. 아니 헌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단일 형태일 수 없다. 헌법의 독특성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는 복수적 형태의 다양한 선호미래를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와 같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의 개정은 이와 같은 헌법의 독특성이 발현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헌법의 개정은 복수의 형태로 제기되는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모순적인 선호미래들을 타협시켜 서로 공존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헌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법체계의 당위적 전제를 변경하지 않고 그 보완, 구체화, 또는 실현의 관점에서, 헌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선호미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기존 법체계에서 근본 규범으로 지목해야 할 것은 단연 모든 인간이 자유의 존재로 태어났으며 그들 사이의 원초적 관계는 평등이라는 명제다. 멀리 서구의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에서부터 인류정치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 명제는 수세기 동안의 모더니티 혁명 시리즈를 거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규범적으로 지탱한다.

근대 헌법정치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근본규범은 서로 모순적인 두 개의 하위 체계와 다시 이 둘을 엮어 매는 두 개의 결합 체계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하위 체계의 첫째는 인간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 권리의 목록을 헌법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권리장전), 둘째는 권리를 가진 인간들 사이의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민주정치). 오늘날 헌법 교과서가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누어 서술하는 내용은 바로 이 두 하위 체계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이 두 하위 체계가 각기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대표하면서 때때로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는 상호모순의 관계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결합 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라는 경제 제도와 국민국가라는 정치 제도다. 이 둘은 근대 서구에서 발명되어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

두 개의 하위 체계와 두 개의 결합 체계는 각 정치공동체에서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 점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반도는 식민지배와 분단, 냉전과 내전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와 국민국가 모두가 전혀 안정화되지 못했다. 한반도는 냉전의 경계선에 축조된 두 개의 대결 국가로 분단되었고,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긴장의 끊임없는 재현을 통해서만 세력 균형을 갱신하는 힘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제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 20세기 한반도는 단 한 번도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꽃필 수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 전제된 관치경제만이 횡행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모습은 공식적인 헌법 문서의 이면에 국가보안법이나 경제개발계획 등과 같은 일종의 특별헌법이 더욱 강력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한도에서 권리장전의 위축과 민주정치의 왜곡이 일상화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냉전적 대결상황을 전제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통치 권력은 끊임없이 비상사태의 연장을 획책하면서 계엄령 통치를 계속했고,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경제개발을 통해 서로 경쟁했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및 이를 둘러싼 주변 지역 전체는 서로에 대한 적대에 익숙한 중앙집권적 권력들의 대결장이 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분단과 대결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러한 맥락에서 2050년 대한민국의 선호미래를 생각한다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권리장전의 실질화와 민주정치의 정상화, 그리고 시장경제 및 국민국가의 안정으로 좁힐 수 있지 않을까. 20세기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지배해 온 특별헌법체제를 청산하고 이를 대체할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헌법의 개정을 통한 선호미래의 구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 과제는 결국 권리장전의 실질화와 민주정치의 정상화, 그리고 시장경제 및 국민국가의 안정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과제라는 점을 드러낸다.

2) 헌법정치 역량의 필요성 및 사례

205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지 대략 100년이 되는 해다. 이 100년 동안 헌법정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했고 또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체계에 관해서 보자면, 권리장전은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기본권을 확립하고 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국경 내부의 시민권을 넘어 국경 없는 인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는 심지어 인간이라는 범주를 넘어 동식물에까지 권리주체성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정치는 주기적인 선거제도의 정착을 넘어 실질적인 대의를 목표로 정당정치, 이익집단정치, 시민정치, 사법정치 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는 심의정치, 직접행동정치, 도시정치 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요청들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2018년 봄에 진행되었던 헌법개정 논의만 해도, 국민의 안전 및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와 차별 금지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에 관련하여 수많은 요청이 쏟아져 나왔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대표제도의 변경과 사법의 민주화, 그리고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강화 등 민주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시도들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심지어 상호모순 되기까지 한, 수많은 변화의 요청들 밑에는 이념적으로 자유와 평등 그 자체의 모순적 길항관계가 존재한다. 자유는 자유와, 평등은 평등과 투쟁하고, 자유와 평등은 다시 서로에 대하여 투쟁하는 관계다. 헌법 개정은 선호미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모순적 길항관계를 역동적으로 안정시키는 묘수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헌법개정 요구들을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 수 있는 헌법정치의 역량이다. 각각의 헌법개정요구가 서로 다른 선호미래를 전제하고 있다면, 이는 것처럼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선호미래들을 어떻게든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와 같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는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작업은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더욱 포괄적인 차원의 선호미래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는 결코 완결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헌법정치의 혁신을 이룬 사례들은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연방 국가를 탄생시켰던 미합중국의 설립자들, 특히 제임스 매디슨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를 포함한 소위 페더럴리스트들은 독립혁명 직후 정치경제는 물론 종교문화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호 모순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던 13개의 주들에 대하여 민주적 연방주의라는 더욱 포괄적인 차원의 선호미래를 제시했으며, 나아가 연방헌법을 통하여 그것을 구현하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고 또 제도화했다.

미국의 헌법정치학자 브루스 애커맨에 따르면, 이와 같은 혁신, 즉 서로 다른 선호미래를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더욱 포괄적인 차원의 선호미래로서 민주적 연방주의의 비전을 제공하고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그것을 제도화한 경험은 미합중국에 이중적 민주정치라는 독특한 형태의 헌법정치체제를 만들어냈다.⁷⁾ 일상적 정치-헌법적 사법-헌법적 정치의 동심원적 확대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중적 민주정치는 남북전쟁 직후의 재건과 뉴딜 혁명 이후의 재구성을 통하여 미합중국의 헌법정치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갱신했다.

7) Bruce Ackerman, We the People vol. 1 - Found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애커맨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미합중국의 헌법정치는 세계화와 정보화(그리고 어쩌면 탈기독교화 및 탈백인화)의 도전에 맞추어 또 한 번의 갱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미합중국 구성원들을 분열시킬 뿐인 헌법적 사법의 실패에서 예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중적 민주정치의 논리상 헌법적 정치의 시대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미합중국과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헌법적 정치의 필요성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 모더니티의 액체적 심화, 반(反)모더니티의 반동 등을 생각할 때, 20세기를 지탱해 온 특별헌법체제, 즉 국가보안법과 경제개발계획으로 대표되는 체제는 더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다. 권리장전의 실질화 요구와 민주정치의 정상화 요구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며, 대외적인 대결상황을 이유로 시장경제와 국민국가를 왜곡시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의 헌법개정논의에서 중앙권력기구의 합리화는 물론이려니와 중앙권력 그 자체의 자치분권화 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3) 헌법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선호미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현행 헌법이 시대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① 냉전 체제의 유제가 곳곳에 남아 있고, ②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에도 빈틈이 많으며, ③ 정당정치의 왜곡, 대통령 권력의 파행, 사법권의 독주를 조장하는 권력구조의 불완전성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④ 자치분권에 대한 체계적 방기는 도저히 헌법해석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이루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헌법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더 포괄적 차원의 선호미래다. 특히 대내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 쉬운 헌법의 개정을 대외적인 차원에까지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시킬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주권에 기초한 국민국가 체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독일의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독일 국민 전체가 채택했던 방향성은 깊이 음미할 가치가 있다.⁸⁾ 그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류

에 대한 집단적 범죄로 받아들였으며, 자신들의 새로운 헌법에 이 점을 명문으로 못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나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은 이 과정에서 나온 소위 절대적 기본권의 핵심이다. 나아가 그들은 독일 정치사에 매우 낮은 제도인 민주적 연방주의와 법의 지배 원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프랑스와의 관계를 유럽 통합의 견인차이자 마당쇠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대내적인 차원과 대외적인 차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시켜 헌법적 혁신을 이루어낸 이와 같은 성과의 이념적인 추동력을 무엇으로 특정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모든 권력은 다른 권력들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경쟁의 합리적인 규칙이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을 경우 공적 권력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개입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은 꾸준히 전지되어왔다. 독일의 헌법이론가들이 흔히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로 요약하곤 하는 바로 그 원칙이다.

패전 독일이 아직 전승 4개국의 분할 통치 아래 있던 시절인 1950년을 전후하여 주로 서부 독일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상과 같은 헌법적 혁신은 라인강의 기적과 동방 정책, 그리고 유럽 통합의 제도화를 거쳐서, 결국 40년 뒤 독일의 재통일이라는 놀라운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고 이념에 따른 분단을 감수하던 시절에 과연 독일의 시민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40년 뒤의 선호미래로 꿈꾸었을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수치스런 현재를 넘어서기 위하여, 선호미래가 아니라 어렵פות한 설계도로써,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작은 희망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제시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유럽 정치사가 보여주는 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 국가의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일종의 선호미래가 불과 40여년 만에 엄연한 정치적 현실이 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8) Donald Kommers,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uke University Press, 2012 (3rd edition)

앞서 말했듯이,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는 선호미래들을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2050년 대한민국의 선호미래를 헌법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누구든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것들보다 더욱 포괄적인 차원의 선호미래 및 그것을 구현하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시하고 또 제도화할 역량을 갖춘 정치세력의 형성을 바랄 수밖에 없다.

5. 과학기술적 관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주류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조문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1963년 헌법이 최초였다. 이 헌법의 118조에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의를 둔다.”라고 명시했다. 이때부터 과학, 또는 과학기술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조항은 1972년과 1987년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상 큰 변화가 없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9장 127조 1항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 시대에 정립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⁹⁾

해방 직후 이태규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부와 종합연구소 구상을 통해 다원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당시 여건상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한 고른 관심을 두는 것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1960-70년대의 빠른 경제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은 단일하고 편향된 인식으로 바뀌어 갔다.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1963년 이래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 선호미래상은 다원적인 과학기술로의 복원을 위한 기로에

9) 김찬현,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세기의 숙제’: 과학기술과 헌법」, 『과학잡지 에피』 3 (2018): 214-228.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분화의 전선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기초연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실용적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1946년 이태규의 구상에서도 볼 수 있듯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1996년 한국의 기초과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등과학원과 2011년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이었다.¹⁰⁾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기초과학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극소수의 엘리트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몰아주는 형태의 지원으로는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히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¹¹⁾

기존의 주류 과학기술 인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현행 헌법 9장 127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과학계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주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과거의 패러다임은 그 시효를 다했으며, 과학과 기술은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세계를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주의 사회의 문화로서의 의미 역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헌법 조항은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이다. 무엇보다도 이 신설 조문을 “제9장 경제”가 아니라 “제1장 총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과학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10) IBS에 대해서는 박범순·우태민·신유정, 『사회 속의 기초과학: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지식생태계』(한울아카데미, 2016) 참조.

11)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일하 교수는 2013년 8월 29일 BRIC 소리마당 게시판에 “IBS로 노벨상의 꿈을 ... 뽐냈다, 정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그는 “IBS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그 대신 개인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편이 “기초과학의 튼튼한 바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김우재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플라이룸: 초파리, 사회 그리고 두 생물학』(김영사, 2018)에서 “정부가 만든 IBS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초과학이 수행될지는 미지수다. 그 실험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도박처럼 모든 연구비를 베풀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가능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상당한 정도의 경제 호황을 통해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감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전제하지 않는 기초과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시기는 경제적인 호황기(미국의 경우는 1950-60년대,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였다. 한국에서 그나마 유사한 사례는 1990년대 초에서 IMF 구제금융에 이르기 전까지의 짧은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6년 고등과학원의 설립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고, 2011년 IBS의 설립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한국이 비교적 수월하게 회복되었을 무렵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해 보자.

둘째, 과학기술이 부국강병 이외에 시민들의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으로 인한 피로감이 축적되면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이른바 군산복합체에 의해 편향적으로 발전한 군사·우주기술의 성과를 국내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한편으로는 기존 과학기술 이용 방식에 대한 염증에서 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견 쓸모없어 보이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예기치 못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기도 한다.

두 개의 선택미래라는 교차로에 선 한국 사회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과거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6. 미래학적 관점

인간의 뇌는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하는가? 인지신경과학의 논의를 빌리자면, 인간이 인식하는 미래는 결국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또는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으로 축적된 정보들의 의식적·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는 미래와 관련한 대부분의 결정이 적절하지 못한 예측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 데이터에 따르면, 소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기반한 미래예측의 대부분은 현재 또는 조금 지난 과거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를 미래로 투사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 집단의 경험과 학습으로 형성된 멘탈모델들 통해 미래를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 투사하고 확장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미래의 계획과 정책들은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낮은 미래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이다.

개개인이나 한 사회가 선호하는 미래는 각 개인 및 사회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다양하다. 데이터는 사람들의 선호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틀로써 ‘4가지 일반적 미래’라는 미래 이미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1978년 데이터는 앨빈 토플러, 클레멘트 베졸드와 함께 집필한 ‘Anticipatory Democracy’에서 4가지 일반적인 미래 이미지 유형의 근간이 되는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첫 번째 질문은 미래학자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한 것이다. 이 3가지 질문은 4가지 대안적 미래의 원형으로 진화되었고, 미래 시나리오 개발에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는 1980년대 초반까지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세계 각 지역과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수년 만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미래학자,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유형의 미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10개의 미래 이미지들은 당시의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동구 공산권, 그리고 제3세계로부터 수집된 미래의 이미지들이 반영된 것이다. 10개의 미래 이미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Dator, 2009).

될 대로 되겠지(미래에 대한 무관심).

12) 대표적인 것이 회귀분석(Regression)이다. 회귀분석은 과거의 패턴을 수식화해서 결정한 다음 그 수식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회귀분석이 갖는 치명적인 오류는 현재 또는 과거의 환경구조가 미래의 환경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구조는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동의하는 바이다.

미래의 변화는 아주 느리게 오거나, 변화하지 않는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반복이다(순환론적 이미지).

미래는 계속 성장·발전·진화해 나갈 것이다(선형적·진보적 미래 이미지).

미래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인류는 곧 재앙을 맞을 것이며, 기나긴 암흑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당장 성장을 멈추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순화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기술낙관주의).

데이터는 이들 10개의 미래 이미지들을 다시 4개로 압축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4가지 일반적 미래 이미지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 성장 (Continued Growth): 현재의 위기와 기회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이미지

붕괴 (Collapse): 다양한 형태의 몰락과 붕괴를 의미하며, 현재의 시스템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이미지 (자원 고갈, 기후변화, 자연재해, 인구폭발, 전쟁 및 테러 등)

보존사회 (Disciplined / Conserved Society): 미래가 현재의 보존 또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이미지(성장의 종식, 개발보다 보존, 덜 산업화된 사회)

변형 (Transformation): 미래가 과거나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미지(새로운 형태의 믿음, 가치, 기술, 행동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

데이터에 따르면, 미래는 결국 이러한 이미지들의 결합일 것이며, 있을법한 미래,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미래의 이미지들을 고려한 후,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ator, 2009).

미래의 이미지나, 선호하는 미래는 개인 또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 문화, 발전 단계, 성별, 연령, 학습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산업

화의 폐해와 모순을 경험한 서구사회는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보존이나, 변형적 대안을 선호미래로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아직 산업화나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사회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선호미래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 외에도 과거의 전쟁이나 경제적인 붕괴를 경험한 사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미래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호미래는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다양한 문화는 다양한 선호미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지역이 넓고, 여러 문화와 인종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한국과 같이 지역이 좁고 단일 민족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슬람, 유교, 기독교 등 각기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은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국가의 경우 ‘이념’을 통해 각기 다른 선호미래와 국가적 통합을 추구해 오고 있다. 과거 소련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념’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양한 가치와 선호미래를 수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각 ‘계획경제에 기반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 또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라는 ‘이념’이나 ‘상상의 공동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7.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적, 정치문화적, 지리적, 사회규범적, 과학기술적, 인지적 관점에서 선호미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런 논의를 통해 과거 선호미래의 구상, 실현의 주체, 철학적/정치적 대립,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걸림돌, 한계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지,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살기를 원했는지, 개인은 선호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선호미래의 사회적, 정책적, 규범적 요소는 무엇인지, 과학기술 혁신의 유형에 따라 미래사회상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것도 성과였다.

다음의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사회 시민들이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사회상을 원하는지 살펴보자.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개인(가정)-사회(직장, 지역공동체 등 집단)-국가 수준의 가치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싼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복합적 가치가 차별적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그 동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앞서 6개 분야별로 선호미래에 대해 살펴본 것은 제3장에서 논의할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 연구의 바탕이 된다.

제3장

국민 미래 선호가치 조사

제1절 연구 개요

제2절 미래 선호가치 조사 체계 구축

제3절 예비조사 및 분석결과

제4절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 실행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1절 |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격렬한 사회정치적 변화의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 가치, 근대적 가치, 탈근대적 가치가 적절히 융합·융합되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부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현상이 병존하는 현상, 다중적(多重的) 시간대가 공존하는 현상을 학술적으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가히 다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축적이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결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격렬한 양상으로 분출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만성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더해 21세기 한국 사회는 남북한 통합의 물결, 불평등의 심화, 저성장 시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 기후온난화 등과 같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불확실한 사회적·정치적 변동 및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지난 20세기에 격렬한 사회변동 속에서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이 적절히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하는 미래의 충격과 함께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창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다가오는 사회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예측할 것을 요청한다. 이 장에서는 21세기 한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를 조사하는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은 2019년의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로써 방법론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지표 및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2050년 미래의 가치가 현재와 어떻게 다르게 변화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서 그에 필요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9년도 미래 선호가치 조사에 활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를 공공정책에 활용하는 로드맵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험적 조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과학적 조사 방법론을 고찰한다. 둘째, 조사방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영역별 대칭축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보완한다. 셋째,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9년 실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 방안 및 향후 미래 선호가치 조사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먼저 미래 선호가치 및 유사연구에 대한 국내외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와 가치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한국사회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등 기존 가치조사의 기본설계, 설문항, 주제 분야, 조사 주기 등을 검토한다. 둘째, 미래 선호가치 측정, 지표개발 및 활용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정량적 의미를 넘어 어떤 현상을 발견·추적·해석하는 유력한 증거(evidence)라는 정성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진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조사 검토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선호가치의 기본 영역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한편, 기본 영역

들에서 한국인들의 가치 편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분석 과정은 현재 추구되는 가치와 미래의 바람직한 가치지향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 가치연구 조사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과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정치사상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정치사상연구팀의 가치연구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와 연계하여 미래 선호가치조사를 위한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 미래 선호가치 조사 체계 구축

1. 기존 가치 조사 연구의 장단점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개인(가정)-사회(직장, 지역공동체 등 집단)-국가 수준의 가치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싼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복합적 가치가 차별적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그 동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위에서 논의된 가치 이론의 함의와 수용 전략, 그리고 한계점과 그 보완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치 연구의 장점과 수용 전략

사회과학 분야의 기존 가치 연구는 가치를 태도와 행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사회 변동의 기저에 작동하는 매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화했다.

단, 기존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보완하고 유형화 작업을 수정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게 분석틀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이 밀받침된다면, 한국인의 가치 체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와 미래 정책적 수요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 가치 조사와 같은 기존 가치 연구의 조사 모듈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가치에 대한 표준화된 연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조사의 개념틀을 유지 확장하되, 한국인의 선호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 설계안을 추가하여 분석틀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미래 가치 지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예측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2) 한계 및 보완점: 탈 서구적 관점의 측정과 조사방법의 개발

경험적 데이터의 수집이 서구적 맥락에서 수행되어 한국의 가치를 논의하는 조사틀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세계 가치 조사’의 결과에 대한 탈서구중심적 시각의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중요 가치 중 누락되거나 서구 유럽에서의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수들을 가치(군) 요인 중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국가 조사연구의 문제는 표준화된 질문항이 적절한 현지 언어로 번역되었는지의 문제와 질문항의 중의적 해석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것은 상위 가치 개념이 가지는 내용의 타당성이 하위 세부 가치의 차원에 반영되었는지의 문제(content validity)에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응답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하였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조사 모듈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가치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연구의 가치 조사 설계는 개인과 사회(집단) 차원에서는 슈워츠 가치의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경제,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잉글하트의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본틀로 활용하기로 한다.

2.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 설계

가. 주요 가치 영역

기존 가치 개념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인, 사회(집단), 공공(국가) 영역에서 작동하는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의 핵심적인 주제 영역을 구성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선호가치의 변화 추세를 검토하여 설정된 핵심 주제 영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미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그리고 ‘세계 가치 조사(WVS)’, ‘한국 사회종합 사회조사(KGSS)’ 등 기존 조사를 참고하여 조사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했다. 동시에 2050년 미래 가치와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가치와 정책(안) 배치(value-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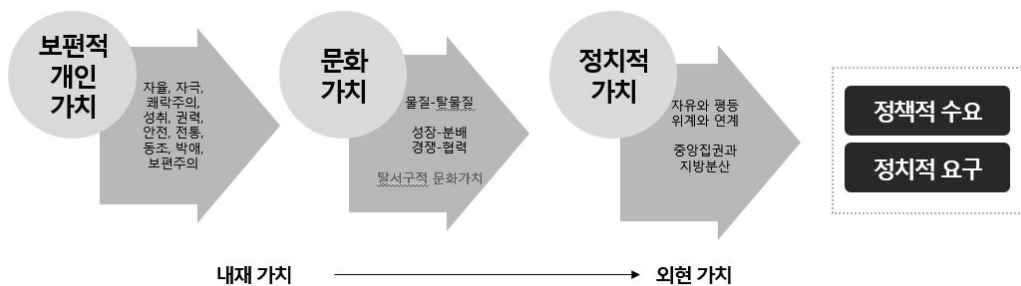
mapping) 작업도 병행하였다.

먼저, 한국인의 미래상, 미래에 대한 태도 등 공통 미래 가치 영역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 공통 영역’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전반부에 해당 설문항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래 가치와 관련이 높으며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분야이며 보다 포괄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분야를 대영역으로 설정하고 해당되는 가치(군)을 구성하였다. 각 조사 영역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가치 공통 영역: 미래상, 미래에 대한 태도, 공정성과 공평에 대한 인식 등 현재(2019년)와 미래(2030년, 2050년)의 한국,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등
- 정치 영역: 민주주의 통치 만족(선호 통치 형태), 정치 신뢰, 정치참여, 정치 관심, 정치적 덕목(자신, 지도자), 통일 전망, 대북관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유와 평등(위계와 연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분산과 집중)에 대한 가치, 태도, 인식, 자기표현과 토론문화, 대의 민주정치와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인식 등
- 경제 영역: 경제 성장, 풍요로운 삶, 인간적인 삶, 직업 선택의 기준, 일과 직장에서의 덕목 등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 대한 가치,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가치 인식 중 근면, 검소, 창의성, 성취, 호혜 경제에 대한 가치 인식과 태도, 기업과 노동, 창업 등에 대한 인식 등
- 사회 영역: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가 개인 중심 또는/그리고 집단 중심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경쟁과 협력의 가치가 개인(가정)과 집단(지역 사회, 직장), 공공 영역에서 갈등 또는 조화를 이루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 세대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개인-사회-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다른지 질문, 협력과 경쟁의 가치 기준상 이민자,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 성취 중심의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 과학기술 영역: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기술발전에 대한 저항과 적응의 가치, 첨단 기술이 인류에 편의 또는 위협이 되는지 질문, 2050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태도에 대한 질문 등

미래 선호가치와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각 영역별 주요 가치와 정책(안) 배치(value-policy mapping) 작업은 현안 정책과 이슈를 고려하여 예비조사에 반영하였다. 현안 정책 이슈뿐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항으로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의 범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포함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 향후 필요할 것이라 예측되는 정책에 대해 미래 선호가치와 연계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와 연계한 정책적 수요 분석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 경제 정책: 복지와 일자리, 환경문제와 에너지 정책, 도시 개발과 부동산 정책 등
- 사회 정책: 지역사회, 직장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책, 교육 정책의 변화, 이민/다문화 정책, 여성 정책 방향 등
- 정치 제도와 체계: 지방분권 정책 방향과 수도권 개발의 방향, 대의제/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 시민 참여 정치제도, 정치 엘리트의 충원제도, 개헌 논의의 방향성 등
- 과학기술 정책: R&D 투자의 우선순위, 시의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복지 정책 수립 등



[그림 3-1] 미래 선호 가치 조사를 위한 단계별 구성

나. 기존 가치조사와의 차별성 및 연결성

탈서구중심적 시각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를 추출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인이 미래에 선호할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선별한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사회(집단) 가치, 공공 가치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검토한다. 한국의 사회, 정치적 조건에서 미래의 가치, 정책 수요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 경제적 가치는 물질-탈물질 가치 중 이론적으로 타당한 개념을 활용하되, 탈서구적 관점에서 질문항을 변형하여 구성한다. 탈서구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미래상과 미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 영역을 개발한다.

주제 영역별 대립축을 설정하고 해당 가치의 공간별로 미래 가치를 배치하고, 가치의 갈등, 상충적 상황을 가정하여 조사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대립되는 축을 상정한다.

- 정치 영역 대립축 가치: ‘위계-연계(자유-평등)’, ‘집중-분산’
- 경제 영역 대립축 가치: ‘물질-탈물질’, ‘성장-분배’
- 사회 영역 대립축 가치: ‘경쟁-협력’, ‘개인-집단’
- 과학기술 영역 대립축 가치: ‘편의-안전’, ‘적응-저항’

[표 3-1] 미래 선호가치 조사 설계에 포함된 가치 개념

구분	세부 가치	조사 영역	분석 단위
알포트	기본, 중심 가치 : 정의, 박애, 정직 등	미래 공통	개인, 국가
	* 이차 가치 (특정한 상황의 행동 경향)		
로키치	궁극적(목적) 가치 : 안락함, 성취, 안정, 행복	공통,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개인, 사회
	* 수단적 가치 (목적 가치를 위한 행동 양식)		
슈워츠	자아 증진(개인) 가치 : 자율, 자극, 쾌락, 성취	경제, 과학기술, 사회	개인, 집단
	자아 초월(공공) 가치 : 권력,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정치, 사회	집단, 국가
잉글하트	물질주의 가치 : 경제안정, 경제성장, 범죄안전	경제, 사회	집단, 국가
	탈물질주의 가치 : 국민 참여, 표현의 자유, 인간적인 삶	정치, 사회	개인, 집단

* 알포트의 이차 가치와 로키치의 수단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아 연구 설계에서 제외하였음.

국회미래연구원 13개 분야의 미래 동인 연구와 정책 수요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미래 정책 수요 전문가 조사 결과,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정책으로 조사된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가치의 영역과 대립축의 개념 설정에 활용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13대 분야별 미래 주요 동인을 ‘미래 가치’와 관련되는 주제 영역과 가치의 축 설정에 반영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이슈 중에서 빈번하게 일반에 노출되고 있는 주제를 설문 항목에 포함하였다(예: 로봇,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의견 등). 앞으로 변화될 시대의 가치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가치체계의 변화 동인을 분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함한다면 경제에 대한 가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바람직한 미래 가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지향성과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설 수준에서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의 분석틀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표 3-2] 조사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와 내용

대영역	대립축	가치	정책 예시	13대 분야
정치	위계 (자유) 연계 (평등)	· 국가주도/시민주도, · 정부신뢰, 국가신뢰 · 국민직접참여, 대의 정치(투표참여) · 토론문화, 표현의 자유, 인권, · 엘리트(전문가)중시	권력구조 개헌 논의, 북한/통일정책/국제관계, 선거제 개편, 비제도적 참여활성화(시민단체 지원정책),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국민 청원제)	정치/행정 북한/통일 국제정치 사람 정주여건
	중앙 집권 지방 분권	· 권력 추구 · 권위에 대한 복종 · 사회 질서 유지	지방분산 정책 (수도이전), 자치단체의 시민참여(주민참여 예산), 지방자치제도 확대 방안(예산, 조세, 경찰, 시민안전)	
경제	물질 탈물질	· 경제성장 · 윤택한 생활 · 친환경	부동산 정책(도시개발, 재생), R&D 정부투자, 재래시장 활성화, 원전 에너지 정책	경제 식량/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사람정주 여건
	성장 분배	· 근면, 검소, 박애 · 창의성 중시 · 경제적 · 성공(성취) 중시, 일중심, 윤리적 소비, 탈성장	기업/노동(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 기술과 창업 장려 정책, 블라인드 채용 정책,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대영역	대립축	가치	정책 예시	13대 분야
사회	개인 집단	· 개인 자율과 창의, 개인 삶과 행복 중시, 가족 중심주의, 자기 표현 중시, 집단가치 순응, 타집단 관용, 직장 내 개인의 자율, 종교적 가치	이민정책, 여성정책, 다문화 정책, 비대면 중심 정책, 여가와 관광 육성 정책, 종교과세 정책	인구사회 사람 정주여건 경제
	경쟁 협력	· 인간중심 사회, 집단신뢰, 개인참여 중시, 언론의 자유 보장 · 도전 정신, 경쟁과 성공	교육/입시 정책, 우리 마을 만들기 정책	
과학 기술	편의와 안전	· 전통 중시, 편안한 삶과 개인 안전, 범죄 없는 사회, 인간다운 삶의 가치, 환경, 생태계 유지	로봇 상용화,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AI 의료 정책,	기후변화, IT, BT, 식량/수자원, 사람
	적용과 저항			
미래 공통	미래상, 미래인식과 태도	· 미래 지향성, 공정 (공평) 불확실성 회피, 국가 자긍심	국정 철학, 미래 정책의 기초	공통

전체적으로 탈서구주의적 시각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국인의 물질주의 가치와 탈물질주의 가치 측정 문항이 한국 현실에 잘 맞도록 수정하고 이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한국의 특성상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는 주로 경제 영역에 한정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슈워츠의 10대 가치를 묻는 질문항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하여 구분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구체적인 설문항으로 구성하여 고루 배치하였다.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공공차원의 가치를 양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집단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서구 유럽과 달리 ‘개방(openness to change)과 보수(conservation)’의 가치 대립은 한국의 경우 매우 모호한 구분일 수 있다. 한국 정치 영역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보수’의 이분법(ideological dichotomy)이 사회, 경제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라 할 지라도 보편적 복지, 호혜경제, 탈물질주의 가치, 이민자 보호, 여성정책 등에서 뚜렷

한 정향이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라 할지라도 서구에서 흔히 말하는 안정중심, 물질주의 가치, 성취지향성 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또한 진보-보수의 프레임은 개인과 집단, 공공 영역을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가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경쟁과 협력’의 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치영역의 ‘집중과 분산’의 대립축은 중앙집권 지향성, 수도권 중심의 정책지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분산 수용성과 대척점을 이루도록 설계하였으며 이것은 슈와츠 가치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가치를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경제적 가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미래 변화의 척도가 된다. 통상적으로 소득 불평등 격차 인식, 개방경제의 진전 속도, 암호화폐의 통화 대체 범위 등 매우 다양한 미래의 이슈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AI와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삶과 노동, 성장과 분배 가치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질문항 모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에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이 주는 개인 간, 집단 간 가치체계의 차이는 상당하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북한 자체는 물론 한반도 평화 또는 통일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는 대부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과정 또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 어떤 미래 가치에 의존하는지, 또는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문제의식은 부재한 실정이다. 미래 북한의 체제 변화(붕괴-유지-강화)에 따라 향후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증적 가치 분석의 결과로 통일 정책 전반의 기초가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을 포함한 현재의 기후변화 등 한국인의 미래 가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적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미래상과 미래에 대한 태도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과 관련되는 기후변화, 과학기술, 에너지, 의료(IT, BT)분야의 주요 이슈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소비 성향 및 소비 패턴, 가족과 개인의 생활 패턴, 공동체 활동,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대한 조사 설계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처럼 서구의 가치 연구 결과를 포괄하되,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리만의 미래 선호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들은 연차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조사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정책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제3절 | 예비조사 및 분석결과

1. 예비조사 개요

본 조사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는 예비조사를 담당한 조사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한 응답은 241명이었다. 세부적인 예비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3] 예비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17세 이상 NRS 온라인 패널
표본배분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
유효표본	241명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8개 주제 266개 문항
조사기간	2019년 1월 23일 ~ 동년 동월 25일

[표 3-4] 예비조사 문항 구성표

주제	세부 문항	문항 수
A.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미래 이미지, 미래 시간, 미래 관련 대화 빈도, 10년 후 예상(나, 한국, 세계), 나의 삶 행복도(10년전, 현재, 2030년, 2050년), 불행한 이유, 한국의 변화(10년전, 현재, 2030년, 2050년), 부정적인 이유, 세계의 변화(10년전, 현재, 2030년, 2050년), 부정적인 이유	21
B. 현재와 미래의 한국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현재와 미래에 한국에 영향 끼치는(칠) 국가, 향후 한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 현안(1~3순위), 현재 대비 2050년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20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6

주제	세부 문항	문항 수
C. 정치영역	한국의 민주적 통치 수준,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의 중요도, 소수의 의견 존중 수준, 향후 바람직한 정부형태, 바람직한 민주주의 운영 방식, 조직/사람의 신뢰도(10가지), 한국 통치방법에 대한 선호도(4가지), 선거 투표 참여도, 정치적 행동 참여 경험(4가지), 정치 관련 견해(1) 동의 수준(4가지), 평소 생활에서 중요시 하는 덕목(1~3순위),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할 덕목(1~3순위), 정치 관심도, 정치 관련 주변인과 대화 빈도, 한국에서 인권 존중 수준, 통일 방식에 대한 견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통일 예상 시기, 통일 후 삶의 변화 예상, 통일 후 통일세 징수 찬반, 주관적 이념 성향, 정치 관련 견해(2) 동의 수준(8가지),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해	48
D. 경제영역	경제 관련 견해(1) 동의 수준(8가지), 경제 상태 만족도, 경제 관련 견해(2) 동의 수준(4가지), 여가생활과 직장 중 비중, 직업(직장) 선택의 주요 요건(1~2순위), 경제 관련 견해(3) 동의 수준(4가지), 경제 관련 견해(4) 동의 수준(7가지), 소득불평등 감소 정책 찬반, 정부 복지정책 찬반, 경제 관련 견해(5) 동의 수준(4가지)	33
E. 사회영역	삶의 전반 만족도, 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도(9가지), 사회 관련 견해(1) 동의 수준(6가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 수준(9가지), 사회 관련 견해(2) 동의 수준(6가지), 자녀 교육에 중요한 덕목(1~3순위), 사회 관련 견해(3) 동의 수준(10가지), 종교, 삶에서 종교의 중요도, 사회 관련 견해(4) 동의 수준(4가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1~3순위), 사람 신뢰도(9가지), 매체 신뢰도(5가지), 매체 정보 이용 빈도(5가지), 주위 사람과 소통 빈도(9가지), 매체를 통한 소통 빈도(7가지), 사회 관련 견해(5) 동의 수준(4가지), 사회 관련 견해(6) 동의 수준(4가지)	92
F. 과학기술영역	과학기술 발전 관심도,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과학기술 발전의 인류 도움도, 과학기술 관련 견해(1) 동의 수준(6가지), 로봇 이용 경험(집, 직장), 로봇 관련 견해(2) 동의 수준(4가지), 로봇 우선 사용 분야, 로봇 일상화 예상 시기, 가상통화 평가, 향후 인류 삶의 우려사항, 2050년 한국의 모습(13가지)	20
G. 정책태도	일자리/노동 관련 견해 동의 수준(6가지), 원전 관련 견해 동의 수준(5가지), 빅데이터 관련 견해 동의 수준(2가지), 자율주행차 관련 견해 동의 수준(1가지), 대학 입시 결과가 수험생 미래에 미치는 영향, 대학 입시 학생 선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익 관련 견해 동의 수준(2가지), 층간 소음 해결 방안, 대학 입시제도 결정 시 의견 반영 대상(1~2순위), 대학입시제도 결정 방식, 원전 가동 여부 결정 방식, 현재 아파트 가격 조정 방향,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의 인권 제약 수용 정도, 국회의원 공약에서 중요한 내용, 대통령 공약 준수 필요성, 직장 내 권리 침해 시 바람직한 대응 및 실제 대응 방	32

주제	세부 문항	문항 수
	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1~3순위), 공익을 위한 내부 제보에 대한 평가, 님비갈등 원인, 내가 사는 마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 반응	
H. 인구통계학적 사항	성별, 출생년도, 최종 학력, 혼인상태, 자녀 수, 직업, 경제수준, 월평균 개인소득, 부모와 동거 여부, 거주지, 거주지 도시유형, 주거형태, 주거 소유형태, 출생지	14
합계	8개 주제	266개

2. 영역별 예비조사 주요 결과

가. 공통영역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68.9%(매우 희망적 13.3% + 다소 희망적 55.6%)로 부정적이라는 응답(24.5%, 매우 부정적 2.5% + 다소 부정적 22.0%)보다 2배 이상 많았다(모르겠다 6.6%). 경제 수준별로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시간은 11~20년으로 보는 시각이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10년(36.5%), 21~30년(8.7%) 등의 순이었다.

과거, 현재, 미래(2030년, 2050년)의 나와 한국, 세계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시기에서 한국과 세계보다는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나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갈수록 긍정적인 반면, 한국과 세계에 대해서는 현재를 과거나 미래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에게 있어서의 불행 요인은 경제적 불안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문제(23.4%), 일자리(14.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부정적 요인으로도 경제 위기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치 불안정(19.4%), 저출산, 고령화(16.5%), 북한, 통일문제(10.8%) 등의 순이었다.

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정이라는 응답이 28.7%, 경제 위기라는 응답이 27.2%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후변화(22.8%), 자연재해(14.7%)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국가로는 미국이라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15.4%), 북한(12.4%) 등의 순이었고, 미래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국가로도 미국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보다는 많이 줄어든 반면, 중국(24.9%)과 북한(22.4%)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1순위)로는 일자리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14.1%), 사회갈등 해소와 협력(13.3%), 과학기술 진보(10.8%) 등의 순이었다.

현재 대비 2050년 한국의 가장 큰 변화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응답(28.2%)과 인공지능과 로봇의 노동 대체라는 응답(20.7%)이 많았다. 20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응답이 2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바이오 기술(17.8%), 정보기술(14.9%), 기후변화(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정치영역

한국이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나타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은 10점 만점에 8.20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5.96점, 5.85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중심 합의제의 중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1, 의회중심 합의제를 5라고 할 때, 2.85점으로 대통령 중심제에 보다 가까운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에서도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22.8%), 직접 참여 민주주의(27.8%)보다 대의제와 직접 참여를 혼합한 민주주의(45.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치방법에 대한 견해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들이 국가정책을 주도해야 한다(2.80점), ‘국회와 선거에 구속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2.71점), ‘국

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2.6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가족이 4점 만점에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등 주변 지인(3.05점), 동호회 등 사모임(2.53점) 등의 순이었다. 지나가는 행인은 2.01점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수준의 기준점이 된 반면, 국회(1.71점), 정당(1.81점) 등은 이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치적 행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게시판 글쓰기와 청원 등 온라인 참여가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거리 서명이나 성명 발표(29.9%),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거리 시위(21.6%), 파업 등 물리적 행동(7.9%)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참여와 거리 서명이나 성명 발표는 20~30대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거리 시위는 50대의 참여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1순위)으로는 책임감(32.4%)과 도덕성(22.0%), 성실(14.9%)을 꼽았으며, 한국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1순위)으로는 도덕성(27.8%), 통솔력(13.7%), 수행능력(12.9%), 국민소통능력(12.9%) 등을 꼽았다. 정치관심도가 매우 많은 층에서는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 도덕성(32.1%)이 가장 높은 반면, 정치관심도가 전혀 없는 층에서는 책임감(42.9%)이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관심도와 정치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통일에 대한 견해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이 더 낫다는 응답도 39.0%로 낮지 않았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기로 제시된 3가지(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가 각각 32.1%, 33.6%, 3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일 예상 시기로는 20년 이내(28.2%), 10년 이내(26.1%), 20년 이후(22.8%) 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통일 후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감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았다.

통일 이후 북한 지원을 위한 통일세 징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세 징수에 대한 동의 점수 역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 관련 견해에 대한 8가지 사항을 조사한 결과, ‘사회질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에 대해 6점 만점에 4.6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4.66점), ‘지방보다 수도권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3.93점),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3.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¹³⁾을 통해 분류한 결과,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지방자치제도는 지금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인력·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지방분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사회질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평등(연계)로 설정할 수 있다. 3번 요인은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게 순응해야 한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유(위계)로 설정할 수 있다.

[표 3-5] 정치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구분 ¹⁴⁾	구성요소		
	1	2	3
지방자치제도는 지금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876	-.028	.054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831	.098	.111
중앙정부의 재정·인력·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818	.154	.121
사회질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035	.861	.088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	.197	.779	-.038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017	-.061	.809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게 순응해야 한다	.190	.115	.726
분산의 %	31.477	19.977	17.439
누적률(%)	31.477	51.454	68.893

13)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했다.

14) 지방보다 수도권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문항은 2번 요인과 3번 요인에 비슷한 수준의 적재량을 보여 제외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평등(연계)과 자유(위계)로 구분할 경우, 중앙집권에 관한 문항은 이 영역에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관한 응답 결과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앙 집중형 통치 방식’에 해당하는 주제로 변형하여 복수 문항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집권과 관련된 다수의 문항으로 구체화하여 본 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영역

가정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4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최상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신의 경제 수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을 확인했다.

여가생활과 직장 관련 일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여가생활이 다소 중요하다는 응답이 52.7%로 일을 우선하는 편(45.6%)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직장)을 선택하는 주요 요건(1순위)으로는 개인의 적성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연봉(29.9%), 안정성(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개인의 적성이라는 응답이 40.4%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4점 만점에 2.69점으로 동의하는 쪽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4점 만점에 2.68점으로 소득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관련 견해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첫 번째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와 관련된 견해를 묻는 9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쟁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3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3.29점), ‘돈보다 인간다운 삶이 중시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다’(3.24점), ‘물질적인 풍요는 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3.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경쟁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돈보다 인간다운 삶이 중시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탈물질주의’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고도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물질적인 풍요는 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물질주의’로 설정할 수 있다. 3번 요인은 ‘종교적·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나,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하기 부적절하여 배제했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3개 문항과 물질주의 3개 문항으로 명확히 분류된다.

[표 3-6]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1)

구분 ¹⁵⁾	구성요소		
	1	2	3
경쟁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797	.144	-.051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757	.002	-.079
돈보다 인간다운 삶이 중시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이다	.738	.049	.255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118	.774	.129
고도 경제성장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107	.747	-.284
물질적인 풍요는 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019	.723	.088
종교적·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046	.023	.949
분산의 %	25.454	24.352	15.409
누적률(%)	25.454	49.806	65.215

두 번째로 성장과 분배와 관련된 견해 4가지를 조사한 결과, ‘소득은 능력에 따라 차이내기 마련이다’가 10점 만점에 6.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5.85점), ‘경쟁보다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5.00점), ‘각자의 생계는

15) 직장이나 사회에서 개인적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항은 1번 요인과 2번 요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는 문항은 2번 요인과 3번 요인에 비슷한 수준의 적재량을 보여 제외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4.81점)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소득은 능력에 따라 차이내기 마련이다', '각자의 생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성장'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경쟁보다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분배'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2개 문항과 분배 2개 문항으로 명확히 분류된다.

[표 3-기]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2)

구분	구성요소	
	1	2
소득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vs 소득은 능력에 따라 차이내기 마련이다	.819	-.044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vs 각자의 생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759	.104
경쟁은 일의 효율을 높인다 vs 경쟁보다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	-.105	.820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 vs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172	.759
분산의 %	32.202	31.542
누적률(%)	32.202	63.743

세 번째로 경쟁과 협력과 관련된 견해 4가지를 조사한 결과,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도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가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6.23점), '내 몫이 적어지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의 경제 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6.06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5.68점)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내 몫이 적어지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의 경제 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도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협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협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2개 문항과 협력 2개 문항으로 명확히 분류된다.

[표 3-8]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3)

구분	구성요소	
	1	2
내 몫이 적어지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의 경제 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	.856	.067
경제성장이 둔화되어도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811	-.099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142	.831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78	.789
분산의 %	36.038	33.178
누적률(%)	36.038	69.216

네 번째로 복지와 관련된 견해 7가지를 조사한 결과,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도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가 10점 만점에 6.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6.23점), ‘내 몫이 적어지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의 경제 활동이 더 의미가 있다’(6.06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5.68점) 순으로 나타났다.

7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빈곤층 노인을 위해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부담이 있더라도 소외 계층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수직적 복지 확대’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부자에게도 아동수당과 노인연금을 주어야 한다’, ‘이민자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수평적 복지 확대’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적 복지 확대 4개 문항과 수평적 복지 확대 2개 문항으로 분류된다.

[표 3-9] 경제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4)

구분 ¹⁶⁾	구성요소	
	1	2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877	-.078
빈곤층 노인을 위해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875	-.029
세금부담이 있더라도 소외계층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	.821	.217
일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680	.079
부자에게도 아동수당과 노인연금을 주어야 한다	-.194	.841
이민자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340	.639
분산의 %	47.062	19.598
누적률(%)	47.062	66.660

라. 사회영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8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수준별로는 상층을 제외하고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있어서 대상별 중요도는 가족이 4점 만점에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3.25점), 직장(3.16점), 동호회 활동(2.73점), 지역 사회 공동체(2.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결정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조 등 조합활동이 4점 만점에 2.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활동, 정당 활동(2.36점), 직장(2.31점), 지역 사회; 공동체(2.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에서의 중요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1순위)으로는 책임감(23.2%)과 독립심(22.0%)이 20%를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도덕성(18.3%), 성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영역에서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1순위)으로 책임감(32.4%)과 도덕성(22.0%), 성실(14.9%) 등의 순으로 조사된 것과 유사한 양상을

16) 지금 내가 내는 세금은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문항은 1번 요인과 2번 요인에 비슷한 수준의 적재량을 보여 제외했다.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도는 10점 만점에 5.05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종교별로 종교의 중요도 점수를 살펴보면, 개신교가 7.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불교(6.65점), 가톨릭(6.16점) 등의 순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66점으로 매우 낮았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1순위)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동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실, 근면(25.3%)과 책임감, 강한 의지(18.3%), 관용과 이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성실, 근면과 책임감, 강한 의지라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반면, 관용과 이해라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상호 신뢰와 협동이라는 응답은 20대~50대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많았으며, 성실, 근면이라는 응답은 20대~50대에서 연령이 감소할수록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상별 신뢰도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4점 만점에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상사(2.76점), 이웃(2.63점), 같은 학교 출신(2.55점), 동향 사람(2.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 만난 사람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고, 탈북자가 2.17점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매체 정보 신뢰도는 공중파 TV가 4점 만점에 2.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종편채널(2.52점), 인터넷(2.51점), 일간신문(2.42점),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2.41점)의 순이었다. 매체별 이용 빈도는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인터넷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57.3%), 공중파 TV(46.1%), 종편채널(33.2%), 일간신문(15.8%)의 순이었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는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음에도 신뢰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에는 사회 영역의 일반적 의견을 묻는 질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⁷⁾ 개인과 집단에 관련된 견해를 10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와 직장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7.26점),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나 스스로 결정한다’(7.21점), ‘내 위치에서 나의

17) 예비조사에서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나, 요인분석결과 1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7.15점), '나의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7.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나의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내 위치에서 나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나 스스로 결정한다',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하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인 중심'의 개념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사회적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곧 나의 발전이다', '내 인생의 목표중의 하나는 부모님이 나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집단 중심'의 개념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4개 문항과 집단 3개 문항으로 분류된다.

[표 3-10] 사회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구분 ¹⁸⁾	구성요소	
	1	2
나의 행복은 나 자신을 위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다	.837	.146
내 위치에서 나의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다	.829	.319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나 스스로 결정한다	.826	.244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하다	.807	.286
사회적 전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133	.864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곧 나의 발전이다	.277	.723
내 인생의 목표중의 하나는 부모님이 나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272	.690
분산의 %	41.295	28.701
누적률(%)	41.295	69.996

경쟁과 협력으로 구분하는 개념적 축은 단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경쟁과 협력에 관련된 문항('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경쟁

18)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건강한 삶을 중요시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와 직장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등 3개 문항은 1번 요인과 2번 요인에 비슷한 수준의 적재량을 보여 제외했다.

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가 된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은 반대 차원의 협력에 대한 개념도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협력에 관한 측정 문항을 보완하여 본 조사에 추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과학기술영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도는 4점 만점에 2.76점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로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3.77점으로 매우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과학기술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3.70점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로봇 사용 경험은 집에서의 사용 경험률이 37.8%로 직장에서의 사용 경험률(2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로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는 제조업(17.8%), 건강 및 의료(1.4%), 우주탐사(15.4%), 청소 등 3D(14.1%), 군대 및 사회안전(12.4%),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돌봄(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봇 사용이 일상화되는 예상 시기로는 6~10년이라는 응답이 36.1%, 11~20년은 35.3%로 나타나, 대부분 20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인류의 삶을 위협할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는 지구 온난화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진 등 자연재해(29.5%), 경제위기(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50년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은 줄고, 개인 여가가 늘어날 것이다’에 48.1%가 공감했으며, 다음으로는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것이다’(46.1%), ‘국민의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을 더 많이 누릴 것이다’(42.7%), ‘외국 기업, 상품, 자본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이다’(40.2%) 등의 순이었다.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19.5%만이 공감해 가장 낮은 공감률을 보였다.

과학기술 분야의 로봇 관련 견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응과 저항에 관련된 4가지 견해 중, ‘로봇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에 대해 4점 만점에 3.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로봇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3.03점), ‘로봇은 위험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3.02점), ‘로봇은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것이다’(2.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번 요인은 ‘로봇은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것이다’, ‘로봇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은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적응’의 개념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2번 요인은 ‘로봇은 위험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로봇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저항’의 개념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응 2개 문항과 저항 2개 문항으로 명확히 분류되며 대립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표 3-11] 로봇 관련 문항 요인분석 결과

구분	구성요소	
	1	2
로봇은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것이다	.886	-.022
로봇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위험한 일은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840	.213
로봇은 위험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107	.826
로봇이 상용화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058	.825
분산의 %	37.652	35.221
누적률(%)	37.652	72.874

편의와 안전으로 구분했던 개념적 대립축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문항 중 방향성이 다른 한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줄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친숙하게 적응해야 한다')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해당 적재값을 감안하면, '안전'을 의미하는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 분야 중 '안전'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문항이 본 조사에 개발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비조사 결과 합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본 조사에 반영되어야 할 시사점을 조사 항목 내용과 조사방법상의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된 결과는 본 조사를 위해 보완점으로 제시되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가. 조사 내용적 측면

(정치영역)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지향적 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예비조사가 진행된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으나(1월 임시국회 파행), 여타 조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국회, 정당에 대한 낮은 신뢰도, 정치적 행동에 대한 높은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에서도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혼합한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의 선호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래 선호가치를 구분하는 축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평등(연계)'과 '자유(위계)'로 설정한 예비조사 결과, 중앙집권에 관한 문항은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관한 응답 결과에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해당 문항을 적절히 변형하여 '중앙집권' 지향적인 정치적 가치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경제영역) '성장'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필요하다. '성장'은 일반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예비조사를 통해 살펴본

성장의 의미는 국가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일자리 문제, 기업과 고용, 대기업의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익'의 관점도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분배'의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가치는 호혜적이며 합의적 이슈라 인식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예외적으로 다문화의 관점에서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에 수렴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경제 관점과 국가 차원의 경제관이 서로 상이하며 이익의 관점에서도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제 가치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선호가치를 구분하는 개념축으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성장'과 '분배'를 설정하였으나, 이외에도 개인-집단(사회, 공동체)-국가 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의 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적 분배주의자' 또는 '성장 중심적 탈물질주의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당 지급 중심의 '보편 복지' 정책을 확대할지, 아니면 개인(집단)이 선호하는 재화 또는 가치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 도입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사회영역) 개인(가정)과 사회집단(직장, 동호회), 지역 공동체, 공공영역(정당, 시민단체) 활동의 영역 중요성에 따라 가치의 인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서구의 조사결과와 달리, 한국의 응답자들은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의 완충지대인 '직장'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영역이 일상생활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장은 가족, 친구 다음으로 중요하고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결정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또한 대상별 신뢰도에서도 아는 사람 다음으로 직장 동료에 대해 높은 신뢰도 점수를 나타냈다. 직장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직장은 개인의 가치와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화롭게 융화되어 기능하는 영역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 영역과 공공 가치가 작동하는 영역이 중첩되는 '직장'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조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 영역에서는 가족, 친구관계, 향우회, 동창회 등의 활동에서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영역인 시민단체, 노조, 정당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가치는 공적 영역의 가치와 갈등적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주로 어떠한 정책 분야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으며 미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의 가치가 정책적 수요와 연계되는지 보다 심층적인 설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선호가치를 구분하는 또 다른 축은 ‘경쟁’과 ‘협력’이다. ‘경쟁’은 주로 개인과 집단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가치로 분석됐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가 된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 한다’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은 ‘경쟁’의 개념이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영역에서 경쟁의 가치가 지배적인 것과 달리, 공공 영역에서는 ‘협력’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규범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었다. 공공 영역, 지역사회 공동체 등 공적인 특성을 가지는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 협력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상생의 논리에 동의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을 통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에 관한 문항이 본 조사에서는 추가 보완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영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함께,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재해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 영역의 미래 선호가치를 구분하는 축인 ‘편의’와 ‘안전’의 대립축 중에서 ‘편의’적 측면의 가치에 대한 지향성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응’할 것인지 ‘저항’하는 부정적 가치는 가지는지 여부는 명확한 대립축으로 설정되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줄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친숙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관성있는 답변 군으로 분류되었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유의한 측면으로 구분되는 것은 감안하며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질문항을 본 조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조사 형식적 측면

이 연구의 예비조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예비조사의 조사 방법 측면이다. 이 연구의 기간이 매우 짧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조사 관심도 및 몰입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본 조사의 문항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므로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온라인 조사가 가지는 한계이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체 인구 비례를 고려해 볼 때 모집단이 되는 일반 국민의 고연령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밝힌다. 또한 청소년층인 10대의 유효표본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도 한계라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의 설계는 보다 체계적인 표본설계를 위해 세 영역의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현재의 선호가치와 미래 선호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 국민, 30년 후 한국의 중년층이 될 현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미래 가치와 정책 수요에 대한 진단과 가치-정책 연계 작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사 디자인을 토대로, 한국인의 미래상, 미래에 대한 태도와 인식, 미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지을 국민의 가치와 선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질문항 모듈 구성의 기초 작업을 시도하기로 한다.

제4절 |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 실행 방안

1. 조사 설계 및 항목 구성

가. 조사설계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A안)과 만15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B안)을 고려할 수 있다. A안의 경우 가구 단위 조사로만 해결할 수 있으나, B안의 경우는 학교 단위의 조사를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추가적으로 정책 4개 분야별 100명 내외의 전문가 조사를 구성하여 일반인 조사-전문가조사-청소년 조사 등 3가지 조사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본설계의 경우,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 조사구를 표집틀로 하되, 인구변동의 최신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조사대상으로 B안으로 할 경우, 전국의 고등학교를 표집틀로 하여 학급을 집락추출(Cluster Sampling)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표표본 수는 3,000가구로 설정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3,000가구를 A안으로 조사할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79\%p$ 이며, B안으로 조사할 경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20\%p$ 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방법은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하되, 특정 가구원을 선정하여 1가구 1표본을 조사하는 방안(A안)과 조사대상이 되는 전체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방안(B안)이 있다. A안은 KGSS 등에서, B안은 통계청 사회조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유치조사¹⁹⁾를 감안하면, B안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조사도구는 유치조사를 감안하여 구조화된 종이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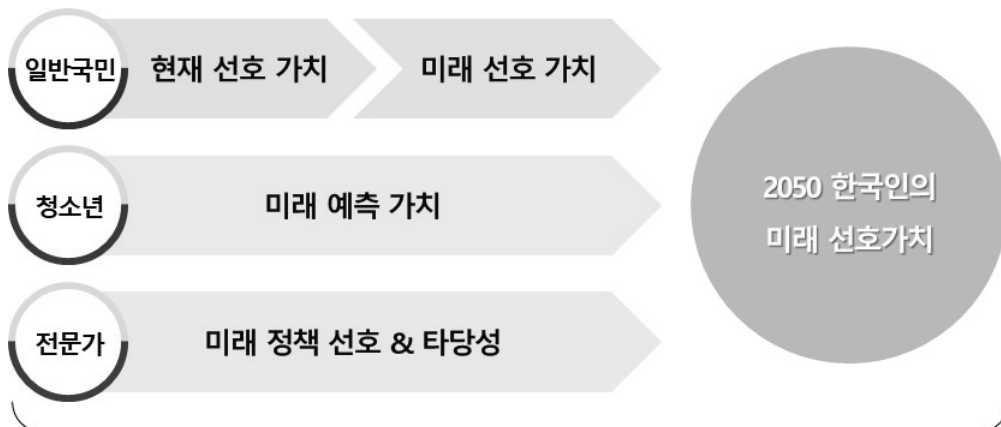
19) 가구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가구에 두고, 1~2일 후 재방문하여 회수하는 방식

나, 통계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웹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웹 주소를 전달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예산은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의 경우, 가구의 답례품(10,000원~30,000원), 조사원 수당(응답 표본 당 25,000원 내외, 교통비 포함), 자료처리 비용, 검증 비용 등을 감안하면, 표본 당 50,000원~70,000원이 소요된다.

조사기간의 경우, 표본설계 및 관련 기관 협조 등 조사 준비 기간은 약 1개월, 실 조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자료처리 기간과 검증도 약 1.5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관리에 있어, 조사 주관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하되, 조사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사의 관리체계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사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기타사항으로, 향후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는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가치 조사위원회(가칭)

[그림 3-2] 본 조사 설계

나. 항목구성

조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문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한다²⁰⁾.

[표 3-12] 조사 문항 구성(안)

주제	세부 문항
A.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A01. 미래에 대한 이미지 A02. 미래의 시간 범위 A03. 미래 관련 대화 빈도, A04. 10년 후 변화 예상(나, 한국, 세계) A05. 나의 삶 행복도(10년 전, 현재, 2030년, 2050년) A05-1. 불행한 이유 A06. 한국의 변화(10년 전, 현재, 2030년, 2050년) A06-1. 부정적인 이유 A07. 세계의 변화(10년 전, 현재, 2030년, 2050년) A07-1. 부정적인 이유
B. 현재와 미래의 한국	B01.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B02. 현재 한국에 영향 끼치는 국가 B03. 미래에 한국에 영향 끼칠 국가 B04. 향후 한국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요 현안(1~3순위) B05. 현재 대비 2050년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B06. 20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C. 정치영역	C01. 한국의 민주적 통치 수준 C02. 민주국가에서 산다는 것의 중요도, C03. 소수의 의견 존중 수준 C04. 향후 바람직한 정부형태 C05. 바람직한 민주주의 운영 방식 C06. 조직/사람의 신뢰도(10가지) C07. 한국 통치방법에 대한 선호도(4가지) C08. 선거 투표 참여도 C09. 정치적 행동 참여 경험(4가지) C10. 창조적 발상/성공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C11. 평소 생활에서 중요시 하는 덕목(1~3순위) C12.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1~3순위)

20) 본 조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는 조사회사의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만17세 이상, 성별, 연령별 비례배분하였으며 유효표본수는 241명이다.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본조사를 위한 문항구성에 반영하였다.

주제	세부 문항
	C13. 정치 관심도 C14. 정치 관련 주변인과 대화 빈도 C15. 한국에서 인권 존중 수준 C16. 통일 방식에 대한 견해 C16-1.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C17. 통일 예상 시기 C18. 통일 후 삶의 변화 예상 C19. 통일 후 통일세 징수 찬반 C20. 주관적 이념 성향 C21. 분산/집중/위계/연계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8가지) C22.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해
D. 경제영역	D01. 물질/탈물질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8가지) D02. 경제 상태 만족도 D03. 성장/분배 관련 동의 수준(4가지) D04. 여가생활과 직장 중 비중 D05. 직업(직장) 선택의 주요 요건(1~2순위) D06. 협력/상생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D07. 복지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7가지) D08. 소득불평등 감소 정책 찬반 D09. 정부 복지정책 찬반 D10. 취업/창업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E. 사회영역	E01. 삶의 전반 만족도 E02. 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도(9가지) E03. 남녀/인종 차별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6가지) E04.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 수준(9가지) E05. 결혼/직장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6가지) E06. 자녀 교육에 중요한 덕목(1~3순위) E07. 개인/집단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10가지) E08. 종교 E09. 삶에서 종교의 중요도 E10. 과학/종교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E11.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1~3순위) E12. 사람 신뢰도(9가지) E13. 매체 신뢰도(5가지) E14. 매체 정보 이용 빈도(5가지) E15. 주위 사람과 소통 빈도(9가지) E16. 매체를 통한 소통 빈도(7가지), E17. 경제/협력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E18. 남녀역할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주제	세부 문항
F. 과학기술영역	F01. 과학기술 발전 관심도 F02.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F03. 과학기술 발전의 인류 도움도 F04. 과학기술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6가지) F05. 로봇 이용 경험(집, 직장) F06. 로봇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수준(4가지) F07. 로봇 우선 사용 분야 F08. 로봇 일상화 예상 시기 F09. 가상통화 평가 F10. 향후 인류 삶의 우려사항 F11. 2050년 한국의 모습(13가지)
G. 정책태도 (가치와 연결되는 주요 정책 분야 문항을 추가)	G01. 일자리/노동 관련 견해 동의 수준(6가지) G02. 원전/빅데이터 등 관련 견해 동의 수준(8가지) G03. 대학 입시 결과가 수험생 미래에 미치는 영향 G04. 대학 입시 학생 선발에서 지켜야 할 원칙 G05.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익 관련 견해 동의 수준(2가지) G06. 층간 소음 해결 방안 G07. 대학 입시제도 결정 시 의견 반영 대상(1~2순위) G08. 대학입시제도 결정 방식 G09. 원전 가동 여부 결정 방식 G10. 현재 아파트 가격 조정 방향 G11.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의 인권 제약 수용 정도 G12. 국회의원 공약에서 중요한 내용 G13. 대통령 공약 준수 필요성 G14. 직장 내 권리 침해 시 바람직한 대응 방안 G15. 직장 내 권리 침해 시 실제 대응 방안 G16.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1~3순위) G17. 공약을 위한 내부 제보에 대한 평가 G18. 넘비갈등 원인 G19. 내가 사는 마을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 반응
H. 인구통계학적 사항	H01. 성별 H02. 출생년도 H03. 최종 학력 H04. 혼인상태 H05. 자녀 수 H06. 직업 H07. 경제수준 H08. 월평균 개인소득 H09. 부모와 동거 여부

주제	세부 문항
	H10. 거주지 H11. 거주지 도시 유형 H12. 주거형태 H13. 주거 소유형태 H14. 출생지

2. 표본추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표집틀(Sampling Frame)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표집틀의 부재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RDD(Random Digit Dial) 방식으로 성,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고 있으나, 본 조사와 유사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 조사구를 표집틀로 활용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심층문항에 대해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구성된다. 본 조사의 경우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표집틀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표본추출단위는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표본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랜덤으로 최초가구를 설정하고 그 가구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15~18가구 조사하고 있다.

표본추출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실시하는 방식(27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준용한다. 표본배분은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된 가구의 어떤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In-house Selection). 많은 조사에서 가구원 중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최근생일자법(The Latest Birthday)이나, 실사과정에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조사표본이 대체됨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더라도 청소년의 경우 조사 응답률

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전국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단위의 표본추출을 통해 청소년 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교조사의 경우, 교육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 15~19세 인구는 2018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828,656명으로 전체 인구(51,821,881명)의 5.5%, 조사대상 인구(만 15세 이상, 45,165,963명)의 6.3%로 가구 기준의 조사와는 별도로 Boost Sample로 조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조사된 표본에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사후가중을 적용함으로써 인구구성에 대한 최신성을 보완할 수 있다.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 가구원 수는 2.24명이므로, 3,000가구를 조사할 경우 전체 회수되는 표본은 약 6,720표본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학년별 1개 학급씩 총 3개 학교를 조사하면(1개 학급 당 30명 기준) 약 1,530명이 된다. 최종 조사되는 표본은 8,250명(6,720명+1,530명)이며, 국민 전체에 관한 분석은 6,720명으로, 청소년 분석은 1,530명으로 한다.

3. 조사주기와 방법

가치에 관한 연구는 2~5년 주기로 조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치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기도, 바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와 정책의 연계를 통한 방향성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조사할 경우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각종 지표조사에서 1년 이상 또는 5년 단위로 조사 주기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치 변화와 같은 인식과 태도 조사는 초기 표준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조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9년 최초 조사 후에도 질문항의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치군의 배열(대립축의 설정) 등 변화의 패턴을 추적하기 위한 재검토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한 양의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가치 변화와 정책 수요의 전망이 가능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또는 분야를 나누어 1년에 2~3회 라운드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일반인과 청소년의 경우 분리하여 설계하고, 온라인 사전조사(pre-test)와 면접조사를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 청소년 조사는 소속 학교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별, 학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학교별 우편조사나 교육부의 협조로 교육행정망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미래 가치와 정책 수요의 연계적 분석을 위해 대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미래상)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FGI)는 면접조사나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 수요에 대한 학계, 전문가 그룹, 경제계, 언론계, 과학기술 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심층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조사주체 및 조사과정 정리

조사 주관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미래 선호가치 조사위원회(가칭, 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ISSP 등 모듈로 구성된 조사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조사문항이외에 이슈가 되는 특별 주제에 대한 설정, 조사의 발전 방향, 조사기관 선정,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범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미래 선호가치 조사위원회’는 ‘세계 가치 조사’의 운영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며, 질문항의 타당성 검토, 조사 기관의 선정, 조사 결과의 타당성 평가 등 실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조사 자문과 조사 지표 개발 연구의 지침 마련 등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미래연구원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분과는 정치미래 분

과, 경제·사회미래 분과, 과학기술미래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하며, 각 분과에 2명씩의 위원을 둔다.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관리할 경우, 미래 선호가치 조사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며 조사 프레임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조사과정에 대한 실사 관리는 조사전문기관 자체에 구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나,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사주관기관이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사의 신뢰성은 실제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했는지(1단계),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2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물리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의 위치로 실제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개발된 GPS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통해 조사원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감리 감독이 필요하다. 2단계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응답자가 자기기입하도록 설계된 조사에서는 별도의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치와 태도에 관한 민감한 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을 잘 이해하고 답변하였는지 검증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지역별 30% 이상) 유선 검증을 통해 주요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5. 자료처리

앞에서 언급한 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자료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검증1: 지역별·조사원별 회수된 설문지의 최소 30%를 무작위 추출하여 유선으로 조사 여부 및 주요 내용 확인을 검증한다. 만약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별·조사원별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된 표본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 에디팅: 회수된 설문지를 담당 조사감독원 등이 검토하여 수정 및 재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코딩: 설문지를 코딩가이드에 따라 부호화한다.
- 자료입력: 교차코딩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한다.
- 검증2: 기초통계표를 작성하여 논리적 검증 및 이상값 검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자료처리 과정은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며, 앞에서 언급한 표본 수를 기준으로 실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자료처리 기간은 약 1.5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6. 자료의 활용

조사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의 내부적 활용과 대외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차별 자료의 체계화된 정리(DB화)가 필요하다. 자료의 DB화는 조사기관 변경, 담당자 변경 등 조사 관련자의 불가피한 변경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을 방지함은 물론, 상시적인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자료제공 방식은 원자료(raw data)를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기본적인 통계량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통계청)이 있으며, 통계량 등 기본적인 통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자료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적 활용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미래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KVS)’를 이용하여 미래가치 지표를 산출하는 경우 국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 수요에 대한 전망과 국가 예산의 투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인의 미래상과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내용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외부적 활용은 연차별로 관련 자료들이 생산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대한 학술 대회 개최(국회미래연구원에서 관련 자료 제공), 유관 학회에 자료 제공을 통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 미래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가치 조사 방법론의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미래 가치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가치 이론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탈서구적이며 한국적 특성에 맞는 가치의 실증적 검토와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선호가치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는 가치 지표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을 보다 지속적인 후속 조사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 조사(Korean Value Survey)’ 수행 계획(안)을 제안한다.

조사와 관련된 연차별 진행 계획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조사문항 개발, 검증 등의 실사(fieldwork) 진행 분야이다. 둘째, 조사 후 자료 검증과 지표 개발을 위한 준비, 연차별 조사 자료의 표준화된 DB 구축 등 자료 아카이브 구축과 관리 분야이다. 셋째, 효과적인 조사 관리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 내 ‘조사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운영의 원칙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래 선호가치 조사 수행은 1년차(2019년)~3년차(202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차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조사 문항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2년차(2020년) 이후 조사문항은 구조화된 조사 모듈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미래 선호가치 지표(index) 개발의 기초 정보 인프라로 활용된다.

표준화된 문항을 통해 가치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체계적인 자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미래 지표 개발과 정책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DB 구축 작업과 효과적인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3년차 이후 축적된 조사 결과는 지표(index)의 형태로 DB화되어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조사 자료 관리와 체계적인 미래 가치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 내 ‘조사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관리와 지표구성, 그리고 정책 수요의 진단과 미래 선호가치의 조사 프레임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부분이다.

[표 3-13] 연차별 미래 가치 조사와 관리 체계 로드맵(안)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사 수행	----	----	----	----	----
- 조사 문항 개발·수정					
- 질문 모듈 구성					
자료 축적과 관리		----	----	----	----
- 질문항 DB 구축					
- 미래 가치 지표 개발					
- 가치 연계 정책 수요 진단					
조사 관리 체계	----	----	----	----	----
- 조사 위원회 구성					
- 분과별 미래 가치 진단					
- 분과별 미래 정책 수요 평가					

제4장

2050년 분야별 전문가 선호미래

제1절 분야별 전문가 선호 미래 도출 과정

제2절 13대 분야 전문가 선호 미래와 그 특징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1절 | 분야별 전문가 선호 미래 도출 과정

1. 전문가 선호미래 파악의 중요성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선호미래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호미래연구를 다룬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해 한 사회의 선호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전문가들은 분야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반시민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분야별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 그룹들이 공유하는 지식들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 중에 어떤 미래를 선호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 탈원전의 미래나 교육의 미래를 시민들과 공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을 때도 전문가들이 생산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중요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 없이 국민에게 선호미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개인의 편향된 지식으로 우리사회가 정해야 할 중요한 미래를 논의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선호미래를 파악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미래가 가능하며, 그중에 전문가의 판단으로 선호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왜 선호하는지 그 이유 등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전문가의 선호 미래 분석을 위해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기후변화부터 정치행정까지 총 13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2050년 미래를 예측했다. 이 예측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은 표 4-1에서 정리했다.

205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기위해 ‘미래’와 관련된 문헌 및 SNS 데이터를 활용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미래 영향 환경변수를 표와 4-2에서 총 13대 분야로 개념화시켰다. 도출된 13대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되었다.

[표 4-1] 13개 분야별 2050년 미래예측 전문가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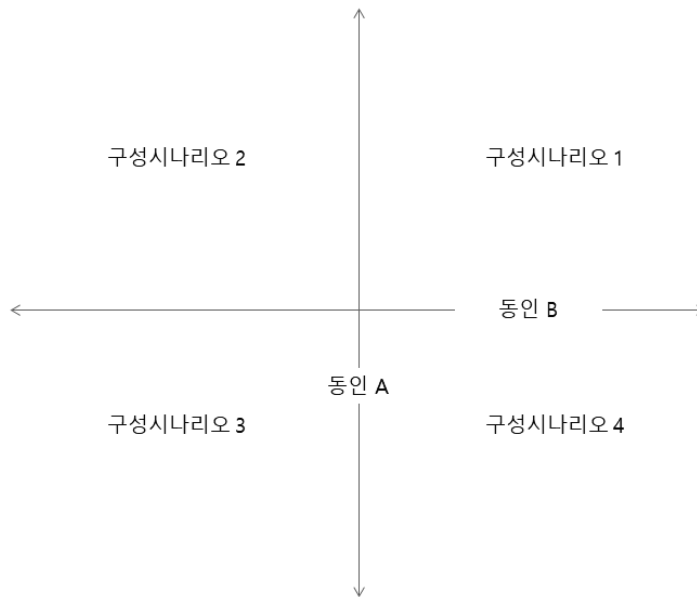
위탁연구 분야		연구수행팀	
① 기후변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STI (과학기술혁신)	② IT	FnS 컨설팅	윤기영
	③ BT	바이오키어	오문주
	④ 우주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이재우
⑤ 에너지·자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양혜영
⑥ 식량·수자원		국토연구원	조만석
⑦ 국제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허재영, 김태형
⑧ 북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김민철
⑨ 경제		다빈치알앤씨	최창욱
⑩ 정주여건		국토연구원	이용우
⑪ 사람(Human)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⑫ 인구·사회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최향섭
⑬ 정치·행정		한국정당학회	장승진

2. 전문가 선호미래 도출 과정

먼저, 각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궁금한 2050년의 미래 모습을 미래질문으로 도출하여 주요 동인화 하였다. 이때 각 분야별로 5개씩 추출된 주요동인을 활용하여 각 동인을 2개씩 조합하여 그림과 같이 2x2의 결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2x2 시나리오는 사분면을 형성하게 되며, 각 분면은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구성시나리오’로 정의한다(그림 4-1 참조).

2x2 동인 결합을 통해 한 분야 당 동인의 기계적 조합으로 총 10개의 동인 결합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기계적 조합은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없이 동인 간 우연에 의한 조합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함의를 시나리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후 연구팀은 분야별 1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종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각 분야별 결합시나리오를 재료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따라 미래의 유형을 3~4개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종합시나리오는 최종적으로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그림 4-1] 2x2 동인결합시나리오 예시

본 연구는 선호 미래의 분석을 위해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의 연구결과 중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미래구분’ 및 종합시나리오 중 선호 미래를 분야별로 발췌하여 채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대 분야 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행이 된 만큼, 동인 결합시나리오 및 종합시나리오의 ‘선호’는 해당 시나리오의 호불호가 극명할 경우는 선호가치에 따라 결정하고, 그 구분이 모호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각 연구팀의 전문가 토론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호 미래는 ‘전문가’ 선호 미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통해 별도 공론조사 및 설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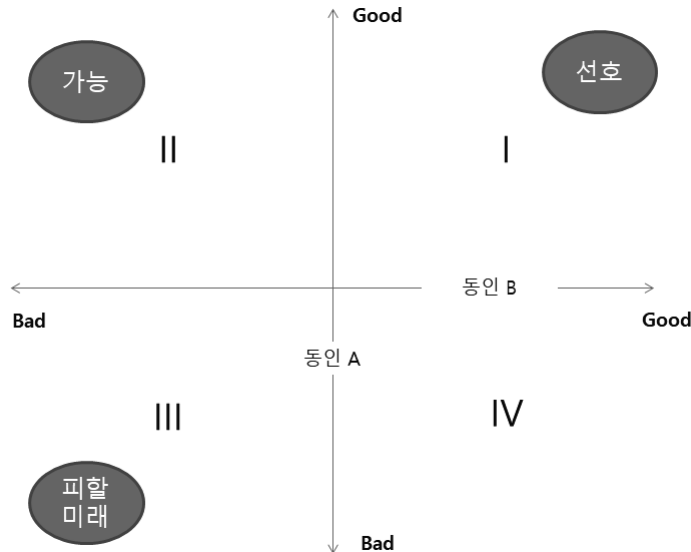
[표 4-2]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의 개념적 분류

이슈특징 \ 이슈범위	국내 이슈	국제 이슈
사람	사람(human)	
자연	식량·수자원	기후변화 / 에너지·자원
사람-사람	인구·사회 / 정치·행정 / 경제	국제정치 / 북한
사람-자연	정주여건	과학기술혁신(IT, BT, 우주)

13대 분야의 미래예측 및 시나리오 도출 과정을 통해 우선 동인 결합시나리오에서 선호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야별 5개의 동인은 2x2 동인 결합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동인 별로 극점(bipolar)를 갖는다. 분야별 전문 연구팀은 다양한 미래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2050년 극점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극점의 특성에 따라 이미 선호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그림 4-2 참조).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 주요동인이라면 극점은 경제성장률 상승과 유지(또는 하락)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사실상 선호가치가 포함된 동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이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작성에 사용된 동인의 극점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선호 경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2x2에서 선호되는 영역은 Good-Good에 해당하는 구성시나리오가 된다.

반대로 주요동인의 극점 특성에 따라 선호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정책에 있어 보편성 또는 수월성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호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민에게 선호를 물어 그 경향에 따라 선호 영역을 판정하는 것이 맞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선호를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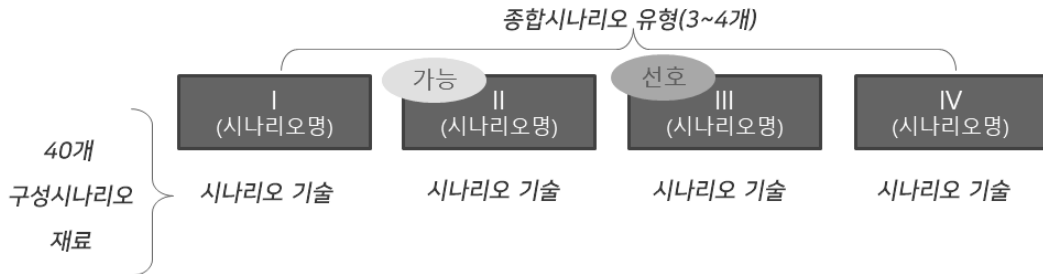


[그림 4-2] 2x2 동인결합시나리오의 선호 경향이 명확한 경우 선호 미래 판정

본 연구에서는 ‘선호’ 영역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선호의 판정은 2x2상에서 ‘가능’과 ‘피할 미래’를 함께 구분함으로써 가능과 선호가 서로 일치할 경우는 ‘낙관시나리오’로, 가능과 피할 미래가 일치할 경우는 ‘비관시나리오’의 구분에 활용하게 된다. 이때 낙관시나리오는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비관시나리오 오는 정책을 통해 회피해야 할 방향을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미래는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3. 분야별 전문가가 선호한 미래

분야별 10개의 동인 결합시나리오는 각각 4개의 구성시나리오를 가진다. 즉, 분야별로 총 40개 구성시나리오는 분야 종합시나리오의 작성에 활용하게 된다. 종합시나리오 오는 그림과 같이 3~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연구팀의 판단에 따라 Worst, Best, BAU(Business As Usual) 또는 발전, 정체, 파국, 전환과 같이 각 분야의 특성을 종합하여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림 4-3] 분야별 종합시나리오 예시

종합시나리오의 작성은 각 유형별로 상호 배타적으로 설정하여 선호가치에 따라 유형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도 있고, 앞서 언급한 Worst, Best, BAU 유형과 같이 선호가치가 내재적으로 포함된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종합시나리오는 각 분야별 주요동인을 통해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재료로 하여 미래 유형을 구분하였고, 또 이렇게 구분된 결과는 종합시나리오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의 프레임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배타적 유형의 종합시나리오 형태가 아닌 동인 결합시나리오와 같이 ‘가능’, ‘선호’, ‘회피’의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각 유형의 특징에 의해 판정되거나, 종합시나리오에 활용된 40개의 구성시나리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orst, Best, BAU로 구분한 종합시나리오에서는 ‘Best’가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가능’ 구성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유형화된 종합시나리오는 ‘가능’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선호’ 구성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유형화된 종합시나리오는 ‘선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시나리오 유형 및 해당 종합시나리오의 구성시나리오 재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 선호 종합시나리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앞서 동인 결합시나리오에서 선호 구성시나리오가 낙관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과 같이, 종합시나리오에서 선호 시나리오는 바람직한 또는 밝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지향전략(정책)’의 도출과 연계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절에서는 13대 분야를 기반으로 동인 결합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선호 구성시나리오 130개와 종합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총 10개의

선호 미래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시나리오 조합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동인 결합시나리오 및 종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 13대 분야 전문가 선호 미래와 그 특징

1.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 특징

가. 13대 분야별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 도출 결과

□ 기후변화·환경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한반도 연평균기온 x 극한기상현상	[완만한 아열대화] - 한반도 연평균 기온상승 완만하고, 극한기상 현상도 현재와 유사 - 남해안과 서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지역 중심으로 아열대화가 진행되지만, 국민들이 적절하게 적응하고, 생태계 교란도 크지 않음
한반도 연평균기온 x 미세먼지 농도	[재생에너지 강국] -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 대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며, 한반도 기온은 산업화 이전대비 2°C 이내로 완만하게 증가 - 대기오염이 저감되어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아열대 농작물이 식재료로 많이 쓰이며, 최종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충당
한반도 연평균기온 x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사회] - 한반도 연평균 기온상승 완만하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 남해안과 서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지역 중심으로 아열대화가 진행되지만, 국민들이 적절하게 적응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유지됨
한반도 연평균기온 x 녹지면적	[긍정적인 아열대화] - 한반도 평균기온이 다소 상승하고 녹지 증가 - 현재보다 작물 재배 기간이 연장되고,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하여 확대됨. 생육기간의 연장으로 산림이 풍부해짐
극한기상현상 x 미세먼지농도	[푸른 하늘 맑은 공기] -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며, 한반도에서 극한기상 현상은 증가하지 않음 - 국민의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최종에너지는 대부분 전기로 공급하며, 온화한 기후로 기후난민의 유입 증가함

극한기상현상 x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환경 지능정보사회] • 극한 기상현상이 RCP2.6 수준으로 발생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 • 극한 기상현상 예측 시스템과 대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음. 제품의 자원 순환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됨.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유되어 친환경 제품 구매로 이어짐.
극한기상현상 x 녹지면적	[생태계 서비스 확대] •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극한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녹지 증가 • 나무가 많아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가 줄어듦과 토양유실이 적어짐. 폭염이 발생하여도 도시의 열섬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시민들이 공원에서 열을 식힐 수 있음. 땀뻑하게 들어선 나무는 강풍을 막아주고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가 됨.
미세먼지농도 x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사회] • 화석연료 소비와 미세먼지 감소하며,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 • 화석연료 등 자연자원 사용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자원을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가 실현됨.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이 없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땅이 됨.
미세먼지농도 x 녹지면적	[희부연 녹지] •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감소하며, 자연상태의 녹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함 •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생태계서비스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이 높아지며, 자연경관 덕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부상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x 녹지면적	[생태계 회복] • 녹지가 증가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함 • 자연상태의 녹지가 증가하여 자연의 자정 능력이 상승하고,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감소하여 생태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함.

기후변화·환경분야는 한반도 연평균기온, 극한기상현상, 미세먼지 농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녹지면적 5개의 주요동인으로 동인 결합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주요 동인의 특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미래의 우려가 담겨있다. 그로 인해 동인 결합을 통해 선호되는 미래의 모습은 한반도 온도, 극한기상 현상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최대한 억제되면서,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미래가 선호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생태계 회복, 녹지면적 확대 등이 선호미래를 구성하고 있었다.

□ 에너지·자원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x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여부)	• 핵융합, 우주태양광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확보되고 상용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매우 낮은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지속된다면, 고에너지소비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 요인이 적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제조업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서 거의 무료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에너지 비용을 개인과 가정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재 판매비용에 부과될 수도 있다. 1인 1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무선 및 주행 중 충전인프라가 보편화된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x 에너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능성)	• 에너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공급자가 등장하고, 특히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에너지와 서비스 산업이 결합되고, 따라서 에너지 산업부문 고용창출이 증가한다. 에너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제조생산 부문이 활발해지고, 에너지 공유경제 개념도 확산될 것이다. • 에너지 관련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개인의 에너지 판매가 허용되면서 에너지 판매로 부가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등장할 것이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x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 총 에너지 소비량이 유지/감소될 경우, 에너지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 제조업중심 산업구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총 에너지 소비량이 유지/감소하므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개인/가정의 에너지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별 에너지 확보가 충분하므로 전기차 보급도 비교적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x 에너지 전환정책 대응 정도)	• 광물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신수요산업이 확대되고 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전환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기자동차 산업부문과 관련하여, 리튬 등 이차전지의 고가소재자원이 풍부하게 공급된다면, 에너지 전환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함께 전기차 발전의 주된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전기차가 산업주류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 개인/가정부분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효율 소비재 선호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전환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여부 x 에너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능성)	• 신에너지원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면, 신에너지원의 급격한 보급 및 확산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공급량이 풍부한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서비스의 결합 등 전 산업부문이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신에너지원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이 도입된다. • 에너지 시장 개방으로 에너지 발전원가가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이는 에너지소비가격은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에너지 상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1인 1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무선 및 주행 중 충전인프라가 보편화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각 가정마다 in-house 자동차 충전시스템이 보급될 전망이다.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여부 x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 풍부한 에너지 공급으로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져 소비재 등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다. 에너지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서 거의 무료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가 가능해진다. 에너지 비용이 매우 낮아짐에 따라 개인과 가정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재 판매비용에 에너지 비용이 부과되는 등 새로운 에너지 비용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 - 무료에 가까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in-house 충전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충전시스템, 주행 중 충전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여부 x 에너지 전환정책 대응 정도)	- 신에너지원에 의한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게 되면서 전환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신산업의 창출과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환정책에 각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면, 청정에너지, 환경오염 저감, 친환경 공정 등 관련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 에너지 전환정책이 강력히 시행됨에 따라 개인/가정은 고효율 소비재 선호현상이 확대된다. 산업부문의 혁신과 개인/가정부문의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선호현상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고효율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 화석연료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으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에너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능성 x 에너지 전환정책 대응 정도)	- 에너지 시장 및 유통의 혁신으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적절한 에너지 정책 대응으로 시스템 효율성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지되는 바람직한 미래 시나리오이다. -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서비스의 결합, 에너지와 소비재의 결합 등 전 산업부문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강력한 시행은 고효율 친환경 혁신을 유도하여 산업부문 시스템 효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고효율 소비재 현상이 확대된다. 전기자동차가 가전제품화되고, IoT, 홈네트워크, 스마트빌딩, 엔터테인먼트 등과 결합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한 서비스상품이 확산될 것이다. 화석연료 자동차는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으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x 에너지 전환정책 대응 정도)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의 목표가 가장 훌륭히 달성되는 경우로,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미래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 시나리오이다. 전환정책의 시행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 공정 효율화 등의 혁신일 일어날 수 있다. 산업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전환정책은 개인과 각 가정의 고효율 소비재 사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화석연료 자동차는 친환경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되고, 관련 인프라의 보급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에너지·자원 분야는 필수 광물 공급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신에너지 기술 확보, 에너지 시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능성, 에너지 소비량 변화, 에너지 전환 정책 대응 정도를 주요동인으로 선정하였다. 에너지와 광물은 미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계적 결합에 있어서는 다소 에너지 및 광물 간 결합의 함의가 상호 개연성이 높게 도출되지는 못한 한계는 있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전문가는 핵융합, 우주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원 기술의 확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안정화 되고, 관련 유통 및 시장 구조의 혁신, 총 에너지 소비량의 유지 또는 감소 수준의 수요 조절로 에너지 풍족 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물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선호는 에너지와 직접적인 개연성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만 필수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광물 산업, 제조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그러한 고에너지 소비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분야가 그리는 선호 미래가 뒷받침해주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 과학기술혁신(정보통신기술(IT)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3D 프린팅 제조업 대체 x 인공지능 기술 성숙)	[3D 프린팅의 일상화] • 생성 디자인(Generative Design)을 이용한 최종 제품의 출력이 일상화. 최종 제품의 의미에 큰 변화가 존재하고 제조산업의 큰 변혁 야기. 복수의 3D 프린팅 로봇이 협업에 의하여 건물 등 출력 • 3D 프린팅이 제조업의 전반에 변혁 야기 • 인공지능전문가 설문조사 및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일반 인공지능의 출현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3D 프린팅이 제조업 전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나, 관련기술의 발달과 재료의 확장으로 인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는 3D 프린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디자인은 재료를 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탁월하게 하며,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가능 • 관련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적응의 조화가 가능할 여지 존재
(3D 프린팅 제조업 대체 x VR 기술의 성숙)	[디지털 설계의 주도] • 가상현실세계에서 소비자가 취향과 목적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계를 진행. 가상현실세계에서 사용자 경험 수행하고 출력 • 최종제품의 의미와 활용이 달라지며, 제조업 연구/개발 및 제조의 라이프사이클 변화 • VR/AR/MR 등은 궁극적으로 후각, 미각 및 전체 촉각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가 발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일부 학자는 2030년 후반에 완전한 몰입형 가상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BMI 기술 발달로 보아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다만 시각과 청각 및 일부 촉각은 현재도 상당 수준 구현하고 있으며, 나안과 동일한 수준의 시각은 2020년대 중 후반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 • VR 기술의 발전은 상당한 사회적 변화와 혼란을 가져오기는 할 것이나, 상당한 장점과 사회적 이익도 보유 • 시각과 청각 및 일부 촉각의 대체는 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3D 프린팅 제조업 대체 x 블록체인 탈중앙화 여부)	[주문과 설계의 글로벌 강화] •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3D 프린팅을 이용한 도면 유통과 협업에 의한 설계 일반화 •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조업 공급망사슬관리로 글로벌 협업이 강화되고 인터스트리 4.0 정착 • 인터스트리 4.0은 독일의 입장, 즉, 다수의 강중소기업을 보유한 독일의 가치사슬통합을 위한 프로세스 통합의 측면이 존재 • 3D 프린팅이 핵심적 제조업을 대체하는 경우, 반도체 등의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의 핵심활동은 연구, 개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3D 프린팅을 이용한 연구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 • 다만 민간 중심의 블록체인 탈중앙화는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 • 동 미래 시나리오에 의할 경우,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
(3D 프린팅 제조업 대체 x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자동차 제조] •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은 자동차 공유 개념을 확대. 이에 따라 표준 자동차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3D 프린팅 제조는 예외적 • 자동차 공유경제의 일반화는 오히려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기회 제공 • 레벨 5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2050년 대중화할 것으로 판단 • 비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도시의 구조와 서비스 산업 등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 자동차 프레임 및 외관은 자동차 소유주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되어 출력될 것이고 유관산업 발달 • 이동의 자유와 편의성 제고 및 일부 공유경제로의 전환 등은 희망적 미래상 제시 • 이 밖의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Business As Usual(BAU)의 성격이 강해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 • 오히려 동 미래 시나리오가 다양한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설문조사에서도 미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옴
(인공지능 x VR 기술의 성숙)	[인공지능 이용 VR 콘텐츠]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5감이 동일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나, 그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그침 • 유사 일반인공지능에 의해 VR 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기업 및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 야기
(인공지능 x 블록체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 •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개인/기업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시가 유사 일반지능이면 이러한 연결을 빠르고 쉽게 연결해 개별 기업의 플랫폼 기업 종속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세계화 가속 •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중앙화 혼재의 경우에도 기업의 세계화 등은 어느 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x 자율주행자동차)	[인간 운전자 대체] • 완전한 자율 주행과 인공 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인지, 판단, 제어가 가능한 정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여 인간 운전자 대체. • 차량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구조 변화 • 현재 기술 발달 추이로 보아 가능성이 높음 • 인간의 이동의 자유를 보다 보장 • 공유 자동차의 측면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나, 인간의 이동거리 증가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의 촉진 위험 병존

	•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전기차로 그 에너지를 전환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수도 같이 감안할 필요
(VR x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의 보호/감시 강화] •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법적 유통과 세금징수를 위해 중앙집중식 블록체인이 강제화 •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경쟁으로 글로벌 기업 경쟁 격화 • 동 미래상에 대해 선호 및 피할 미래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즉, 동 미래상이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VR x 자율주행자동차)	[주거공간의 탄력화] • 원격근무의 일상화는 주거공간의 이동을 확대하게 됨. 이동 주택에 거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확대되고, 주거공간을 고정되지 않고 탄력화 • 디지털 노마드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증가와 지식사회로의 전환 가속 •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원격근무의 확대는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는데, 2050년에는 지식사회로 이행되었을 것이며 원격근무,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수용이 상당히 진척될 것으로 판단 • 동 미래상은 환경친화적이며 인류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가능성 제공
(블록체인 x 자율주행자동차)	[거래 방식의 혼재] • 자동차용 월렛이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로 구분되면 월렛이 있는 차는 ‘상점과 도로의 통합’ 시나리오에 대응 • 복수의 플랫폼 경쟁 격화 •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전망하면, 블록체인 기술 혹은 대안 기술은 탈중앙화와 국가 단위가 관리하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큼 • 현재 기술 발달 추이로 보았을 EO, 레벨 5의 자율주행자동차는 2050년 대중화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의 주행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책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 가능 •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 제고

과학기술혁신의 정보통신기술(IT) 분야는 3D 프린팅의 제조업 대체,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 VR 기술의 성숙, 블록체인 탈중앙화 여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성숙 등 5개 디지털 범용기술을 중심으로 주요동인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범용기술의 조합을 통한 동인 결합시나리오는 융합기술을 통한 산업, 경제,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분석되었고, 선호 미래는 5개의 기술 발전으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졌다. 즉, 5개 범용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대전환 및 관련 연구개발 수행 방법의 혁신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접목을 통해 비약적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혁신(생명기술(BT)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노화 극복 x 사이보그등장)	[Trans Human의 시대] 고성능 의료기기 및 치료제의 발달, 재생의료 및 원격의료의 발달로 수명연장이 되며, 웨어러블, 증강인간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 유용한 사이보그의 출현
(인간노화 x 인간유전체배아편집)	[Human과 Post Human의 공존] - 복제기술, 인간 배아세포의유전체 편집기술이 발달하여 새로운 개체 및 신인류 증가 - 유전체 편집 프로그램과정을 거쳐 출현한 무병장수형의 인간과 로봇은 산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며, 사고나 장애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짐
(인간노화 x 모든 질병치료여부)	[무드셀라의 시대] - 노화는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생각하여 예방과 치료가 가능. 노인의 기준이 90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 됨. 원격진료로서 질병의 조기진단 가능 - 국가적, 개인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나, 편리한 의료시스템을 제공 받을 수 있음
(인간노화 x 삶의 질 확보)	- 의료기술 발달을 통한 노화 극복 및 질병완치시대 도래 - 절대 인간성을 보유한 인간에 의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이보그를 도구로 활용하는 시대 - 과학기술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무병장수시대의 윤리 확보 - 과학기술에 맞는 사회적 정책수립을 통한 인간 질적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자연과 공존 할 수 있는 회귀성 인간애의 등장
(인간기능을 뛰어넘는 사이보그의 등장(증강인간기술) x 포스트 휴먼(디자인 베이비))	- 유전자편집 기술덕분에 효과가 뛰어난 신약개발 성공 - 완전한 인간이 사이보그를 통제하여 생활의 편의성증가 및 노동력으로 활용가능 - 인간배아유전체 편집을 질병치료 및 선천적 질환예방에 사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인간기능을 뛰어넘는 사이보그의 등장(증강인간) x 의료기술이 질병완치)	[노인 개념의 변화] - 사회적 합의를 거친 연명치료 재생의료기술의 도입 - 시대에 맞는 국가의 안정된 의료관리 시스템 정착
(인간기능을 뛰어넘는 사이보그의 등장(증강인간) x 의료기술이 인간 삶의 질 확보)	[완벽한 유토피아] 절대적 인간(현존하는 인간)이 사이보그를 생활의 편의에 의해 활용하고, 노화의 속도는 지연되며,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사회도래

(포스트휴먼 x 질병완치)	[새로운 치료방법의 등장] • 질병완치 시대 • 맞춤형 치료를 통한 무병장수가능, 유전자 드라이브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 합의부분까지의 출생과 유전성을 조절 가능 • 발생 가능한 사회적 테러, 과학의 무분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기구 등장
(포스트휴먼 x 의료기술을 통한 삶의 질 확보)	• 원만한 사회적 합의화 기술 활용을 통한 평균수명 연장 • 국가적, 개인적 의료비지출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적 지원 • 유전체 편집기술을 배아유전체에 도입하면서, 난치성, 선천성 질환에서부터의 태아보호
(질병완치 x 삶의 질 확보)	• 의료기술 발달을 통한 노화 극복 및 질병완치시대 도래 • 절대 인간성을 보유한 인간에의 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이보그를 도구로 활용하는 포스트 휴먼사회 • 과학기술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무병장수시대의 윤리 확보 • 과학기술에 맞는 사회적 정책수립을 통한 인간 질적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자연과 공존 할 수 있는 회귀성 인간애의 등장

과학기술혁신의 생명기술(BT) 분야는 노화 극복, 새로운 개체의 조작(유전자 기술), 증강인간기술, 포스트 휴먼의 등장, 의료기술에 따른 질병 완치가 5개의 주요동인으로 도출되었다.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는 유전자 및 의료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질병이나 노화의 극복을 통한 인간 수명연장과 관련한 희망이 담겨있었다. 다만, 새로운 개체의 등장 가능성, 무분별한 유전자 편집기술의 적용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이 구성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기술의 발전과 그 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선호 미래의 모습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과학기술혁신(우주기술(ST)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 x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	[인공위성 르네상스] • 우주발사체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인공위성 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는 지구궤도의 인공위성 르네상스 시대를 이끔
(인공위성 기술 발전 x 우주자원 개발)	[우주자원 공동탐사] •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과 지구자원 고갈은 우주자원탐사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가져오고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자원탐사가 이루어짐
(인공위성 기술 발전 x 우주환경 위협)	[우주 이상 징후 탐색 국제협력] •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우주환경 위협이 낮기 때문에 우주 이상 징후 탐색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짐
(인공위성 기술 발전 x 우주전쟁 가능성)	[우주평화시대] • 우주전쟁 가능성이 낮고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져 우주평화시대가 열림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 x 우주자원 개발)	[우주자원 개발 서부개척 시대] • 우주발사체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지구자원 고갈은 지구근접 행성 자원의 경제성을 높여 많은 나라가 우주자원 개발에 나설 것임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 x 우주환경 위협)	[최적 우주시대] • 우주발사체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우주환경 위협이 현저히 낮아 최적 우주시대가 됨
(우주 발사체 기술 x 우주전쟁의 가능성)	[우주산업시대 활짝] • 우주전쟁 가능성이 낮고 우주발사체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우주산업으로 연결됨
(우주자원 개발 x 우주환경 위협)	[안전/적극 우주개발] • 우주환경 위협은 경미하지만 지구자원이 고갈되어 우주개발에 대한 동력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적극적인 우주개발이 이루어짐
(우주자원 개발 x 우주전쟁 가능성)	[상호발전 우주개발] • 우주전쟁 가능성은 낮고 지구자원이 고갈되어 우주자원 개발 동력이 커져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상호발전 우주개발이 일어남
(우주환경 위협 x 우주전쟁 가능성)	[절제된 우주개발] • 우주전쟁 가능성과 우주환경 위협이 모두 낮아서 각 국의 우주개발이 절제된 상태와 국제협조 속에서 이루어짐

과학기술혁신의 우주기술(ST) 분야는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 우주자원 개발, 우주 전쟁 가능성, 우주 환경의 위협 5개를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의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주기술에서도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

래에 대한 기대가 선호 미래에 내포되어 있었다. 즉, 국제 협력과 공조를 중심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의 부흥은 인류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기술에서 태양 폭발, 우주 방사선 등에 의한 우주 환경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인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동인의 조합에 의한 선호 미래에서는 앞서 언급한 평화적인 우주개발 및 이용의 조건 속에서 외부 우주 환경의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기술적 협력 및 국제적 공조가 원활히 일어날 것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 식량·수자원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식량안보위험정도 x 국민식습관변화)	- 우리나라 자체 생산 식량이 국민 식습관 고급화에 맞추어 프리미엄화 되며 낮은 식량안보 상황에서 스위스,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수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임 - 쌀 소비를 자급하는 상황에서 사료작물의 원활한 수입과 일부 과수작물(열대성 과일 등) 등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수작물과 돼지·닭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해 시장이 더 크게 형성되며 수출에도 기여
(수질변화 x 기술발전)	자연 하천의 복원과 함께 친수활동(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등)이 도심에까지 확대 될 것이며 수도기능이 더욱 좋아져 수도 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의 '기능성 물' 공급 등도 가능해 질 것임
(식량안보위험정도 x 담수량변화)	- 원예작물은 과수와 채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수량이 충분하고 안보 위험이 낮을 때 우리나라 자체 농업다양성이 확대되며 자체 생산-자체 소비 식량 시장도 확대되고 국민 식탁에 오르는 식량의 다양성도 지속적으로 확충됨을 의미함 - 이와 함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경작농업 등도 지속 유지될 것이며 식량안보위험의 추가 감소에도 기여할 것임
(수질변화 x 국민식습관변화)	- 식량 다양성은 우리나라 자체 생산 식량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각 품목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게 됨을 의미함 - 국민 식탁에는 다양한 국내 과일·채소·축산물과 함께 대체육류 등도 오르게 될 것이며, 식량 시장 여건이 좋다면 프리미엄화에 따른 수출도 가능 - 높은 식량 다양성은 국내 식량 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통해 식량 안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식량 산업을 안정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것임
(기술발전 x 담수량변화)	'물 스트레스 낮음'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미래로서, '물 스트레스'란 가용 수자원 대비 소비량을 의미하는데 담수량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용수확보 이외에 고도 수처리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의미함 - 식량 분야에서도 높은 식량기술과 충분한 물이 주어진다면 국내 원예작물 산업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자체 식량 생산능력 증대로 식량 안보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임
(식량안보위험정도 x 기술발전)	- 농업 첨단화는 스마트 팜 등 자동화·첨단화·효율화 된 농업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식량 생산성 증가와 가격 안정화, 생산품·기술 등의 수출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 첨단화가 이행되면, 국내 농업 생산구조도 노동의존보다 자본의존 성격이 강해질 것이며 고부가가치화, 산업화가 가속될 것임 - 첨단 농업의 등장은 국내 식량 생산성 제고로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산 식량 다양성에도 기여할 것임 - 다만, 농업 인력 감소와 자본화 등에 따른 농촌 축소 및 농업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담수량변화 x 국민식습관변화)	• 친환경식품'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미래로서,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고급화된 국민 식습관에 발맞추어 다소 비효율적인 유기농 및 자연농법이 확산되어 식탁의 고급화를 선도하게 될 것임 • 또한 관개 시설 유지 등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면서 국내 농업의 경제성이 증대되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식량안보 및 농업 다양성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임
(수질변화 x 담수량변화)	• 수량·수질이 모두 양호할 경우 하천 자연성 회복도 빨라져 친수활동도 확대될 것이며, 물의 다면적인 이용도 더욱 가능해질 것임 • 식량 분야에도 국내 농업의 확대와 발전에 유리한 경우가 될 것임
(식량안보위험정도 x 수질변화)	• 프리미엄 푸드 수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미래로서, 우리나라 식량의 수출 본격화를 통해 국가경제 기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임 • 높은 수질 수준으로 농·축산업 모두 경제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이며, 세계 식량 시장의 상황이 좋아 해외 진출에도 유리해지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브랜드화 하여 스위스, 뉴질랜드 등의 모델로 이행도 가능한 경우임 • 국민 식탁에 오르는 국내 식량의 고품질화와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음
(기술발전 x 국민식습관변화)	• 식습관이 고급화되고 육류소비 비중이 큰 상황에서 식량 기술발전 수준이 높다면 대체육류(식물성고기, 곤충식량, 배양육)의 경제성이 제고되고 품질이 개선되어 크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식탁에서 영구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 • 대체육류 확산, 수직농업 확대, 스마트팜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의 키워드가 많으므로 선호 미래로 판단됨

식량·수자원 분야는 식량안보, 국민 식습관 변화, 수질오염 추세, GMO 기술 발전, 국민 식습관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하여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선호 미래 역시 식량과 수자원에서의 위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즉, 수질은 잘 관리되어 물 걱정이 없고, 식량안보 걱정 없이 오히려 프리미엄 푸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량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선호 미래로 그렸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스마트 팜 등 첨단 농업기술, 경제성이 확보된 대체 식량 기술, 수량과 수질 개선 기술 등 기술과 관련된 요소를 선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특징을 보였다.

□ 국제전략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미중 세력전이 × 일본의 군사강국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미중관계를 다루는 국제정치학자 20명 모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현상유지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세력전이를 통한 패권국의 교체도 없고, 일본의 재무장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서의 혼란과 갈등 및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으로 분석가능하다.
(미중 세력전이 × 경제적 상호의존)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유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질서와 경제협력에 유리한 국제환경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델파이 조사 응답 전문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미중 세력전이 × 국제기구의 영향력)	압도적인 비율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일방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미중 세력전이 × 중국의 권위주의)	전문가의 90%인 18명이 '미국 우위의 현상유지 하에서의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는 상황으로 선택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미국의 우위 유지와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 및 민주화가 안정적인 국제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국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발전한다면, 한반도는 '현상유지 속의 안정'을 기반으로 평화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군사강국화 × 경제적 상호의존성)	전문가의 95%(19명)가 일본의 군사력 현상유지로 동북아시아 지역질서가 유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되어 지역협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는 상황으로 선택했다. 일본 군사력의 현상유지가 동북아시아 및 안정적인 국제질서에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일본의 군사력은 강화되지 않고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강국화 × 국제기구의 영향력)	전문가 20명 모두(100%), 일본의 군사력 현상유지와 국제기구의 영향력 강화가 국제질서 및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본의 군사력 현상유지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역할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이 안보와 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증가되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강국화 × 중국의 권위주의)	전문가의 90%(18명)가 '일본의 군사력 현상유지 및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를 동북아 국제질서 안정에 가장 우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이 군사력을 현상유지하고, 중국이 권위주의체제의 약화를 통해 안정적 분권화 또는 민주화를 이루게 된다면, 지역 차원의 협력 가능성이 증진되고 동북아시아의 자유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한국에 대한 외부적 위협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 × 국제기구의 영향력)	•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기구의 권한 및 영향력 강화가 안정적인 국제질서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데 모든 전문가(100%)의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국제규범의 준수와 상호존중이 심화되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 특히, 안보보다 경제 중심의 다자주의가 활성화됨으로써 한국 대외정책의 공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영향력 강화로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의 안보 및 경제 이익에도 부합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 × 중국의 권위주의)	• 전문가 집단의 85%(17명)가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및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 상황이 한국 및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안정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권위주의가 약화되어 민주화의 방향으로 선화하면, 국내정치를 안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및 민주적 가치를 수용하게 되면서 한국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는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한반도 평화정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제기구의 영향력 × 중국의 권위주의)	• 전문가의 90%(18명)이 국제기구의 영향력 강화와 중국의 권위주의 약화가 현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 중국의 권위주의의 약화 또는 민주화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증대되면, 중국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고, 국제기구의 영향력의 강화는 국제관계에 규범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력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전략 분야는 미-중 관계,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중국의 민주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여부, 국제기구의 역할을 5개의 주요동인으로 하여 결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앞서 선호 미래는 바람직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정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제전략 분야는 주요동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인의 외생성이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선택했더라도, 정책의 선택을 통해 해당 미래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지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전략 분야의 선호 미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리한 국제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의 바람직한 상태를 전문가적 판단을 중심으로 기술한 특징을 갖는다. 즉, 미국과 일본의 현상 유지 속에서 중국

의 권위주의가 약화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기구의 중재 역할이 영향력을 가질 때 한국이 가장 유리한 국제 관계 속에서 대응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북한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정치권력의 공고화 여부 x 경제 개방 여부)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북한의 경제 개방 조합은 북한 정권의 안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력의 공고화 여부 x 사회 다원화 여부)	권력 강화와 사회 다원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개발독재 형태의 정경유착은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체제 전환을 가능케 하는 사회 내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의 공고화 여부 x 비핵화 여부)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정권의 대내외적 안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국제관계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 보유보다는 비핵화를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로 인식하며, 김정은 권력의 약화로 인한 불안정보다 권력 강화에 따른 안정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력 공고화 여부 x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	권력 강화 여부와 상관없이 우호적 대외환경을 선호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고, 이는 북한의 주변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유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경제 개방 여부 x 사회 다원화 여부)	경제 개방과 사회 다원화가 함께 진행된다면 우선 자유화된 시장경제를 기대할 수 있고, 점진적 사회변동을 가능하게 할 중산층 및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민주적 제도를 도입한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 가능성이 높고,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시나리오이다.
(경제 개방 여부 x 비핵화 여부)	비핵화와 경제 개방이 최선호 시나리오라는 것에 전문가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이런 조건은 북한 시장경제 발전과 함께 북한 정치가 자유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 개방 여부 x 북한이 마주할 국제환경)	북한이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대외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은 안정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복합적 상호의존론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세계 경제에 편입한 북한은 국제사회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위협적인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공존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사회 다원화 여부 x 비핵화 여부)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이 사회 다원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시장경제의 발전과 보다 자유화된 제도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이다.
(사회 다원화 여부 x 북한이 마주할 국제환경)	통치 유형에서는 현행 개인독재 혹은 개인독재/일당독재 혼합형에서 일당 권위주의 유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선호할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10 (북한이 마주할 국제환경 x 비핵화 여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면 북한이 경제적 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호미래로 볼 수 있다.

북한 분야는 백두혈통 정치 권력 유지, 비핵화 프로세스, 대외환경,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사회 다원화 여부를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였다. 앞서 국제전략 분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분야의 주요동인도 사실상 정책적 선택에 의해 미래를 바꾸기에는 외생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 분야의 선호 미래 역시 주요동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 내부 요인의 방향을 전문가 판단으로 기술한 특징을 가졌다. 즉, 백두혈통 정치 권력의 공고화, 북한 사회의 다원화, 비핵화, 경제 개방을 통해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북한 미래의 모습으로 도출되었다.

□ 경제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1인당 GDP x 소득격차)	• 성장도 잘되고 소득 격차도 해소되는 미래 • 1인당 소득성장 지속(선진국 수준) • 대다수 국민들이 골고를 잘사는 경제
(1인당 GDP x 경제적 세계화)	• 세계화 진전과 고소득 • 1인당 소득성장 지속(선진국 수준)
(1인당 GDP x AI에 의한 인간노동 대체)	• 소득성장과 일자리 유지는 누구나 반기는 미래 •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제한적
(1인당 GDP x 암호화폐)	• 암호화폐 확산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 • 암호화폐의 전면적 유통
(소득격차 x 경제적 세계화)	• 세계화 진전과 함께 소득 격차도 완화
(소득격차 x AI에 의한 인간노동 대체)	• 일자리가 유지되고 소득 격차도 완화되는 미래
(소득격차 x 암호화폐)	• 암호화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득격차 개선
(세계화 x AI의 인간노동 대체)	• 일자리가 유지되고 우리 경제의 특징인 개방형 경제가 지속
(세계화 x 암호화폐)	• 현재의 우리 산업구조와 부합
(AI의 인간노동 대체 x 암호화폐)	• 현상유지로서 불확실성이 적음

경제분야는 1인당 GDP, 소득격차, 경제 세계화 추세, AI의 인간노동 대체여부, 암호화폐의 유통 정도를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였다. 동인 결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 격차가 완화되어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세계화의 진전은 이러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AI에 의한 노동대체와 암호화폐의 유통 정도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정도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정주여건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거주 유연성 x 거주 집중도)	- 거주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산하여 거주, 유연한 근무는 원격농촌에까지 분산 거주를 더욱 증가시킴 -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Main House는 본인 소유, Sub house는 자가 또는 렌탈 형식으로 다주택 이용이 보편화된다.
(거주 유연성 x 교통수요)	- 과학기술의 발달로 면대면 접촉 대신 가상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고 유연근무제가 보편화되어 거주지 선정에서 직장과의 거리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주유연성이 높아지는 미래모습이 그려진다. 유연근무제 및 가상접촉의 활성화로 모바일 오피스 근무자 및 노마딕한 근무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을 위한 업무공간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출퇴근'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 도시 관제기능 등의 업무로 출퇴근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주중 근무시간 중에 직주 근접하여 거주하고 근무를 마치면 도시 주변의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지역 거주를 보인다. 가상접촉의 발달 등으로 교통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거주 유연성 x 안전)	- 거주의 유연성이 높아지며, 스마트 침단 보안·방재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SOC 및 생활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사회이다. 안전을 중요시하여 기관 및 건물마다 안전에 관한 부서 또는 시설관리 실을 별도로 두어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기간 인프라 등의 관리도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에서 실시한다. - 렌탈 안전케어와 같이 난방, 에어컨, 수도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민간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으며 높은 빌트인이 보편화된 주택을 기반으로 거주 유동성이 높을 것이다. - 각 주택의 안전인프라는 국가의 중앙 안전국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생체반응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인식하여 관리하고, 로봇 등이 항상 감시하여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거주 유연성 x 일자리 집중)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일자리의 고른 분산이 이루어지며,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 도심으로 역할했던 공간 내에 주거공간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신할 공유공간이 증가할 것이다. 서울 및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가 발전하여 '지방도시 소멸'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전국의 집값이 평준화될 것이며 교통결절지 및 문화생활이 집중된 다양한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될 것이다.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토지이용이 일자리가 분산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주 집중도 x 교통수요)	저밀도의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가상접촉 및 디지털 접근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든 목적 통행이 감소한다. 업무, 여가 등의 활동이 가정 내에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지 않고 분산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활동 및 통행에 제약 받는 인구가 증가하며, 이들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이 디지털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는 감소한다. 다양한 활동이 각 가정 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주 집중도 x 안전)	저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수준에 부응하는 방재, 방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전한 사회이다. 거주지구별 분리가 발생하며 지구 내부의 보안, 안전 설비가 증가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 보급으로 교통사고 발생

	률이 감소한다. 대규모 재해(화재, 전염병) 발생 시 거주 집중도가 낮은 경우 밀집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드론을 이용한 이동식 CCTV가 보급되면서 분산된 주거지역에서도 안전/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거주 집중도 x 일자리)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정책에 따라 일자리는 분산되었으며, 그동안 도심권 위주 고밀 주거지에서 분산되어있는 저밀 주거지로 변화된다. 거주지의 위치와 일자리의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예: 화상회의 증가). 거주지와 일자리 위치에 따라 두 가지 미래 상 제시가 가능하다. 거주지의 위치와 일자리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거주지의 위치와 일자리의 위치가 상이한 경우에도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통행 시간/통행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적다. 일자리의 분산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교통수요 x 안전)	가상접촉, 디지털 접근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접근을 대체하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SOC 및 생활인프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재난·재해로부터 방재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한다.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관련 서비스가 증가한다. Virtual Society Communication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Gated Community 형태와 같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거지가 증가한다.
(교통수요 x 일자리)	디지털화된 직업들은 면대면 환경보다는 증강환경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추구하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 주변에 거주하는 직주 근접이 증가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주변에 종사자를 위한 단지형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사택단지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서 교통수요가 감소한다.
(안전 x 일자리)	균형발전 기조에 맞추어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첨단기술이 발전한 안전한 사회이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으며 일자리 분산과 이에 대응하는 주거지 선정으로 집중거주가 완화된다. 전원주택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많은 거주환경을 선호한다. 교통수단 내 전염병,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과 같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권역별로 대처(통행 차단하거나 방역)하여 전국적 확산을 저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재난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내재해성 교통수단이 발달(지하철 트랜스포머)하였다. 개인이동수단(예: 1인 튜브트레인 등)이 증가한다. 홍수 발생 시에도 방수기능 강화 등 재난별 맞춤형 시설이 설치되어 안전하다.

정주여건 분야는 거주 유연성(직주 분리 등), 이동거리(교통 수요), 수도권 집중 경향, 거주 밀집성, 거주 안정성을 주요동인으로 결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원격 근무 또는 가상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거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선호 미래의 모습으로 그렸다. 그로 인해 교통 수요가 감소되고, 일자리 또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였다. 다만, 여전히 높은 거주 밀집성으로 인한 거주 안전성 문제는 첨단기술, 안전·재난 인프라 및 관련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확보가 필요함을 선호 미래를 통해 강조하였다.

□ 휴먼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인간 수명의 양적인 연장 x 인간 개체성의 확장)	- 인간의 수명이 150살까지 늘어나지만 인간은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 - 기존의 질서가 상당히 유지되지만 수명의 연장으로 욕망의 충족이 있을 것임 - 인간의 수명이 과거 100년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호모사피엔스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있음
(인간 수명의 양적인 연장 x 인간의 종교성의 변화)	- 인간의 수명이 100세 정도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형태의 윤리체계와 종교가 유지될 것임. - 수명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지속될 것이며, 현재와 큰 변화가 없어 안정적으로 사회가 유지될 것임
(인간 수명의 양적인 연장 x 가족관계의 양상 변화)	- 휴먼의 수명이 150살까지 늘어나지만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유지될 것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임 - 최근까지 4대가 한 가정에 살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도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인간 수명의 양적인 연장 x 인간의 과학기술 통제가능성)	- 수명이 연장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발전된 기술로 인해 인류는 지금과 큰 변화는 없지만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음. - 수명이 연장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발전된 과학기술로 인해 수명이 연장된 인류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이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인간의 종교성의 변화 x 인간의 과학기술 통제가능성)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제어할 수 있지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내용에 따라 종교성의 변화가 유발되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 베이비 등 생명과학 기술과 자율성을 갖는 AI 기술은 그 내용상 인류의 문화와 사회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현대 종교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
(가족관계의 양상 변화 x 인간의 과학기술 통제가능성)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제어할 수 있지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 -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세포 클로닝 등 생식과학의 발전 및 디자이너 베이비 등 생명과학 기술과 자율성을 갖는 AI 기술은 그 내용상 현 가족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휴먼은 13대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수행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수를 보인 키워드였다. 휴먼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의 수명, 종교의 소멸 여부, 과학기술의 통제 가능성, 인간 개체성의 확장, 가족의 해체 여부가 주요동인으로 도출되었다. 휴먼과 관련된 환경 요인에 대해 폭넓은 주제를 주요동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들 주요동인의 기계적 결합을 통해 특별한 함의를 얻기 어려운 조합에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한 선호 미래를 선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휴먼 분야의 주요한 선호 미래의 모습은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하여 종교, 윤리체계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미래로 나타났다. 다만, 과학기술의 통제 여부에 따라 유전자 기술 등에 의해 가족관계 또는 종교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술 발전에 대한 통제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인류 문화와 사회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 인구사회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나/가족동인 x 면대면)	• For the Family (59.6%) • 나의 삶보다 가족형성을 더 중요시하고, •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나/가족동인 x 경쟁/협력동인)	• Community Again (51.9%) • 나의 삶보다 가족형성을 더 중요시하고, •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더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가족동인 x 현재/유토피즘)	• Devotion (32.%) • 나의 삶보다 가족형성을 더 중요시하고, •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참을 것
(나/가족동인 x 집중/분산동인)	• Equilibrium (51.9%) • 나의 삶보다 가족형성을 더 중요시하고, •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 - 가부장제 소멸, 사회적 평등 가능성 증가
(면대면 동인 x 협력/경쟁동인)	• Social Capital (98.1%) •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더 협력 - 사회신뢰, 사회자본의 증가
(면대면동인 x 현재/유토피즘동인)	• Hand in Hand (51.9%) •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참을 것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공감과 행동
(면대면동인 x 분산/집중 동인)	• Division of Role (100%) •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 - 역할들의 분업화를 통한 구조변화
(협력/경쟁동인 x 현재/유토피즘동인)	• 미래충성심 (50.0%) •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더 협력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참을 것 -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여 미래를 위해 참는 행위들
(협력/경쟁동인 x 분산/집중동인)	• 협동조합(100%) •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더 협력하게 될 것이고,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 - 상생의 원리 작동. 생존보다 공존
(현재/유토피즘동인 x 분산/집중동인)	• Social Governance(51.9%) •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참을 것이고,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 - 사회개별집단들 중심의 권력거버넌스

인구사회분야는 가족증시문화 유지 여부, 사회적 관계 변화(수직적, 수평적), 현재와 미래의 상대적 가치, 사람 간 직접 대면의 필요성, 경쟁 대 협력 간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나타난 선호 미래의 모습은 가족 형성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기반으로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또한, 부와 권력이 다수에 분산되어 사회적 평등 가능성이 증가하는 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사회분야의 주요동인은 극점의 선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경쟁과 협력, 가족형성과 나의 삶,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등은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준으로 선호 미래를 선택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선호의 방향을 묻는 것이 선호의 완결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정치행정 분야

결합 동인	선호시나리오 주요 내용
(이념갈등 × 문화갈등)	-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고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면서 이념적 대립이 약화됨. - 다문화인구가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고, 젠더 간 갈등이 해소되며, 성소수자들이 주류사회와 평화적으로 공존함.
(이념갈등 × 정부신뢰)	이념갈등이 낮고 새로운 쟁점이 등장해도 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나타남.
(이념갈등 × 지방자치)	- 이념갈등이 약화되고 지방자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이 나타남. -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지방자치의 형태가 나타남.
(분배이념갈등 ×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참여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유권자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보임.
(문화갈등 × 정부신뢰)	문화갈등이 해소되어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안정적인 사회가 나타남.
(문화갈등 × 지방자치)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관용성이 높으며 지방자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이 발현되는 통합과 공존의 사회가 달성됨.
(문화갈등 × 전자민주주의)	-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제고됨. - 다양한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고 이들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입법화됨.
(정부신뢰 × 지방자치)	- 높은 정부신뢰와 지방자치 강화가 결합된 가장 이상적인 사회. - 각 지역의 실정에 다양한 정책실험이 가능함.
(정부신뢰 × 전자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민의 정치참여도 일상화된 이상적인 정치가 등장함.
(지방자치 ×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제고가 지방분권화와 결합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실현됨.

정치행정분야는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도, 지방자치요구, 전자직접민주주의의 등장을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여 동인 결합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인구사회분야에서 주로 사회적 관계, 대면접촉의 필요성, 경쟁 대 협력 등 사회 체제 내에서의 갈등요소를 주로 다룬 반면, 정치행정분야에서는 이념, 문화 등 정치적 불안요소로서의 갈등을 주요동인을 도출한 특징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적 요소가 해소되는, 즉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고 이념 갈등 상황을 정부 해결 능력을 통해 안정화하는 미래를 선호하였다. 그로 인해 중앙과 지역 간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전자민주주의의 확대로 국민의 정치 관심 및 참여도가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사회를 선호 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2. 종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 특징

13대 분야	'선호' 종합시나리오의 내용
기후변화·환경	[포용발전 녹색순환] 기후변화가 기회가 되는 시나리오이다. 개발면적이 줄어들고 녹지가 늘어나서 생태계가 회복되고, 이상기상이 빈발하는 환경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충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높아진다.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생태계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자원순환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녹색산업이 산업발전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
에너지·자원	[친환경 에너지 사회] 친환경 에너지 사회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 구현, 총 에너지 소비량 감소가 달성된 사회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렴한 에너지 공급보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규모 화석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재생에너지 등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발생하는 갈등 중 국민들이 중앙집중형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확보된 사회가 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자립 및 분산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의 각종 계획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각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계획이 구체성과 이행력이 확보되어 에너지부문 지방 분권이 이뤄지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IT)	[IT KOREA의 글로벌 비상] 인공지능의 창의적 R&D와 3D 프린팅 기술발전으로 인한 제조 경쟁력 강화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성장동력을 창출. VR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신디지털 노마드가 일반화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협업, 업무, 거래 관계의 신뢰를 보장해 줌. IT 범용기술의 확보 정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우려되나,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과 기술통제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지식사회로 순조로운 전환이 이루어짐.
생명기술 (BT)	[진시황의 꿈의 시대] 의료기술 및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하여 노화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질병 완치 시대에 도래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과 윤리적 규정들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무병장수시대의 윤리시스템과 그 규정들이 확보되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신체적, 지능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보그”를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정책수립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연계됨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높은 삶의 질은 인간에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자연과 공존하는 것을 갈망하게 하는 “회귀성 인간애”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주기술 (ST)	[우주강국, 대한민국] 우주 국제협력 증진, 한국 우주개발 적극적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급진적 발전이 이루어져서 우주 탐사 여건이 조성됨

	• 희토류와 같은 자원의 수요가 늘어나 우주 자원의 경제성이 높아짐 • 인공위성과 우주 발사체 기술은 발전하고 우주환경 위협이 낮음 • 우주전쟁 가능성이 낮아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우주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국가와 민간 기업이 우주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남
식량·수자원	[첨단농업기반 수출국기] • 기후변화 영향이 크지 않아 수자원 확보가 수량·수질 측면에서 원활하고, 식량 분야 기술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첨단 농업 시대로의 이행이 가능 • 농업 첨단화는 스마트 팜 등 자동화·첨단화·효율화 된 농법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식량 생산성 증가와 가격 안정화, 품목 다양화, 생산품·기술 등의 수출도 가능해 질 것임 • 국민 식량 소비가 지속적으로 고급화되고 경영효율화에 의해 충분한 경제성이 갖춰진다면 국내 식량 시장이 프리미엄화 될 것이며, 특히 원료·사료작물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일·채소작물과 돼지·닭 등 국내 축산물, 기능성 식량 등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가 가능 • 또한 농업 첨단화가 이행되면, 국내 농업 생산구조도 노동의존보다 자본의존 성격이 강해질 것이며 고부가가치화, 산업화가 가속될 것인데, 이 때 농업 인력 감소와 자본화 등에 따른 농촌 축소 및 농업일자리 관련 사회문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국제전략	[평화공존모델] 미국 우위의 국제체제가 지속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국제기구의 영향력 또한 강화되어 국제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는 환경이 마련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현상유지 되고 중국의 권위주의가 약화되어 점진적으로 민주화되는 과정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북한	[북한체제의 전환] 개혁개방의 성공이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 반체제 운동을 넘어 민주화에 성공한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변화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안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유혈적 체제전환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여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국제환경에 편승하여 북한경제는 개발될 것이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발전에도 성공할 것이다. 기본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상당히 인정하는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며 자본가 계층의 성장과 정치 및 경제체제의 변화로 사회는 매우 다원화될 것이다.
경제	[혁신형] 정부가 생산성 향상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을 적시에 관리해 나가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조화되는 능률성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 1인당 소득성장이 지속되고 소득격차도 해소되는 매우 희망적인 미래가 되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와 경제적 성과(성장과 분배)가 조화

	를 이루는 경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기술진보가 빠르면서도 소득격차도 상대적으로 적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정주여건	[포용, 협력 기반의 기술혁신 수용도가 높은 사회] • 거주 유연성: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홈 증가 • 거주 집중도: 일부지역에서는 최첨단 아파트에 집중해서 모여살기도 하지만 캠핑장 같이 넓은 오픈스페이스에 커넥팅 스테이션이 있고, 자동차를 연결하면 오피스로도 홈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팝업 공간 생성, 직주일체(내가 있는 곳이 일자리) • 교통수요: 가상접촉이 일상화되며 네트워크상의 만남도 4D로 느낄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시에는 하이퍼루프 등을 이용하여 서울-부산을 20분 만에 이동하고 시내 이동은 플라잉카, 전동카가 진화된 형태의 개인 이동장치 이용 • 안전 vs. 위험: 국가기간망의 유지관리가 첨단센서, 로봇 등을 활용하여 중앙에서 관리되며 국민의 건강도 빅데이터로 관리되어 지역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며 다음 조치사항을 안내 • 일자리 집중(수도권 집중):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하며 전문직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휴먼	[Human에서 Humen으로] • 인간의 수명이 현실적인 영생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생명공학기술 및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호모 사피엔스와는 새로운 종이 출현할 것임. • 장기이식과 인공장기의 발전으로 강화인간이 출현하고 유전자를 변화시킨 새로운 종이 출현할 것임. 이를 human에서 humen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음. • Humen의 출현으로 생식이 성교와 분리되어 실험실 (또는 공장)에서 생식이 이루어지고 유전자 중심의 가족이 해체될 것임. • 이러한 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사회 근본을 이루는 조직의 해체를 의미하며 새로운 공동체와 알맞은 윤리와 가치를 지닌 종교의 등장을 촉진할 것임. • 궁극적으로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뇌의 기능인 인지, 기억, 학습 등에 관한 신경회로 연결망과 기전이 알려지면서 뇌의 각 기능을 육체와 분리시켜 데이터화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임. • 이를 통해 인간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속도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우주로 확정되어 갈 수 있을 것임. • 탐욕과 호기심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간은 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성 약화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할 것임.
인구사회	[다종의 시대] 다종의 시대 시나리오는 2050년 발생할 수 있는 최상의 종합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에 과거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가 복원되지는 않으며, 그 공동체 복원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 2050년 최상의 시나리오는 각 개인들이 서로의 자유를 마음껏 얻으면서도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정치적 제도적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나마 연대하여 사회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사회이다. 즉 이성적으로 동거와 협력을 선택

	하는 시대이다. 과거와 현재의 시대가 군중과 대중의 시대였다면 2050년 최상의 시나리오의 시대는 다양한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그 인정에 기초하여 어떠한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다중’(Multitude)의 시대이다.
정치행정	[공고화 시나리오] • 복지 확충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가 해결됨에 따라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이 완화됨 • 문화갈등이 대두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짐 •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할과 능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함 •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협력이 이루어짐 • 한국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공고화되고 사회통합이 달성되는 최선호 시나리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40개의 구성시나리오를 바탕으로하여 3~4개의 유형을 통해 종합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종합시나리오에 따른 선호는 재료로 활용된 구성시나리오의 방향에 따라 선호의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 즉, 구성시나리오의 구분 결과 ‘선호’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전체적인 종합시나리오도 선호의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환경 분야를 살펴보면, 한반도 연평균기온, 극한기상현상, 미세먼지 농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녹지면적을 주요동인으로 도출하였고, 각 동인의 극점은 동인결합시나리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호의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는 특징을 가졌다. 즉, 기온 상승, 극한기상현상,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등이 억제되거나 통제되며, 녹지면적은 증가하는 것이 극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선호의 특징이다. 실제, 종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를 보면 이러한 극점 상의 뚜렷한 선호 경향이 담겨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기후변화·환경분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 삶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는 동인의 선호 경향이 뚜렷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자원, 과학기술혁신(IT, BT, ST), 식량·수자원, 경제, 정주여건 등 대부분의 분야의 동인의 극점이 뚜렷한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종합시나리오의 선호 미래가 동인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선호 경향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동인

이 가지고 있는 극점의 선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인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해당 동인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 힘든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극점의 선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가치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인구사회분야의 경우 다중의 시대, 유목민 시나리오, 프로 리그 시나리오, 배틀 그라운드 시나리오로 4개의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이 경우 크게 협력과 경쟁 중심의 사회로 갈 것인지와 개인 중심 또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협력과 경쟁,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 동인은 전문가의 판단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판단하는 개개인에 따라 선호 가치를 다르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록 ‘다중의 시대’가 선호미래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전체 의견을 보여주는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휴먼, 정치행정 분야의 경우도 인구사회와 같이 가치관에 따라 일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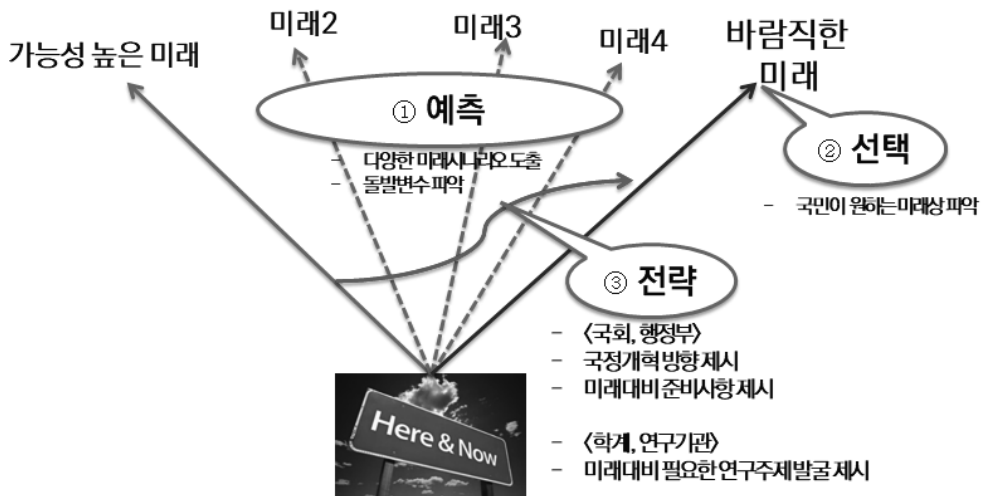
국제전략과 북한 분야의 경우는 동인 결합시나리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동인 자체의 불확실성과 외생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선호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목적지를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가 선호하는 결과로 가기위한 주변의 조건들이 기술된 특징을 가졌다. 즉, 국제전략 분야에서 선호미래로 제시한 ‘평화공존모델’은 미국 우위의 체제 지속, 글로벌 상호 의존 심화, 국제기구의 영향력 강화, 일본 군사력의 현상 유지, 중국 권위주의의 약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호 조건을 ‘선호 미래’로 제시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분야의 경우 백두혈통 정치 권력 유지, 비핵화 프로세스, 대외환경,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 사회 다원화 여부로 주요동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 시나리오의 선호 미래는 성공적인 개혁개방, 순조로운 비핵화 이행, 우호적 대외관계, 정치 및 경제체제 변화로 인한 다원화 등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국제정세의 안정화 조건을 선호 미래로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제3절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림 4-4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프레임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식별하는 ‘예측’연구가 수행된다. 이후, 식별된 가능 미래 중 직접 국민에게 물어서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파악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택한 미래와 현재의 갭 분석을 통해 지향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략’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 단계의 프로세스 중 ‘선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 미래를 제시하여 국민의 선호를 물어보기 전, 기반 자료를 전문가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종합 미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묻는 과정이 후속 연구를 통해 연계될 것이다.



[그림 4-4]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프레임

앞서 각 분야별로 살펴본 선호 미래의 모습은 크게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동인의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 반대로 선호 경향이 가치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불확실성과 외생성이 너무 커서 선호의 선택 보다는 선호 미래로 가기위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이다.

선호의 경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선호 미래는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선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 언급한 한반도 기온 상승과 미세먼지가 억제되는 선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배출 억제와 관련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에서 IT KOREA의 글로벌 비상을 위해서는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역량 및 시장 확대, 관련된 제도적(규제)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선호의 경향이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경우 전문가와 국민의 선호가 다르다면 다른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호의 경향이 다수와 소수로 구분되어 나타날 경우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행정 분야에서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선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협력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과 외생성이 큰 동인의 경우 정책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호 미래에서 제시한 선호되는 외부 환경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우위의 국제 관계가 더 이상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정치 체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날 경우, 또는 일본의 군사력이 확대될 경우와 같이 선호의 ‘조건’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제5장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선호 조사

- 제1절 연구의 개요
- 제2절 미래정책의 도출 과정
- 제3절 국민의 선택
- 제4절 정책적 의미

제1절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미래예측에서 제시되는 복수의 미래상 중에서 바람직한 미래와 회피해야 하는 미래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에 기반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있어서도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의 미래를 다룬 이번 연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의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는 정책연구자라면 연구의 말미에 제언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언하는 미래 정책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 미완의 미래정책일 수 있는지는 따져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분야별 정책적 제언이 다른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연구자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들다. 자신이 속한 분야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연구자가 문화예술이나 인구사회, 보건의료 분야까지 고려할 여유도, 이유도 없어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실, 하나의 정책은 그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종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종합적 고려는 국내 연구 특성상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따져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정책을 보완할 제2의 정책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출해보았다. 그 뒤, 애초 미래정책과 보완한 제2의 정책을 놓고, 국민이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내용이다. 우리는 국민의 선호 확인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물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물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은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역, 학력 등과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분석했다. 또한, 선호의 기저에 있는 국민의 미래인식과 가치를 파악해보

았다. 이 연구 결과는 2050년의 미래예측에 기반하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장의 연구 내용은 미래 정책의 도출, 미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조사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에게 묻는 미래의 범위를, 시간으로는 30년 후, 분야로는 기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정보통신, 생명, 우주, 경제, 거주환경, 인구/사회, 정치/행정, 사람(human)의 13개이다. 과학기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분야는 정보통신, 생명, 우주로 나누었다.

13개의 각 미래분야에 대해서 국민의 전망을 묻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묻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30년 후의 13개 분야의 미래상 또는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연구진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에서 제시된 13개 분야의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2050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상을 간략하게 재구성하여 국민에게 제시했다.

이와같이 작성된 미래상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는 종종 상반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어떠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다. 논쟁적인 사안에 있어서 상반되는 정책의 선택지가 있을 때 공론조사와 같이 숙의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반되는 정책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상반되는 정책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정책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비용 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각각의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느 정책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그 선택의 근거에 있는 미래인식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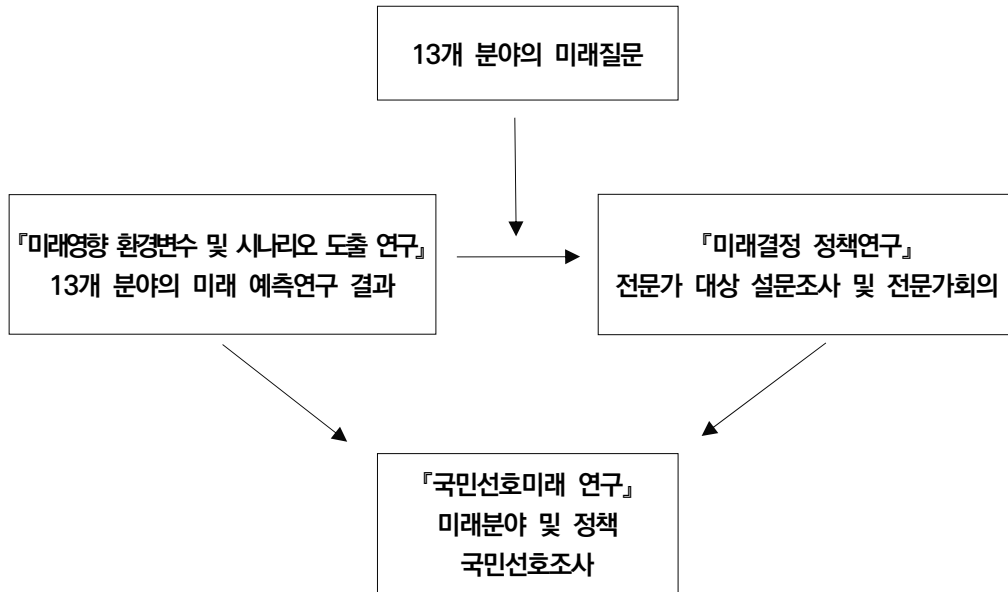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는 설문에 응하는 국민이 간략하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읽고 그에 대비하는 정책의 선택지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맞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온라인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의 상세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설명한다.

제2절 | 미래정책의 도출 과정

1. 미래 정책 도출 과정

국민 선호의 확인 대상인 17개의 미래정책은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의 ‘주요동인 및 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정책과제, 그리고 미래결정 정책연구의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1차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이 정책의 중요성과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정책미래 목록을 최종 선정하고 설문문항을 작성했다(그림 5-1 참조).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과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공통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선정하되 그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 등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자와 후자의 결과를 취합하여 정책과제의 중복 답변 정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13개의 분야를 17개의 정책미래분야로 재분류하고 각 정책미래분야에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상반·상충하는 두 개의 정책 선택지를 작성하였다.



[그림 5-1] 미래정책 도출 과정

2.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미래정책 선정

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미래결정 정책연구에서는 미래결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선정된 미래질문을 제시한 후, 전문가별로 2개 부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각 부문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기입하고, 과제별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3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1: 보통, 2: 큼, 3: 매우 큼, 시급성의 경우에는 1: 단기과제, 2: 중기과제, 3: 장기과제로 정의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제시하였다. 이때, 전문가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제적 융합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개별 전문가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분야와 연관성이 있거나 평소 관심이 있는 부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수는 총 146명인데, 국제전략, 신성장 동력,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거버넌스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의 연구자 문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출연연구기관협의회 소속 전문가, 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와 관련 있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1]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참여자 현황

(단위: 명)

부 문	인 원
국제전략	12
신성장동력	16
지속가능발전	13
삶의 질	13
거버넌스	9
국회미래연구원 출연연구기관협의회	35
추가 전문가군	48
합계	146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14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 1,13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137개의 정책과제를 전문가들이 3단계로 평가한 파급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하였다. 서열화된 정책과제를 내부 연구진 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IT, BT, ST,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경제, 정주여건, 사람(Human), 인구·사회, 정치·행정의 13개 미래예측 분야별로 30여개씩 미래정책과제와 과제별 부작용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2)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위의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17일과 19일에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결정정책 풀(pool)을 마련하기 위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 참가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표 5-2] 전문가 대상 미래결정정책 도출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명단

12월 17일 (월) 총 8명	분야	이름	소속
	인구·사회	김주연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경제	김홍균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국제정치	권보람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이중구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정주여건	문정호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휴먼	황종남 교수	원광대학교
12월 19일 (수) 총 8명	STI	신재호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I	고영주 전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에너지	홍종철 연구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조현춘 본부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자원	안은영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식량·수자원	최진용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휴먼	이상욱 교수	한양대학교
		김왕배 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결정정책 도출을 위한 FGI는 전문가 대상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미래정책과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토론을 나눈 뒤에 분야에 관계없이 미래결정정책을 기입하고 각 과제를 정책의 영향력, 시급성, 불가역성,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1~5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참여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미래정책과제 설문조사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타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미래결정정책을 선택하고 정책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어떠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5-3] 정책과제 판단 기준

평가기준	고려사항	설명
정책의 영향력	정책의 파급범위 (trigger)	촉발적 효과(triggering effect)를 나타내며 다른 정책으로까지 파급력을 나타내는 정책 (파급범위가 넓을수록 영향력 크고 중요함)
정책의 시급성	리드타임 (lead time)	정책의 결과 또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으로, 리드타임이 길수록 미리 시작할 필요
정책의 불가역성	불가역성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치·사회적 부합성 (정책순응성)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합의 정도 또는 정부 정책 공약 및 정치적 합의정도를 고려
	실현용이성	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수단의 확보 여부
	관리용이성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운용 조직의 존재 유무

전문가 대상 미래결정정책 도출을 위한 FGI 결과, 총 263개 미래결정정책이 도출되었다. 아래 표 5-4에서 보여지는 예시는 기후변화의 정책과제와 정책과제의 부작용을 보완한 제2의 정책 대안, 그리고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13개 분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상충하는 2개의 정책 리스트를 도출했다.

[표 5-4] 기후변화의 정책과제와 대안 정책과제 및 부작용

정책과제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대안	부작용 설명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구체화 및 부작용 최소화	vs. 신뢰할 수 있는 보급 잠재력과 분야별 국내기술/산업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 제시와 설비 성능과 안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국내기술 및 산업발전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외국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고, 신재생 설비에 의한 환경 및 인체 영향 우려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비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 사고 및 부실화 등에 의하여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vs. 대체재 개발, 처리 또는 재활용 기술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확대 하게 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기업경쟁이 악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 정책	vs.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로 대응	-

3. 정책미래 최종 선정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의 13개 분야 연구 결과와 미래결정 정책연구의 초점면접조사 결과로부터 국민의 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취합하였다. 정책과제의 개수는 총 145개였다.

우리는 총 145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145개의 정책과제 중에는 중복된 것도 상당히 많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이에 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 일반 국민이 자신의 선호를 답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2050년의 미래를 상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장의 현안인 것, 정책의 레벨이 지나치게 낮아서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 등과 같이 이 연구의 취지에 맞추어서 취사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를 정책미래선호조사의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표 5-5] 정책미래선호조사의 조상대상후보군

분야	정책과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일회용품 보증금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정책과제
IT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신뢰 여부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BT	인간배아유전체편집이나 재생의료 등에 관한 생명윤리 및 법규범 정비
ST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 여부
에너지·자원	에너지 생산·유통의 관리방식
식량·수자원	유전자편집기술농작물의 식량자원으로서의 활용
국제정치	미중경쟁 하에서의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전략
	한일관계의 재정립 전략
경제	사회보장의 기본 방식
	기술·경제의 변화에 따른 노동방식의 변화를 노동질서에 수용할지 여부

정주여건	거주를 위한 부동산(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 방식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인프라 유지 여부
인구·사회	가족의 변화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할지 여부
	다문화사회의 촉진 및 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치·행정	지방분권(재정분권 포함) 강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변화
	삼권분립 및 견제·균형 강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사람	BT발전에 따른 출산방식 변화의 허용 여부(성교와 생식의 분리 허용)

이상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의 13개 분야 연구에서 연구책임을 맡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2차로 조사 대상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논의를 통하여 기후 분야 2개, IT 분야 2개, BT 분야 1개, ST 분야 1개, 에너지·자원 분야 1개, 식량·수자원 분야 1개, 국제정치 분야 2개, 경제 분야 2개, 정주여건 분야 2개, 사람 분야 1개, 인구·사회 분야 2개, 정치·행정 분야 3개, 총 20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각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2050년의 미래 변화가능성 및 정책과제에 대한 선호질문 작성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13개 분야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2050년의 미래상 및 정책과제에 대한 선호질문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정책미래에 관한 선호조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분야에서는 질문을 대폭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개인간 에너지 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이 제안되었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호’를 묻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한일관계의 재정립 전략”을 “대미·대중 외교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변

화”와 “삼권분립 및 견제·균형 강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정책과제의 성격보다는 정치개혁의 성격이 강하여 ‘정책’의 미래에 관한 선호 조사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래 한국의 새로운 정치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사회·문화정책을 시행하여야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분야에서는 생명공학(BT)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출산 방식, 즉 수정과 착상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을 허용할 것인지라는 설문이 제안되었지만, 철학적인 논쟁의 소지가 다분할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간생명연장과 안락사의 허용이라는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선호조사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제를 총 17개의 정책미래에 상응하는 17개 정책과제로 확정하고 최종 설문 조사 시행 전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질문과 선택지의 문구를 면밀하게 수정하였다. 특히 선택지의 작성에 대해서 심사숙소를 거듭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조사의 방법적 핵심은 하나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상반·상충되는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묻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신의 선호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선택지에 선택에 따른 비용 부담 또는 위험(Risk)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선호의 선택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지를 가능한 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경제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예로 들어보면, 2050년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의 기본적인 방식에 관한 상반·상충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의 결정에서 있어서 응답자가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비용 부담 요소를 재정부담 증가 여부라고 보았다. 물론 보편적 복지도 재정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지의 기술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응답자가 인식하고 자신의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논란의 위험을 무릅

쓰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비용 또는 위험을 인식하면서 상반되는 정책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도록 하는 설문조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3절 | 국민의 선택

1. 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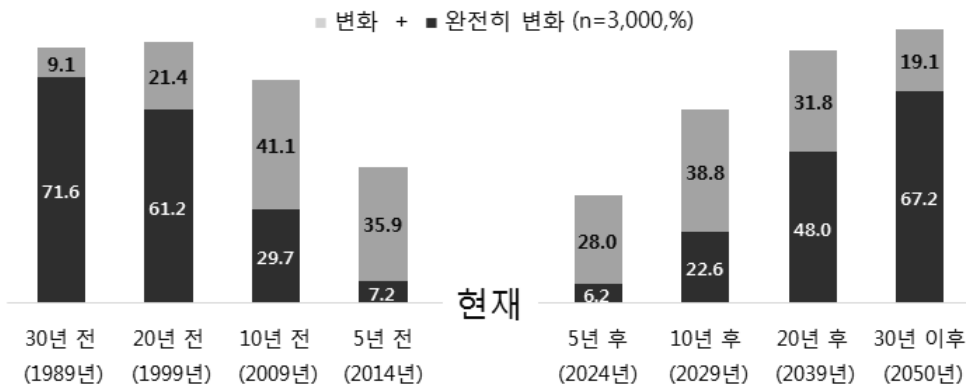
제2절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마련한 17개 분야의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조사는 201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총 5일)에 걸쳐서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만15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표집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이 조사는 응답자가 17개의 분야의 정책미래에 관해서 2050년의 미래상을 읽고 그러한 미래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방식보다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web survey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응답자가 17개의 설문에 대해서 자신의 선호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응답 모집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 타입 설문에는 9개 설문 문항을, ‘나’ 타입 설문에는 8개 설문 문항을 배치하여 각각의 설문에 대해서 1,500명의 응답을 얻었다. 하지만 17개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 질문에 앞서 제시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답하게 하였다.

설문조사의 구성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고 17개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를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과거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묻고, 다음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다. 세 번째로 기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국제정치, 북한, 과학기술, 경제, 거주환경, 인구·사회, 정치·행정, 사람(human)의 11개 분야에 대해서 3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는다.

2. 미래에 대한 인식

1) 과거 및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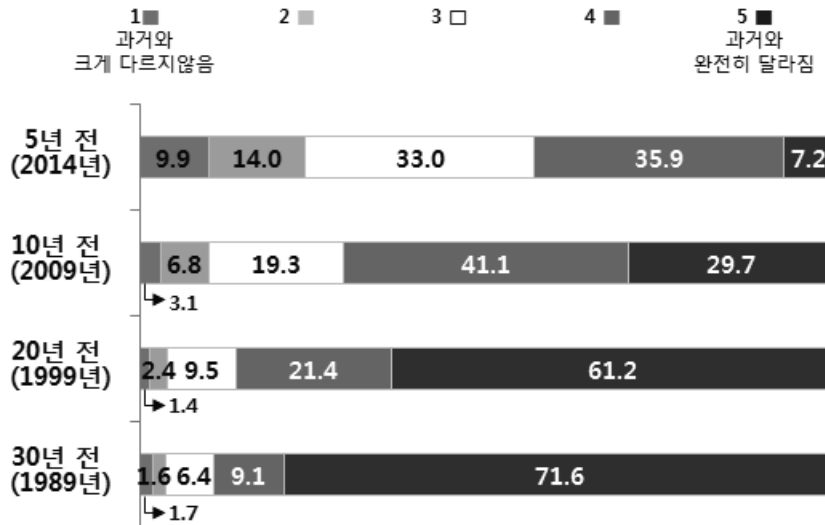
[그림 5-2] 과거 및 미래 변화 인식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함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과거 대비 변화 및 미래 변화를 예상하게 한 결과, 과거에 경험한 변화 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크기/정도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미 경험한 과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변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나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 또는 예측을 해야 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2) 과거 대비 현재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기간별로 1점(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서 5점(과거와 완전히 달라짐)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결과, 5년 전(2014년)에 비해 달라졌다는(4점+5점)는 응답은 40% 이상, 10년 전(2009년)에 비해 달라졌다는 응답은 70% 이상, 20년 전(1999년) 대비 달라졌다는 응답과 30년 전(1989년) 대비 달라졌다는 응답은 각각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은 30년 전에 비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5-3] 과거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 (n=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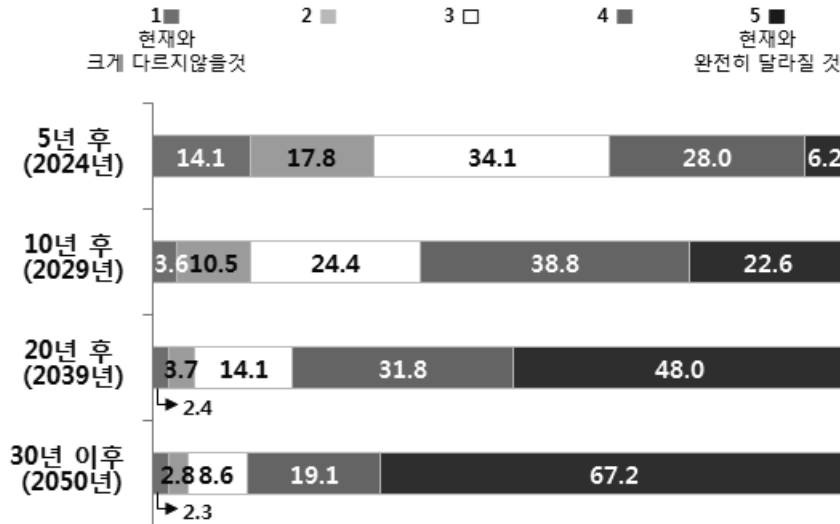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

※ 20년 전 변화 인식 및 30년 전 변화 인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1%, 9.6%임

5년 전 대비 현재 우리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전에 비해서는 4점~5점 사이로 변화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에서 과거 대비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이 타 연령층 및 타 직업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현재 대비 미래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현재 대비 미래의 삶의 모습을 기간별로 1점(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에서 5점(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것)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결과, 현재 대비 달라질 것이라는 응답은(4점+5점) 5년 후(2024년)가 30% 이상, 10년 후(2029년) 60% 이상, 20년 후(2039년) 80% 가량, 30년 이후(2050년)는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0% 가량이 30년 이후 미래 삶의 모습이 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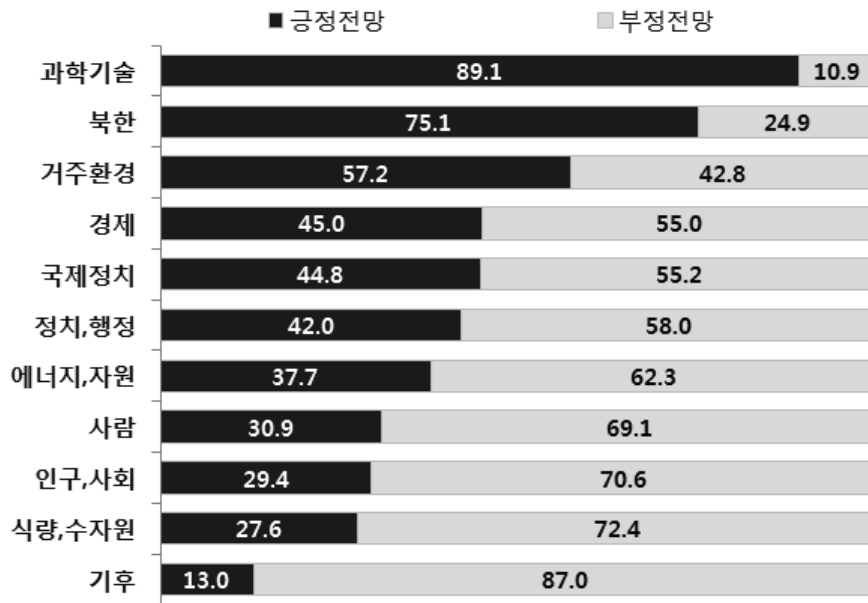


[그림 5-4] 현재 대비 삶의 모습 변화 예상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

5년 후의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20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는 4점~5점 사이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과거 대비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도 미래의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에서 현재 대비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이 타 연령층 및 타 직업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30년 후의 11개 분야별 변화 예상



[그림 5-5] 30년 후 변화 예상 (n=3,000,%)

※ '가' 타입(n=1,500)과 '나' 타입(n=1,500)의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결과를 산출함

기후, 에너지, 자원 등 11개 분야별로 30년 후 변화의 방향을 묻은 결과, '기후', '에너지, 자원', '식량, 수자원', '인구, 사회', '사람(human, 인간관계)', '정치, 행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후'에 대한 부정전망은 87.0%로 10명 중 9명가량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 '과학기술',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90% 가량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긍/부정 전망이 40~50% 수준으로 비슷하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특징을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대의 긍정 전망의 비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세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특히 50~60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 전망의 비율이 20~40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17개 분야의 미래 정책 선호도 결과

1) 이민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뒤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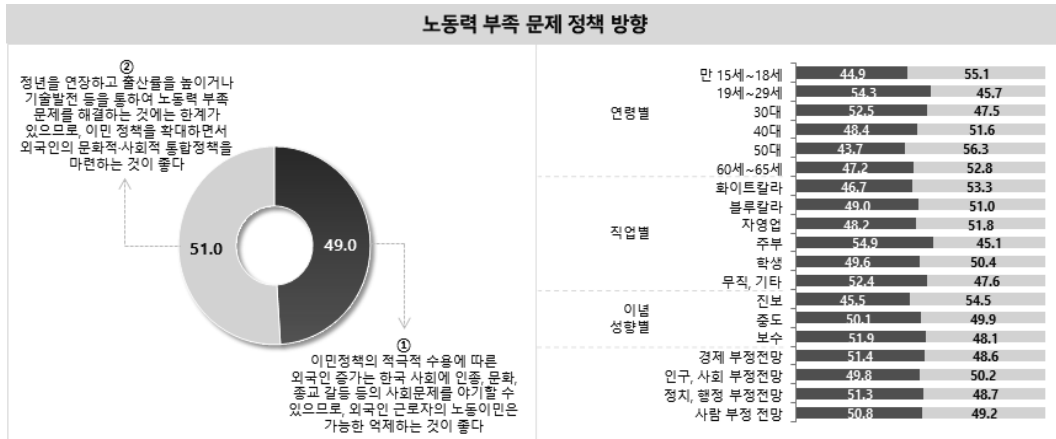
물론 현재에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노동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문화적·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와 “②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율을 높이거나 기술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 중 ②를 선호하는 응답이 49.0%,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1.0%였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대’, ‘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5-6] 노동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2) 환경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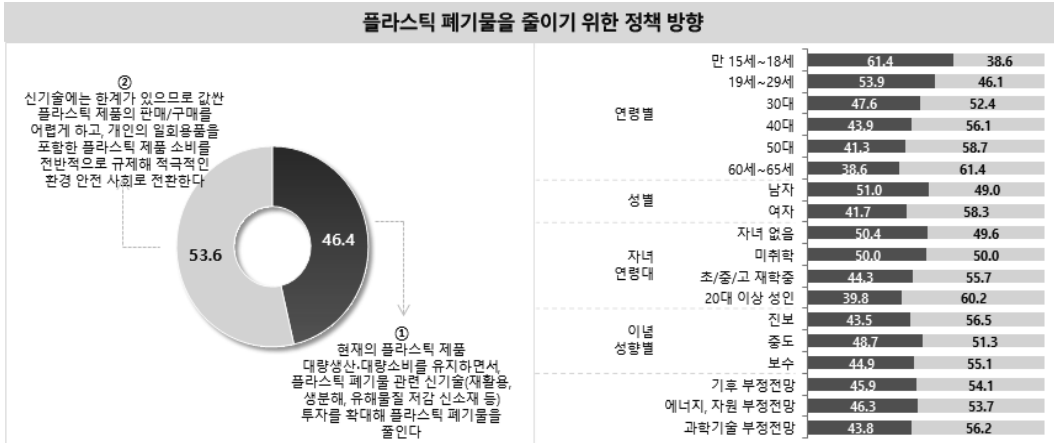
【미래 변화 가능성】

한반도의 기온과 수온이 상승해 심각한 적조현상이 일어난 바다에 수많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과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독성물질이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켜 시민들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홍수, 폭우 등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현재의 플라스틱 제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신기술(재활용, 생분해, 유해물질 저감 신소재 등) 투자를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다.”와 “② 신기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값싼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구매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전반적으로 규제해 적극적인 환경 안전 사회로 전환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 중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4%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3.60%였다. 응답자 특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연령대별로 볼 때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0대 및 2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림 5-기]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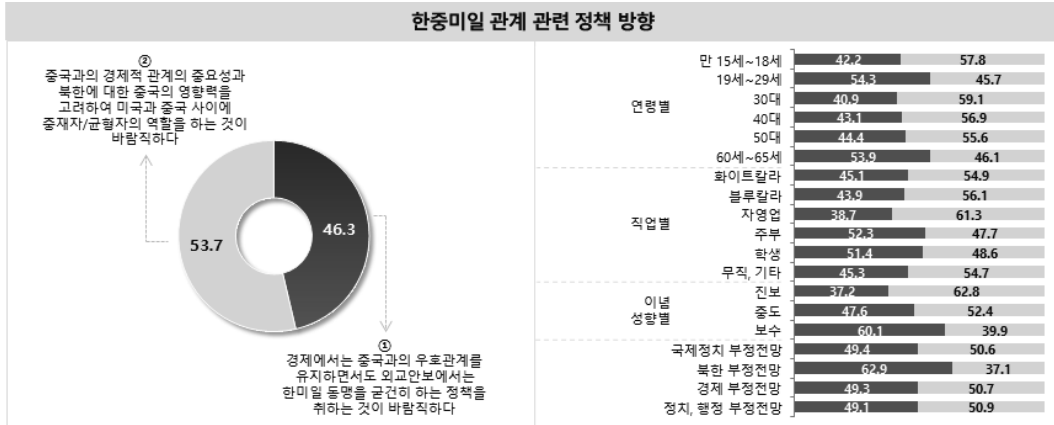
3) 외교안보정책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특히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 강화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경제에서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②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제시하였다.

【미래 변화 가능성】

미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일 것입니다.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발맞추어 군사력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육·해·공의 첨단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력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력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은 특히 북한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한-미-일 동맹체제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림 5-8] 한중미일 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이에 대해서 응답자 중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3.7%,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6.3%이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특징을 보면 ②를 선호 응답은 연령별로 볼 때 ‘30대’, 이념성향으로 볼 때 ‘진보’, 직업별로 볼 때 ‘자영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①을 선호하는 응답은 ‘20대’ 및 ‘60대’, 이념성향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4) 부동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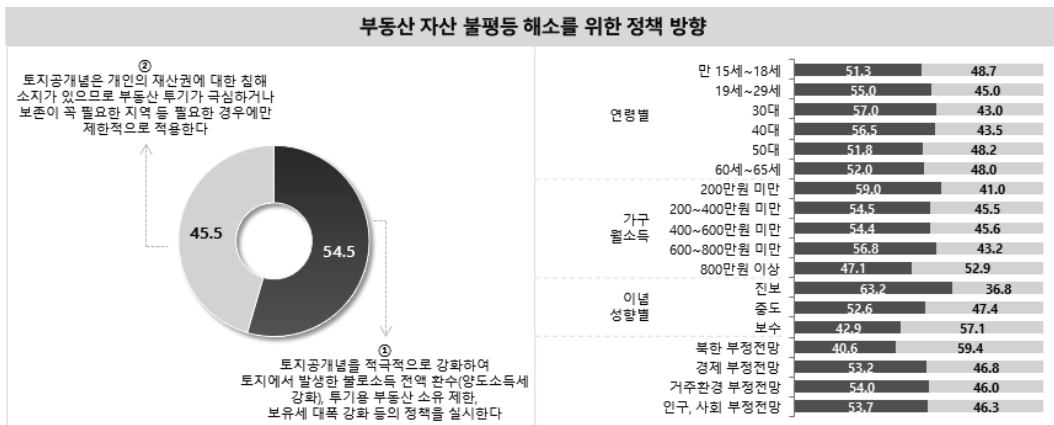
【미래 변화 가능성】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소득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제성장 기간 동안의 부동산 투기로 지나치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청년계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전액 환수(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용 부동산 소유 제한,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와 “②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거나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45.5%로 나타났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 소득수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하여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소득수준으로 보면 ‘800만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5-9] 부동산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5) 복지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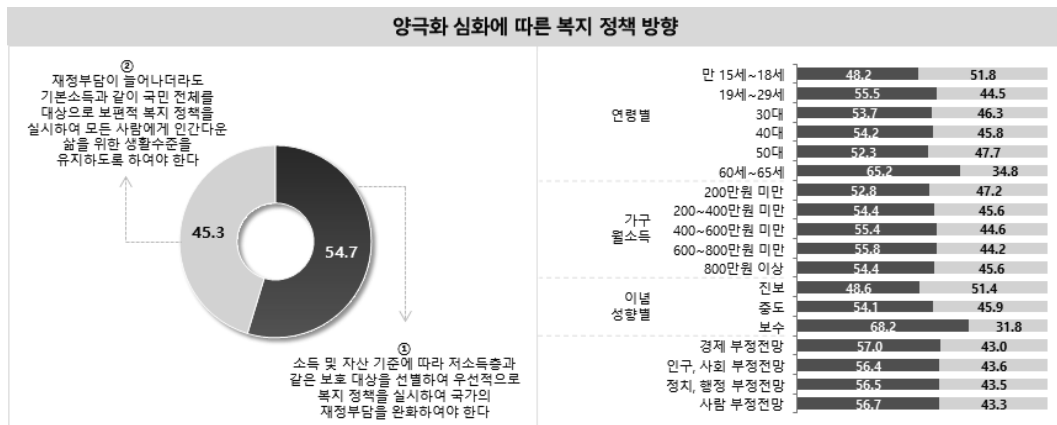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소득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에 따라서 중산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문고 그 선택지로 “①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같은 보호 대상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와 “②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①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45.3%로 나타났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②를 선호하는 응답은 ‘10대’, 이념성향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0] 복지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6) 지방분권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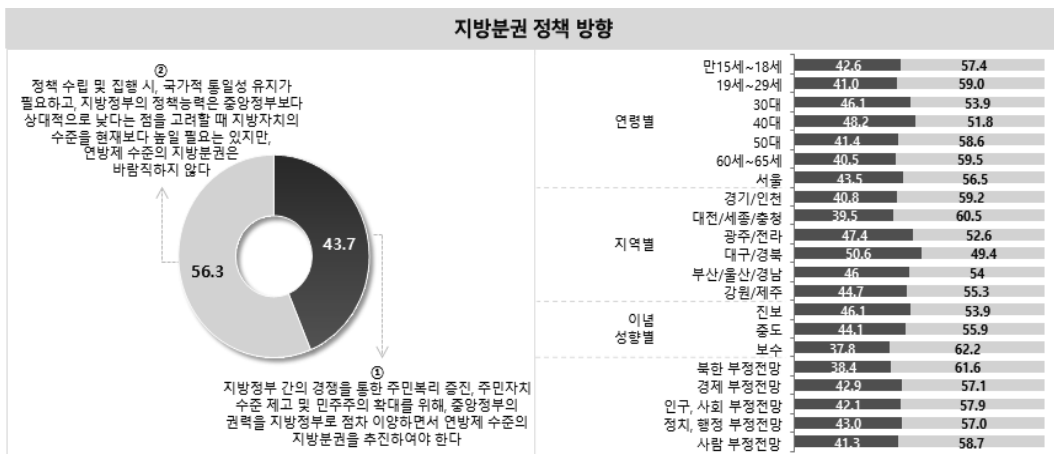
미래의 한국 사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다원화·다문화사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경제적·사회적 변화의 속도 등을 잘 파악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떠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래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수준 제고 및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점차로 이양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한다.”와 “②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국가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는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45.3%로 나타났다.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거주지역에서 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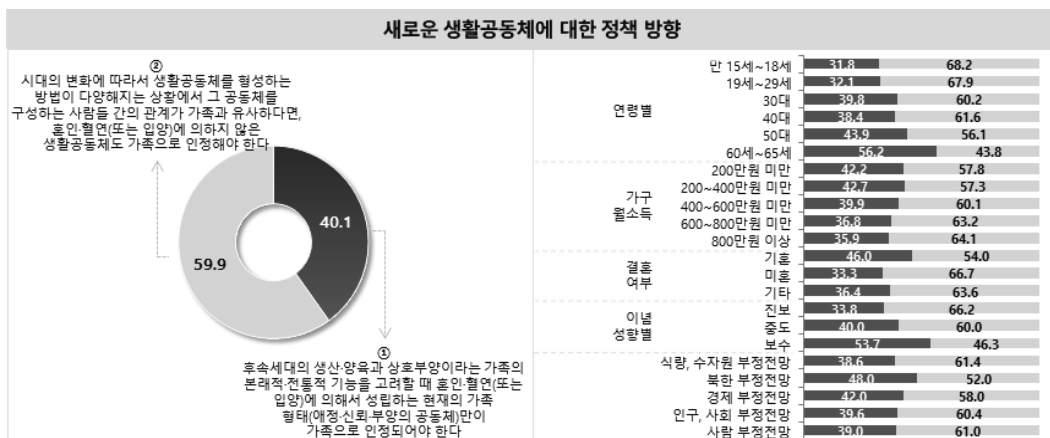
[그림 5-11] 지방분권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7) 가족제도

【미래 변화 가능성】

전통적으로 가족은 남녀의 애정·신뢰를 기반으로 상호부양의무를 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 출생한 생물학적 자녀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남녀가 애정·신뢰·부양의 수준이 낮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부와 자녀가 애정·신뢰·상호부양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관계나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성 커플이 애정·신뢰·부양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들 커플이 자신들과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아동도 자녀로서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미래사회에 증가하게 될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후속세대의 생산·양육과 상호부양이라는 가족의 본래적·전통적 기능을 고려할 때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해서 성립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애정·신뢰·부양의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와 “②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족과 유사하다면, 혼인·혈연(또는 입양)에 의하지 않은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2] 가족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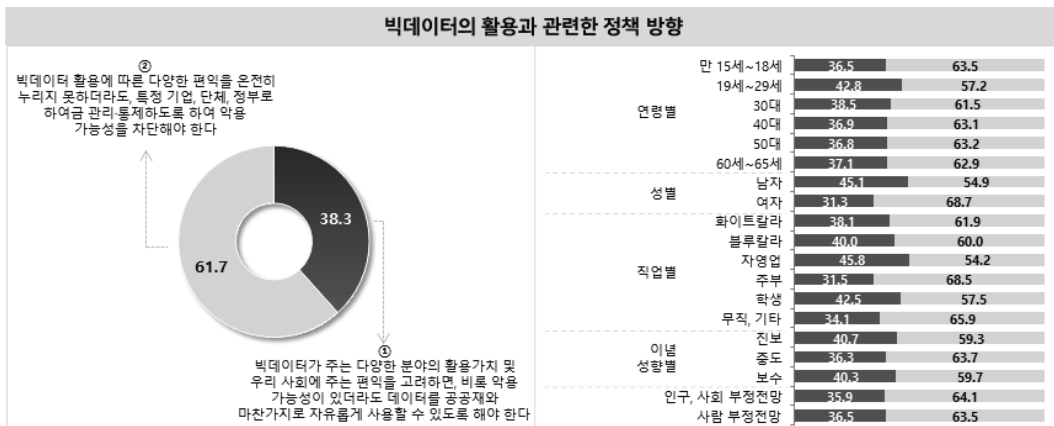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9.9%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 혼인 상태 보면 ‘기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10대 및 20대’,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 혼인 상태로 보면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 빅데이터의 활용

【미래 변화 가능성】

4차 산업혁명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한 급진적인 기술,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독점 및 무분별한 데이터의 수집 등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간 보안 이슈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해야 한다.”와 “②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3]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미래정책에서 국민의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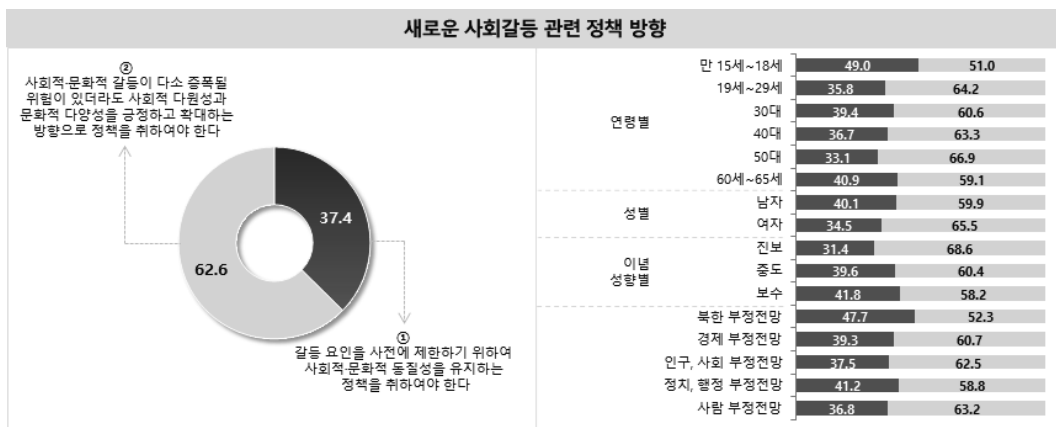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1.7%였고,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8.3%였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20대’, 성별로는 ‘남성’, 직업별로는 ‘자유영업’,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9) 사회갈등

【미래 변화 가능성】

4차 산업혁명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통한 급진적인 기술, 교육, 문화, 정치, 사회 등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독점 및 무분별한 데이터의 수집 등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기업 또는 국가 간 보안 이슈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박스 안에 설명된 미래변화를 전제로 “미래 한국의 새로운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어·인종·종교·성정체성·젠더 등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에서 사회·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와 “② 사회적·문화적 갈등이 다소 증폭될 위험이 있더라도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4] 사회갈등 미래정책 관련 국민의 선호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2.6%였고,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4%였다.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보면 ‘여자’,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 소득수준으로 보면 월소득 ‘400~60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성별로는 ‘10대’, 소득수준으로 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0) 인공지능의 노동대체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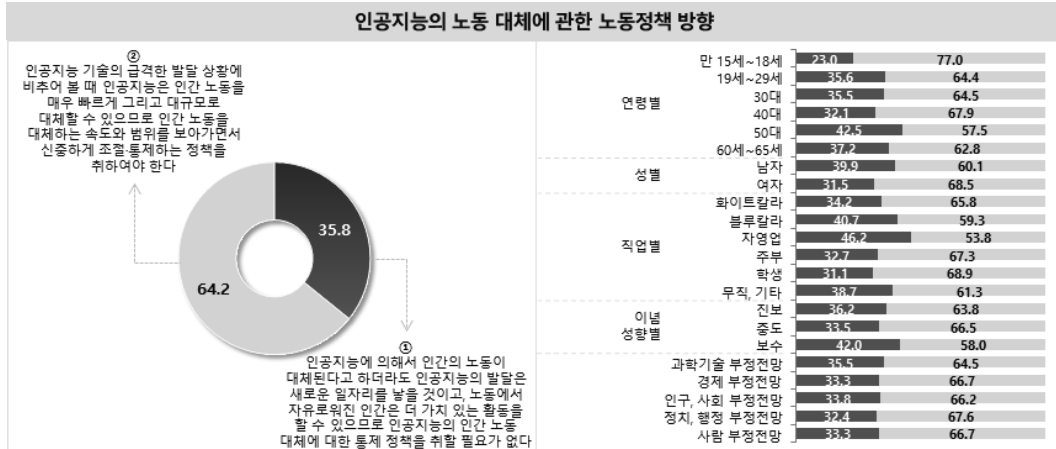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는 우리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계소득 정체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 고용방식의 해체,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데 대해 일반 대중과 전문가 집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숙련 노동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 및 정신 노동도 대폭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은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인간 노동 대체에 대한 통제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와 “②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와 범위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조절·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4.2%였고,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5.8%이었다.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별로는 ‘5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①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5-15] 인공지능 노동대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11) 인공지능 활용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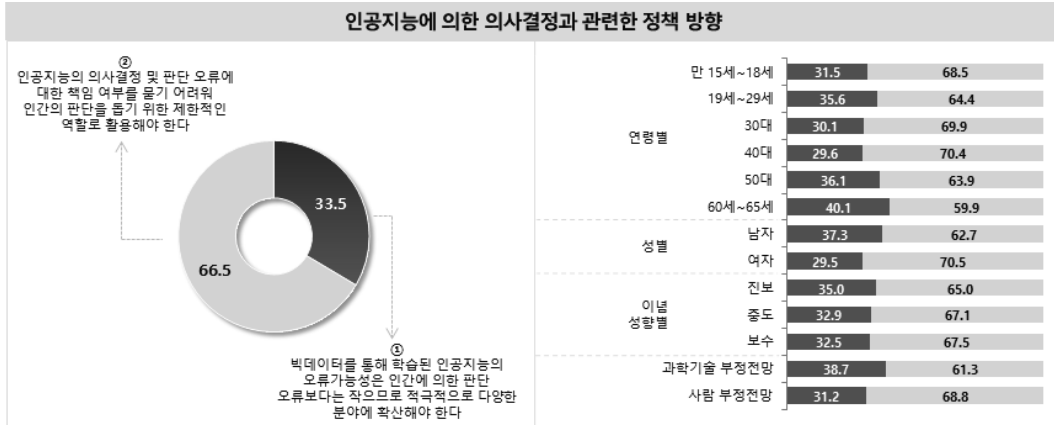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판단 기준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1) 각종 신체부착 센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경고를 주고(사전예방),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치료 및 수술 방법이 제안됨 (사후치료)

예2) 교통 정보, 도로 상황, 운전자 상태 등 차량 내/외부 데이터의 종합적 수집 및 판단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한 자율주행 실현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내려지는 의사결정의 품질 및 신뢰도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술 혁신 속도 및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빅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의 오류가능성은 인간에 의한 판단 오류보다는 작으므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확산해야 한다.”와 “②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및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워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6] 인공지능 관련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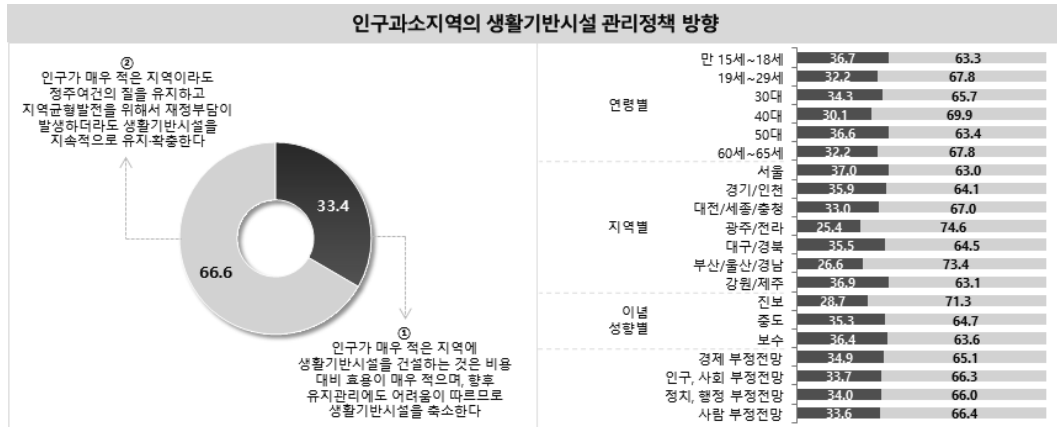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6.5%로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33.5%)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12) 인구과소지역 인프라 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인구추계상 2030년부터 우리나라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감소는 이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될 것인데,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병원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이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앞으로 생활인프라 수준을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기반시설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적으며,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므로 생활기반시설을 축소한다.”와 “②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이라도 정주여건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충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7] 미래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6.6%로 높았다. 그러나 3명 중 1명(33.5%)은 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주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및 ‘부산/울산/경남’,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3) 기후와 에너지정책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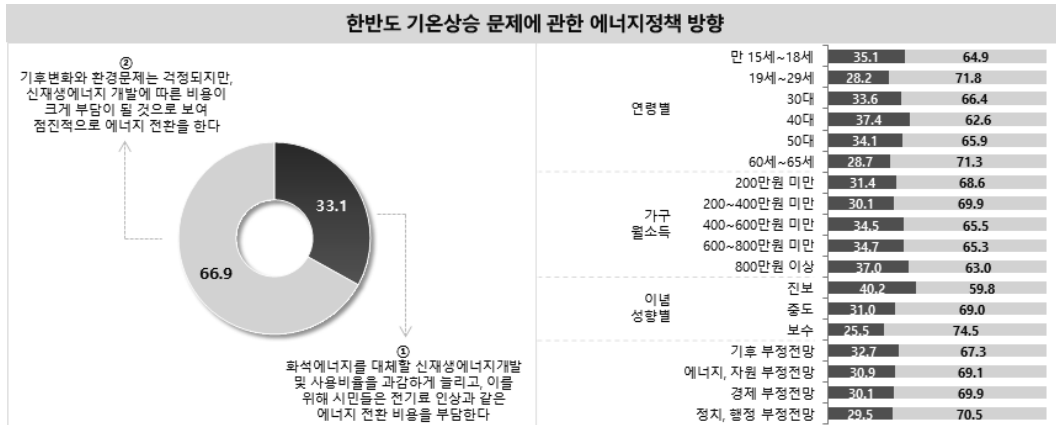
화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기온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일수가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증가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 시민들은 대부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며, 특히 남부 지방은 노약자들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면은 상승해 농경지가 줄고 녹지가 감소되어 서식지를 잃은 동식물은 아열대성 병충해와 신종 감염병에 걸려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한반도 기온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비율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를 위

해 시민들은 전기로 인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부담한다.”와 “②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8] 에너지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6.9%로 높았으나 3명 중 1명(33.1%)은 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4)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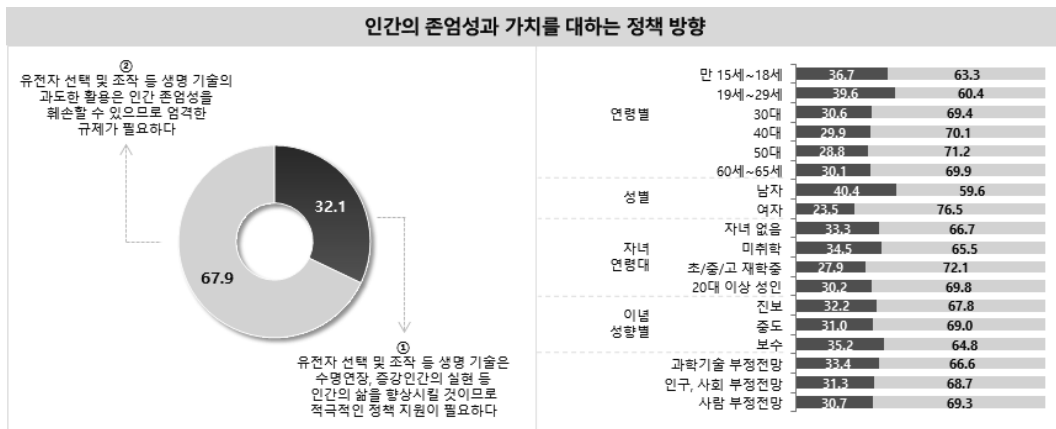
【미래 변화 가능성】

미래에는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조작하는 생명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시초로 최근 영국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 아기) 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통과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디자이너 베이비 기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엄마 둘, 아빠 하나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 중 일부는 육아를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어떤 선택은 여전히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당신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바이오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대하는 정책에 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은 수명연장, 증강인간의 실현 등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와 “② 유전자 선택 및 조작 등 생명 기술의 과도한 활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19] 생명기술에 대한 미래정책의 국민 선호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7.9%로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성별로 보면 ‘남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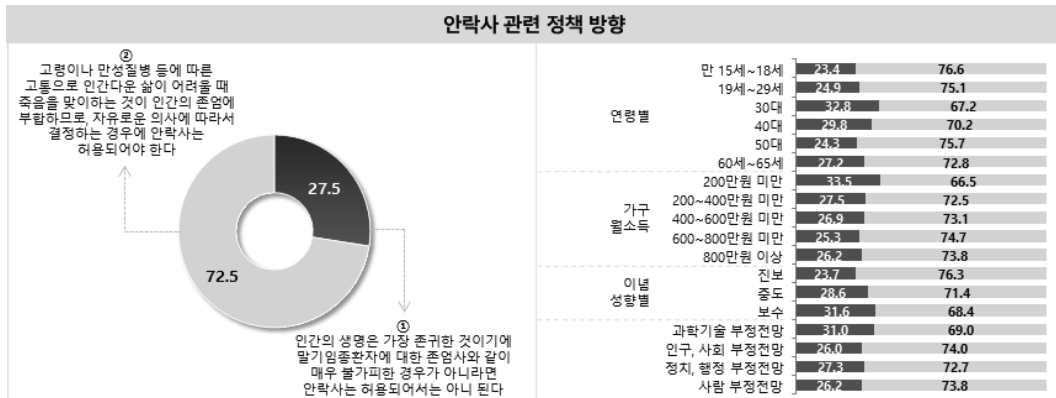
15) 안락사

[미래 변화 가능성]

미래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150세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삶의 질도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만성질환과 노화가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닌 이상 병마와 신체기능의 쇠퇴에 따른 고통을 수명이 연장된 만큼 더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훌쩍 넘어서 15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생명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이기에 말기임종환자에 대한 존엄사와 같이 매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와 “② 고령이나 만성질환 등에 따른 고통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려울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20] 안락사에 대한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72.5%)이며 4명 중 1명 이상(27.5%)은 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특성에 불문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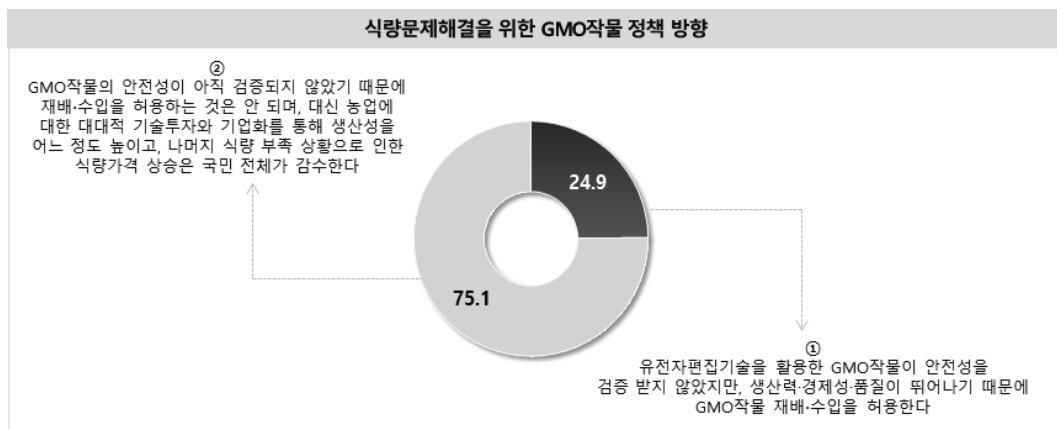
16) GMO작물의 재배

【미래 변화 가능성】

미래에는 경작지 면적 감소, 농업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불리한 농업환경으로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며, 세계정세와 세계 식량시장의 악화에 따라 무역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우리나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식량 수급에 위기가 온다는 가정 하에 원활한 식량수급을 위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유전자편집기술을 활용한 GMO작물이 안전성을 검증 받지 않았지만, 생산력·경제성·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GMO작물 재배·수입을 허용한다.”와 “② GMO작물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대신 농업에 대한 대대적 기술투자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나머지 식량 부족 상황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은 국민 전체가 감수한다.”를 제시하였다.



[그림 5-21] GMO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75.1%가 ②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4명 중 1명 가량 (24.9%)은 ①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①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직업별로는 ‘학생’, 소득수준으로는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7) 우주 개발

【미래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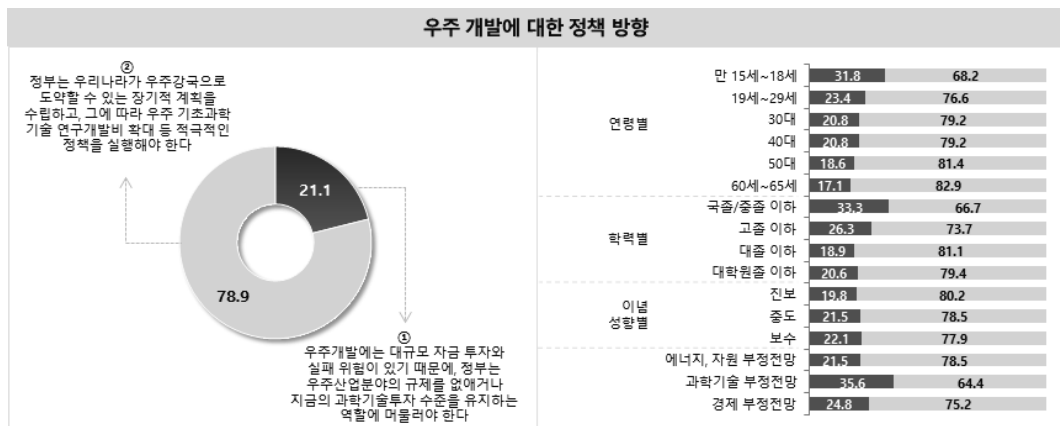
인공위성 기술의 국제협력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탐사 여건이 좋아져 2050년 인류는 화성, 소행성, 금성, 수성 등 근접 행성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주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의학, 광학 등에서 사용하는 희토류 금속이 풍부합니다. 희토류 금속은 지구 매장량이 많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주개발 기술수준이 앞선 선진국들이 달이나 소행성에 묻혀있는 우주 희토류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선 기술로 우주진출에 성공한 소수의 선진국 국민들은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박스 안의 미래변화를 전제로 하여 “우주개발의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그 선택지로 “① 우주개발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와 실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주산업분야의 규제를 없애거나 지금의 과학기술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와 “②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주 기초과학 기술 연구개발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②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0%가량(78.9%)으로 지배적이고 5명 중 1명 가량(21.1%)이 ①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22] 우주개발 미래정책 중 국민의 선호

제4절 | 정책적 의미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 선호조사는 13개 분야에 대한 미래전망과 17개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와 후자의 결과를 각각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의 결과와 후자의 결과를 교차 비교하여 분석하면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한다.

1. 미래인식 결과 분석

첫째로, 과거 대비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직업별로 볼 때 “블루칼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관한 노동정책의 방향”에 선호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직업이 학생과 화이트칼라인 응답자는 인공지능의 노동대체에 대한 통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68.9%, 65.8%인 반면에 블루칼라인 응답자의 경우는 자영업자(59.3%) 다음으로 낮은 59.3%였다. ICT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부분, 특히 제조업은 4차 산업의 기반기술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의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 되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블루칼라 계층이 변화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덜 체감한다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블루칼라 계층의 미래문해력(Future Literacy)을 높임으로써 미래의 변화를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미래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여야 하는 과제는 모든 세대와 계층에 공통적으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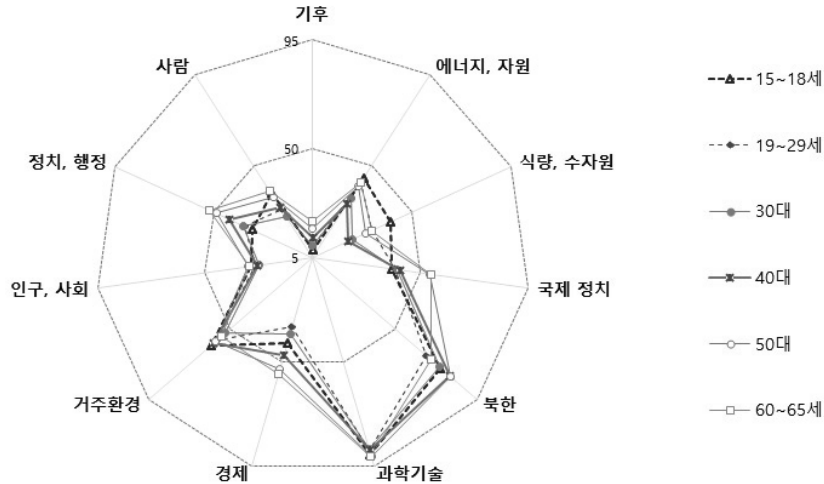
되는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표 5-6] 11개 분야의 30년 후 미래 전망

(%)	과학 기술	북한	거주 환경	경제	국제 정치	정치/ 행정	에너지/ 자원	사람	인구/ 사회	식량/ 수자원	기후
긍정 전망	89.1	75.1	57.2	45.0	44.8	42.0	37.7	30.9	29.4	27.6	13.0
부정 전망	10.9	24.9	42.8	55.0	55.2	58.0	62.3	69.1	70.6	72.4	87.0

둘째로 일반 국민들은 3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11개 분야 중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등 총 8개 분야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보였다. 기후,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사람,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치/행정, 국제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국민들은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과 기후의 문제를 직접 심각하게 체감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무수히 접하면서 그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후와 식량/수자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특히 ‘사람(Human)’과 ‘인구·사회’에 관한 미래 전망이 ‘경제’나 ‘정치’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사람(Human)’과 ‘인구·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가지는 한계를 의미한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계속 진보할지라도 그것이 “종교, 건강, 정신건강(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심리, 가치관, 여가 등”과 “인구구조, 출생, 가족, 고령화, 교육, 문화, 계층이동, 외국인유입 등”에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못한다면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에 관한 선호도 조사에서 소극적 입장이 과반을 훌쩍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5-23] 연령별 분야별 긍정/부정의 정도(원 안의 50 이상은 긍정)

셋째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사람(Human)’, ‘인구·사회’, ‘경제’, ‘거주환경’, ‘국제정치’, ‘북한’, ‘정치·행정’ 분야에서 20대와 30대의 부정적 미래 전망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그림 5-23 참조). 30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인 이들 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20대와 30대가 특히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즉,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처하게 될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결국 20대와 30대를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세대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래란 곧 변화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대와 30대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표 5-7] 미래에 대한 세대별 긍정전망의 비율(%)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경제		북한		정치, 행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45.0	55.0	75.1	24.9	42.0	58.0
연령 별	15세~18세	(177)	42.2	57.8	74.9	25.1	32.6	67.4
	19세~29세	(586)	35.0	65.0	67.2	32.8	36.0	64.0
	30대	(578)	38.2	61.8	74.2	25.8	36.6	63.4
	40대	(676)	47.4	52.6	79.9	20.1	42.9	57.1
	50대	(672)	53.1	46.9	80.5	19.5	48.9	51.1
	60세~65세	(311)	55.3	44.7	69.6	30.4	52.0	48.0

[표 5-8] 20대와 30대의 30년 후 미래 전망

30년 후 분야별 변화 예상 (%)		사례수	사람		인구, 사회		거주환경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전체		(3,000)	30.9	69.1	29.4	70.6	57.2	42.8
연령 별	15세~18세	(177)	36.7	63.3	30.5	69.5	60.7	39.3
	19세~29세	(586)	28.4	71.6	28.8	71.2	57.4	42.6
	30대	(578)	25.2	74.8	27.6	72.4	52.8	47.2
	40대	(676)	29.6	70.4	28.0	72.0	59.5	40.5
	50대	(672)	34.7	65.3	31.9	68.1	58.4	41.6
	60세~65세	(311)	37.5	62.5	31.3	68.7	55.1	44.9

넷째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세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Human)’, ‘인구·사회’, ‘경제’, ‘거주환경’, ‘국제정치’,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세대 간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과 ‘거주 환경’에서는 세대 간 전망이 엇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후자에서는 40대와 50대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망 비율이 낮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전망 차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20대가 가장 부정적이고, 그 다음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50대가 가장 긍정적이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세대인 4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20대가 보수적인 것인지, 보수적인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도 결과 분석

17개 정책미래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국민들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회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혈연 중심 가족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사회문화적 동질성 유지보다는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토지공개념 대폭 강화에 대한 선호가 재산권 보장에 대한 선호보다 높게 나왔으며 인구 과소지역의 기반시설 축소보다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국민들은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국가의 정책이 지금보다 진보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길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다는 점진적 에너지 전환을 선호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셋째로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규제하자는 응답이 많았는데, 빅데이터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유전자변

형식품(GMO)의 재배와 수입을 제한하고 생명기술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앞에서 블루칼라 계층의 미래문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대규모로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징 중에서 20대의 선호는 그 경향과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교안보정책, 지방분권, 에너지정책에서 20대는 60대와 상당히 유사한 선호를 보였다. 즉, 이들 두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교안보정책에서 이러한 선호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두 연령대가 유사한 선호를 보였다는 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보수적인 선호를 보이는 정책은 이외에도 이민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새로운 사회갈등에 관한 정책 방향, 안락사 허용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호를 보였다.

나아가 선호도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정책인 이민정책, 환경정책에서 20대는 40대·50대·60대와 명확히 대립하는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의 대립 구도는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가족제도)에서도 발견된다. 20대가 이러한 선호 체계를 보이는 이유는 2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새로운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반하여 개인 또는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20대의 이와 같은 선호체계는 앞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세대갈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러한 선호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응답자의 연령대별 특징 중에서 10대의 선호체계는 일정한 경향성과 체계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빅데이터의 활용,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GMO작물의 활용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당히 적극적인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이익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고,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에 대한 우려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다. 또한,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나 진보의 어느 한쪽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새로운 사회갈등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사회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과 복지정책 방향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진보적인 선호를 나타냈고, 이민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선호는 50대 다음으로 높았다.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고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20대와 함께 2050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세대라는 점에서 10대의 이와 같은 선호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응답자의 성별 특징에서 보면, 빅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의 노동대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GMO작물의 활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이들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재 여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지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의 발로인지, 나아가 이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미래에 대해서 더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앞서간 사람들의 선호미래 모색과 한계

조선시대 유가의 다양한 선호미래상을 살펴본 결과, 민본의 미래를 꿈꾼 공통점은 발견했으나 발현의 과정은 다양했다. 정도전은 자립적 농민양산에 집중, 세종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세 정의에 주력, 조광조는 향약을 기반으로 도덕적 향촌공동체의 성립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추진했다. 영조는 농민의 조세 부담 완화에, 정조는 형정(刑政)을 정의롭게 구현하는 것에, 실학자들은 토지의 균등분배나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실행에, 정약용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노력했다.

선호미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이들은 당대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악했고, 총력을 기울여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적대세력과의 정면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핵심적 사안을 돌파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화, 실현했다. 사회정의의 실현, 중산층 육성, 교육기회의 균등, 윤리 도덕 교육, 생태가치의 존중 등은 조선시대 선호미래에 담긴 5대 키워드였다.

공간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선호미래 논의는 집중과 분산, 장소와 네트워크,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범주로 나뉘어 다뤘다. 우선, 집중과 분산에서 집중은 발전의 내재적 경향이라는 인식에 대항해 오웬의 고립적 이상도시, 하워드의 전원도시 등이 시도되었다.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귀결된 것에서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개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다.

장소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도시화를 통해 사라져간다는 비판적 관점을 제시했다. 도린 매시는 ‘네트워크적 장소’라는 개념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성과 네트워크 사회가 실현된 때에 외부로부터 연계되는 수많은 노드에서 기존 장소의 고유성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기회는 더 많아지고 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퇴계 이황의 산림계거, 자생 풍수와 명당론 등은 한국적 생태도시의 전형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연주의적 비전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장소는 사회활동의 수동적인 결과물이 아니며,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현장이다.

헌법 개정 문제와 연관한 선호미래 논의에서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헌법의 개정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는 복수적 형태의 다양한 선호미래를 타협시켜 공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공존이 계속될 수 있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헌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설립자들은 정치경제는 물론 종교문화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호모순적인 처지에 놓여 있던 13개 주들에 대해 민주적 연방주의라는 포괄적 선호미래를 제시했으며, 연방헌법을 통하여 그것을 구현하는 규범과 권력의 체계를 제공하고 제도화했다.

헌법적 제약들을 극복하는 포괄적 선호미래도 필요하다. 냉전 체제, 빈틈이 많은 기본권, 정당정치와 왜곡과 대통령 권력의 파행, 사법권의 독주, 자치분권에 대한 방기 등을 극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까지 포괄하는 선호미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45년 패전 후 독일은 국민국가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독일 정치사에서 매우 낮은 민주적 연방주의와 법의 지배 원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통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선호미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현재와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된 정보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기반한 미래예측은 대부분 현재 또는 조금 지난 과거의 문제점을 검토해 이를 미래로 투사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계획을 세우는 경향을 보이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멘탈모델을 벗어나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자면 미래시나리오를 통해 참가자들이 가상의 미래를 경험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미래는 대부분 학습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고정된 미래 이미지이며, 선호미래와 구별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2. 국민의 미래 선호가치 연구의 도전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한 지표개발과 외부기관 컨설팅(예비조사) 외에도 실험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해서 한국인의 선호가치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서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그것의 이론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적극 채용하는 양면 전략을 취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인의 가치체계 측정과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동인을 추적하는 작업은 후발 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진보와 보수의 논리나 탈물질 가치의 관점 역시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의 가치가 가지는 정치, 사회, 경제적 영역의 변화 예측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미래 한국인의 주된 가치는 현재 한국의 가치,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총체적 집단 가치로 합산된다. 서구적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된 가치 조사의 한국적 적용은 기존 연구결과와의 함의를 수용하는 이론적, 경험적 융합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선호가치철학-미래정책-현실 정책의 선택 및 방향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분석 과정을 온전히 체계화하지는 못해 다소 아쉽다는 것이다. 추후 이런 작업이 완료된다면, 국가의 미래 정책을 선호가치 철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세대별, 지역별, 부서간 정책갈등을 조정할 때 일관성 있는 적용, 평가,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변동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의 성격과 연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전망과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이슈 및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다루지 못했다.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그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제시할 수 있을 때 미래 선호가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가치 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이슈 및 트렌드를 포함하는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미래 선호가치는 기존 미래 연구와 가치 연구, 그리고 경험적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추출된 주요 가치(군), 대립축을 가설로 상정하였다. 이것에 근거하여 가설적 수준에서 논의하고 예비조사 결과로 잠정적인 조사설계(안)을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수행을 위한 설계안을 토대로 최소한 2~3년에 걸쳐 지속적인 조사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질문항을 수정하고 가치의 요인에 대한 영역 설정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3년차 이후에야 조사 영역별 질문항의 구성이 완성될 수 있고, 전체적인 조사모듈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구조적 한계이자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3. 전문가가 선호한 미래의 의미

멘탈모델을 확장하는 시나리오 방법론으로 13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호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을 진행했다. 기존의 시각으로는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선호미래를 도출하고 실현의 방법을 논의한 데서 일차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막연한 선호미래를 논의하기보다 선호미래가 형성될 조건과 환경을 연구하면서 선호미래 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미래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가치로는 포용, 순환, 회복, 친환경, 고효율, 균형, 협력, 안전, 상생, 개혁과 개방, 사회안전망 확충, 기술혁신, 연대, 통합 등이었다. 이 가치들은 분야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선호미래는 분야의 동인으로 형성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동인과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는 이종간의 협업을 통해 선호미래가 달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국민 선호 정책미래 연구의 과제

응답자들은 과거에 경험한 변화 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크기/정도가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환경,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인구/사회, 사람(인간관계), 정치/행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북한, 과학기술,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반적으로 20대의 미래인식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50~60대는 대부분 미래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미래정책 중, 응답자의 60% 이상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 정책 선호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된 정책은 우주개발, 식량자원정책, 안락사, 인간존엄과 생명기술,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공지능 의사결정, 인공지능 노동정책 방향 등 총 9개였다. 정치갈등, 빅데이터의 활용, 가족제도, 지방분권 정책은 선호에 차이는 보였으나 어느 한 정책이 60% 이상의 지지는 얻지 못하였다. 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환경정책은 정책 간 선호도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민정책은 유일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선호가 엇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미래정책 연구는 2018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별, 주제별로 첨예하게 엇갈린 미래정책에 대해 2019년 초점집중인터뷰(FGI)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을 파악했다면,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왜 그 미래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생활세계에서 맞닥드리고 있는 미래 위험과 기회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5. 결론

2018년 수행한 국민선호미래연구는 2019년까지 지속된다. 올해 연구는 주로 선호미래에 대한 개념, 기본 문헌 연구, 선호미래의 구성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선호미래의 근간이 되는 가치연구도 병행했다. 한 사회가 지지하는 가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 과학기술적, 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선호미래의 뼈대를 구성한다.

2019년 본격적으로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선호미래를 파악하기 전, 우리는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보았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협업은 선호미래를 도출하고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시민들과 선호미래를 논의할 때 사용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고려하는 선호미래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

선호미래상의 파악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는 미래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국민선호미래연구는 선호미래의 도출에서 끝나지 않는다. 선호미래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그 정책들 중 국민의 선호확인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시 국민의 생각을 물어야 한다. 이런 시도는 과거에 찾기 힘든 시도였으며, 우리 연구가 미래연구에 기여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정책이 실현되는 국민의 생활세계를 가정한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판단이 애매할 때는 국민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래정책 연구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언론자료

1 문헌자료

- 과학기술부 (2003).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1982-2001』.
- 과학기술부 (2008). 『과학기술 40년사』.
- 김덕현 (1999). “유교의 자연관과 퇴계의 산림계거”. 문화역사지리 11, pp.33-53.
-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2005). 에드워드 렐프 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김우재 (2018). 『플라이룸: 초파리, 사회 그리고 두 생물학』, 김영사.
- 김찬현 (2018).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세기의 숙제’: 과학기술과 헌법”, 『과학잡지 에 피』 3 (2018): 214-228.
- 박범순·우태민·신유정 (2016). 『사회 속의 기초과학: 기초과학연구원과 새로운 지식생 태계』, 한울아카데미.
- 박성원, 진설아, 황윤하, 조규진, 송민 (2015). 『한국인의 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 적응력 조사(3차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종훈·서신혜 역 (2005). 『만하몽유록』,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백승중(2011).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 백승중(2018). “신사와 선비”, 사우.
- 서신혜 (2010).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 서정은 역 (2009). 그레이버, 데이비드 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그린비.
- 이상주 (1986).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해방 40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pp. 1-36.
- 이종은 외(1996).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학논집 2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정현주 역 (2015). 매시 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병두 역 (1983). 데이비드 하비 저,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 최병두, 이영아, 최영래, 최영진, 황성원 역 (2017). 스미스 저,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한울
- 하기락 역 (1983). 크로포트킨 저, 『전원 공장 작업장』. 형설출판사
- 한국지리연구회 역 (2000). 존스톤, 그레고리, 스미스 저, 『현대인문지리학사전』. 한울
- 廣重徹 (1973). 『科學の社會史』 (中央公論社).
- Aligica, P. D., Weinstein, K.R., (2009). The essential Herman Kahn in defense of thinking. Lexington books. USA.
- Allport, Gordon W. & Vernon, Philip E. (1931). A Study of Values: Manual of directions, Houghton Mifflin Company.
- Allport, Gordon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Oxford: Holt, Reinhart & Winston.
- Amara, R. (1981). The futures field: Searching for definitions and boundaries. The Futurist, 15(1), 25-29.
- Anderson, Ben. (2010). Preemption, precaution, preparedness: Anticipatory action and future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6), 777-798
- Bardi, Anat & Schwartz, Shalom H. (2003). "Values and Behavior: Strength and Structure of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0), pp. 1207-1220.
- Bargh, J. A., Morsella, E., (2008). The unconscious mind. Perspectives on Pshchological Science. 3(1), 73-79.
- Bell, Wendell (1977). History, Purposes, and Knowledge in Foundations of Futures Studies (Vol. 1), Transaction Publishers.

- Blei, M. D., Ng, Y. A. & Jordan, I. M.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 993-1022.
- Boone, W., Piccinini G., (2015). The Cognitive Neuroscience Revolution. Synthesis 193(5), 1509-1534.
- Bruce Ackerman, (1993). We the People vol. 1 - Found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el, A. D., McCabe, D. P., Roediger, H. L., Heitman J. L., (2007). The darkside of expertise. Psychological Science. 18(1), 3-5.
- Chaio, J. Y., (2018). Developmental aspects in cultural neuroscience. Developmental review.
- Daniel J. Kevles (1990). "Principles and Politics in Federal R&D Policy, 1945-1990: An Appreciation of the Bush Report," Science—the Endless Frontier: A Report to the President on a Program for Postwar Scientific Research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Dator, J., (2009). Alternative Futures at the Manoa School. Journal of Futures Studies. 14(2), 1-18.
- David Cahan, (1989). An Institute for an Empire: The Physikalisch-Technische Reichsanstalt, 1871-19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 F (1979). Noble, America by Design: Science,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d Nye, (2006) Technology Matters: Questions to Live With (MIT Press)
- De Jouvenal, B. (1967). The Art of Conjecture,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Nikita Lary. New York: Basic Books.
- Donald Kommers. (2012).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uke University Press(3rd edition).

- Eagly, Alice H., & Chaiken, Shelly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 Fazio, Russell H. (1986). "How do attitudes guide behavior,"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1*, New York: Guilford Press.
- Feldman, Stanley (2003). "Values,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Attitude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eds. D. O. Sears, L. Huddy, & R. Jerv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cher, R., Vauclair, C. M., Fontaine, J. R., & Schwartz, S. H. (2010). "Are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lue Structures Different? Testing Hofstede's Legacy with the Schwartz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2), pp. 135-151.
- Frensch, P. A., Sternberg, R. J., (1989). Expertise and intelligent thinking: When is it worse to know better?. In R. J. Sternberg(Ed.),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Vol. 5(pp 157-18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eorge Wise, Willis R. Whitney(1985). *General Electric and the Origins of U.S. Industrial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Press).
- Glenberg, A. M., Epstein, W., (1987). Inexpert calibration of comprehension. *Memory & Cognition*. 15(1), 84-93.
- Greenwald, Anthony G., & Mahzarin R. Banaji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1), pp. 4-27.
- Greenwald, Anthony G., Debbie E. McGhee, & Jordan LK Schwartz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pp. 1464-1480

- Hinds, P. J., (1999). The curse of expertise: The effects of expertise and debiasing methods on prediction of novice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5(2), 205-221.
- Hiromi Mizuno, (2009). *Science for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n, R., Muttarak, R. (2017). Learn from the Past, Prepare for the Future: Impact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n Disaster Preparednes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orld Development*, 96, 32-51
- Hofstede, Geert (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8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pp. 991-1017.
- _____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eds. Harrison, L. E., & Huntington, S. P., Basic books.
- Inglehart, Ronald, & Paul R. Abramson (1999). "Measuring postmateri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pp. 665-677.
- Ishii, K., Kim, H. S., Sasaki, J. Y., Shinada, M., Kusumi I., (2014). Culture modulates sensitivity to the disappearance of facial expressions associated with serotonin transporter polymorphism(5-HTTLPR). *Culture and Brain*. 2(1), 72-88.
- John P. Dimoia, (2012).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6(1) (2012): 17-40.
- Kim, H. S., Sherman, D. K., Taylor, S. E., Sasaki, J. Y., Chu, T. Q., Ryu. C., Suh, E. M., Xu, J., (2010). Culture, serotonin receptor polymorphism and locus of atten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5(2-3,1), 212-218.
- Kitayama, S., Park, H., (2007). Cultural Shaping of Self, Emotion, and Well-Being: How Does ti Work? Social and Personality Pshchology. 1(1), 202-222.
- Kitayama, S., Park, J., (2010). Cultural neuroscience of the self: understanding the social grounding of the brai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5, 111-129.
- Leonard Reich (1985). The Making of American Industrial Research: Science and Business at GE and Bell, 1987-19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eberman, M. D., Gaunt, R., Gilbert, D. T., Trope, Y., (2002). Reflection and Reflexion:A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Approach to Attributional Inference. In: Zanna M, editor. Advances in Experimetal Social Pshchology. New York, NY:Academic Press 199-242.
- Livingstone, David W. (1983). Class Ideologies & Educational Futures, The Falmer Press.
- Marchant, G., Robinson, J., Anderson, U., Schadewald, M., (1991). Analogical transfer and expertise in legal reason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48(2), 272-290.
- Markus, H. R.,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98(2), 224-253.
- Michael Aaron Dennis (2004). “Reconstructing Sociotechnical Order: Vannevar

- Bush and US Science Policy,” in Sheila Jasanoff ed.,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Routledge).
- Miller, Riel. (2015). Learning, the Future, and Complexity. An Essay on the Emergence of Futures Literac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0(4), pp.513-523
- Nandy, Ashis, (1996), Bearing Witness to the Future, *Futures*, 28(6-7), 636-639.
- Nandy, Ashis, (2006), Visions that Do not Reproduce Another Nightmare, *Journal of Futures Studies*, 10(3), 89-92.
- Nisbett, R. E., Peng, K., Choi, I.,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Park, S.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s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 Parliamentary Committee on HRD (1999). 81st Report On Value-Based Education, Government of India.
- Penn, Charles R. (2011). Future perfect? Improving preparednes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influenza A (H1N1) 2009 pandemic.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9(7), pp.470
- Polak, F. (1973). *The Image of the Future*, Translated by Elise Boulding. Amsterdam, London, New York: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Poli, Roberto. (2015). Social foresight. *On the Horizon*, 23(2), pp.85-99
- Rank, J., Unger, B., Gemünden, H. (2015). Preparedness for the future in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The roles of proactiveness, riskiness and willingness to cannibaliz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3(8), 1730-1743
- Rokeach, Milton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 Scheier, Michael F., Weintraub, Jagdish Kumari & Charles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257-64.
- Schore, A. D., (2011). The Right Brain Implicit Self Lies at the Core of Psychoanalysis. *Psychoanalytic Dialogues*. 21(1), 75-100.
- Schwartz, Shalom H.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 pp. 137-182.
- _____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1.
- Schwartz, Shalom H., and Wolfgang Bilsky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pp. 878-891
- Sortheix, Florencia M., and Shalom H. Schwartz (2017). "Values that Underlie and Undermine Well-Being: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1(2) pp. 187-201.
- Spranger, Eduard (1914). *Lebensformen*, Niemeyer; trans. P. J. W. Pigors (1928). *Types of Men*, G. E. Stechert Company.
- Squire, L. R., (2009). Memory and Brain System: 1969-2009.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9(41), 12711-12716.
- Telzer, E. M., Masten, C. L., Berkman, E. T., Lieberman, M. D., Fuligni, A. J., (2010). Gaining while giving: An fMRI study of the rewards of family assistance among White and Latino youth. *Social Neuroscience*. 5(5-6), 508-518.
- Torner J., Montero B. G., Moran. A., (2015). The perils of Automatic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9(4), 431-442.

- Town of Canmore. (2006). Mining the Future: A Vision for Canmore. Approved by Council (Resolution #457-2006)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Westview Press.
- Vannevar Bush (1945). Science—the Endless Frontier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ng, Q., Shao, Y., Li, Y. J., (2010). "My way or Mom's way?" The bilingual and Bicultural Self in Hong Kong 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81(2), 555-567.
- Wasserman, S., & Fr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ey, J., (1998). Expertise as mental set: the effects of domain knowledge in creative problem solving. *Memory & Cognition*. 26(4), 716-730.
- Williams, L. E., Huang. J. Y., Bargh, J. A., (2009). The scaffolded mind: Higher mental processes are grounded in early experience of the physical worl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7) 1257-1267.
- Wood, C. W., Christakis, A. N. (1984). A Methodology for Conducting Futures-Oriented Workshop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6, 281-297.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u, Y., Han, S., (2008). Cultural Diffrence in the Self: From Philosophy t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5), 1799-1811.

2 언론자료

- 노컷뉴스. “한·중·일 기독교청년들이 그리는 동아시아 평화” 2019. 2. 14., <https://www.nocutnews.co.kr/news/5103889>
- 동아일보. “출생아 수 30년새 반토막 ‘인구위기’” 2018.3.1., <http://news.donga.com/Issue/List/030000000000094/3/030000000000094/20180228/88909486/1>
- 매일경제. “4년 더 앞당겨진 인구절벽...성장잠재력 추락, 암울해진 미래” 2018.2.2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37576>
- 방송기술저널.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 2019.1.17., <http://journal.kobeta.com/%EA%B3%BC%EA%B8%B0%EC%A0%95%ED%86%B5%EB%B6%80-ai-%ED%99%9C%EC%84%B1%ED%99%94/>
- 연합뉴스. “2020년 인구재난 시작...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2015.10.18.,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6138500017>
- 연합뉴스. “빅데이터 결합해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모델 개발” 2018.10.18., <https://m.yna.co.kr/comment?cid=AKR20181018061500001>
- 정경NEWS. “충격! 한국, 인구감소로 국가소멸 순위 세계 1위 2020년 인구절벽 맞는 대한민국, 살길은 없는가?” 2015.7.6.,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99>
- 조선일보. “이토록 심각했다...인구절벽의 현장” 2017.6.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1/2017062100893.html
- 중앙일보. “미래부, 교통·의료 사회현안 빅데이터로 해결한다” 2017.3.14., <https://news.join.com/article/21367709>
- 한겨레신문, “저출산, 총체적 국가실패의 산 교과서” 2018.08.1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7601.html>

- 한겨레신문. “‘복지도 투자’ 성장주의 담론의 벽을 넘자” 2007.3.6., <http://www.hani.co.kr/arti/PRINT/194694.html>
- 한겨레신문. “경제성장의 동력이 희망이다” 2007.3.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4463.html
- 한겨레신문. “반세계화 연대, 생태·평화로 묶자” 2007.3.5., <http://www.hani.co.kr/arti/PRINT/194321.html>
- 한겨레신문. “연대바탕 ‘복지동맹’ 저성장 기조 바꾸자” 2007.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4924.html
- 한겨레신문. “혁신·대외개방은 인정, 연대로 양극화 메우자” 2007.3.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95381.html
- 한국일보. “「김호기의 100년에서 100년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로 낡은 보수 구해내다” 2018.3.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50488519644>
- 한국일보. “본격화한 ‘인구절벽’ 현상, 국가재난 차원으로 다뤄야” 2018.8.29.,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81544052191>
- SKT Insight.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 사무실은 필요 없다?” 2017.7.25., <https://www.sktinsight.com/92385>

국민선호미래 연구

박성원·김유빈·정영훈·민보경·송지은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www.nafi.re.kr



9 791196 707262

ISBN 979-11-967072-6-2 93300

정가 6,500원